

기 조 강 연

#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

임 희 섭 (고려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

임 희 섭 (고려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 I. 세계화의 도전과 응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도전을 대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와 같은 담담한 반응의 배후에는 한국인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20세기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는 자신감과,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도전에 대해서도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하고 성공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 암묵적인 낙관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이 20세기 전반에 경험했던 제국주의시대의 식민지적 수탈과, 20세기 중반에 경험했던 냉전시대 분단국으로서의 민족상잔(民族相殘)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20세기의 시대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낸 모범생으로서의 자아상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국민들의 자신감이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정부로 하여금 한국을 세계 중심 국가의 하나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열망적’ 세계화의 추진을 선언하게 한 배경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박길성 2003, 129-139)

박길성은 김영삼정부가 추진한 세계화는 그 내용이 종래의 ‘국제화’나 ‘선진화’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열망적’ 세계화라고 불렀다. 그와 같은 실체 없는 구호적 세계화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케 함으로써 1997년의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를 자초했다고 비판되고 있다. 박길성은 또한 IMF 관리체제 하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가 제시한 처방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통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김대중정부의 세계화를 ‘강요된’ 세계화였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세계화는 이제

그와 같은 열망적 세계화와 강요된 세계화를 벗어나 ‘규범적’ 세계화의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세계화의 규범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세계화의 원인과 성격, 결과와 대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낙관적인 견해는 ‘기술 결정론적’ 세계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기술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본과 시장을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시키게 만든 텔레컴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그러한 기술발달에 기초한 현대사회의 정보화혁명에 의해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세계화는 그 누구도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전 세계 인류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세계화에 대한 가장 단순한 비관적 견해는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적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최종단계인 세계적 자본주의의 실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화의 결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반세계화(anti-globalism)를 주창한다.

그러나 오늘날 보다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은 극단적인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빠지기 보다는 ‘대안적’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말의 머리글자를 딴 TINA의 논리에서 벗어나(Bauman 2000) 세계화과정에서의 국가간, 또는 국내에서의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범을 제도화해 나아가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안적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세계화 역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한국 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착실한 준비를 거친 후에 국내 시장의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세계화정책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된 세계화를 추진해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한 한국사회의 세계화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국사회 내부에 크고 작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요인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

등의 현상과 갈등의 극복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야 할 사회통합의 과제들을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의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층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사회에는 상대적으로 갈등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기 쉬운 인종갈등, 민족갈등, 종교갈등과 같은 원초적 집단간의 갈등이나 근본주의적 종교집단간의 갈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때 계층간의 갈등이 계급갈등의 형태로 이념화하고 급진화될 가능성과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이 때때로 폭력화할 가능성, 지역간의 불평등이나 차별 등이 원초적 지역감정으로 발전될 가능성, 그리고 새롭게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이 잠재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긴장의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그리고 외국인 소수집단의 문제들을 그 원인과 특성 및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검토해 보겠다.

### 1. 계층갈등

홍두승의 한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초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중상계급 0.9%, 신중간계급 6.6%, 구중간계급 13.0%, 독립자영농 40.0%, 하층계급(근로계급, 도시하류층, 농촌하류층 포함) 39.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초에 신구중간계급을 합한 중간계급의 비중은 약 20%였다고 할 수 있다.(홍두승 1982) 이와 같은 중간계급의 비중은 20년 후인 1980년에 이르러 약 40%로 두 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KDI의 분석에 의하면 1965년에 전체 인구 중 절대빈곤인구의 비중이 41%였으나 1980년에는 10%이하로 감소하였다.(서상목 외 1981)

이와 같은 중간계급의 성장과 빈곤층의 감소는 1960-8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된 산

업화와 경제성장의 결과로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된데 따른 것이었다. 이 기간동안에 영세한 농어업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도시에서의 노동자, 자영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간동안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성과는 성장제일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한 노동자들과 저농산물가격 정책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감내한 농민들의 희생위에서 거두어 낸 성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근로자와 농민계층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sense of relative deprivation)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율이 높아지면서 노동조합운동이 강화되고 노사갈등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임희섭 1994) 특히 노사분규는 4.19, 10.26, 6.29 등과 같은 정치적 변혁기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사갈등의 요인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억제되어 오다가 정치적 변혁의 시기에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기회에 한꺼번에 폭발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의 계층갈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 그리고 경제단체나 경영자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합법적인 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의 과정과 이익집단들의 상충되는 이익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통합(interest integration)해 나아가는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사회에서 계층간의 이익갈등을 민주적으로 해소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의 억압’보다는 ‘갈등의 제도화’가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래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갈등의 잠재적, 현재적 요인들이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어 왔으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이익집단들은 노동자나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하달하거나 추종하는 관변적인 직능단체로서의 기능에 더 충실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와 같은 조건에서는 억압된 갈등의 요인들이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정치적 변혁기에 과격한 집단행동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급진화하여 계급운동이나 혁명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진이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 새로운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빈곤층인구는 284만 가구, 869만 3000명으로, 빈곤층인구의 비율은 18%로 집계되었다.(동아일보 06/9/26) 이 비율은 2003년에 비해 1.1% 포인트, 2004년에 비해 0.6% 포인

트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서 빈곤층이란 OECD 기준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간 소득 중간 값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말한다. 2005년의 월평균 소득의 중위치는 254만 5000원으로 그 50%인 127만 2500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가진 가구의 가구원들이 빈곤층 인구이다.)

같은 자료에서 월평균 소득의 중간 값의 70%이상 150% 미만인 중산층의 비중은 2004년의 48.5%에서 2005년에는 46.1%로 1.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2005년 전국 가구 중 상위 20% 소득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20%계층의 7.56배로 2004년의 7.35배보다 0.21% 포인트 늘어났다.(중앙일보 06/9/22) 이와 같은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어느 정도로 한국사회를 양극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중산층의 감소와 분배구조의 악화가 반드시 세계화정책의 결과 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불경기나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연유한 것인지는 좀 더 장기적인 변동의 추세를 분석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는 전체가구의 거의 절반이 중산층에 속하는 사회이고, 전체 인구의 50-60%가 자신을 중산층에 귀속시키는 중산층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의 몰락과 빈민화로 이어지는 양극화(polarization)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한국사회가 첨예한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이나 계급간의 적대의식(class antagonism)이 확산되는 계급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을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범화를 통해 극복해 나아가는 한편으로,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이익표출과 이익통합의 민주적 정치과정의 제도화를 통해 계층갈등의 요인들을 완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선택해야 할 계층갈등해소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념갈등

해방 후 남북의 분단과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한 정치체제의 출범은 한반도에 격렬한 이념적 갈등을 일으켰고, 그와 같은 이념적 갈등은 결국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전쟁은 휴전 후의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

의 정치체제를 수호한 남한의 경우, 전쟁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은 남아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다시 좌파적 사회이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10월 유신 이후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이른바 ‘민중운동’이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중운동세력은 민주화운동의 기치 하에서 자유주의자들의 민주화운동세력과 연합전선을 펼쳐 나아가면서 점차로 ‘인민민주주의’(PD) 계열의 계급운동과 ‘민족해방전선’(NL) 계열의 반외세, 반미운동을 전개하면서 좌파적 이념 활동의 ‘합법적 공간’을 넓혀 나아갔다.

1992년의 문민정부와 1997년의 국민의정부, 그리고 2002년의 참여정부로 이어진 민주화시기에는 이른바 ‘주사파’ 등 극단적인 친북세력을 제외한 온건한 민중운동 세력들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주의 사회의 붕괴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은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 보수’, ‘온건 보수’, ‘온건 진보’, ‘급진적 진보’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가운데 철저한 반공과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온건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분배보다는 성장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요구한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주의적인 대북정책 또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등을 지지한다. 온건한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적 지향으로 삼고 분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가운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며,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의 개방 유도 또는 남북한의 평화적인 공존과 같은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끝으로 급진적 진보주의자들은 민중민주주의, 분배 지향적 경제정책, 외세를 배제하는 자주적 민족통일, 반세계화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이러한 이념적 지향들은 점차로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적인 진보 지식인들에 의해 서로 수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최근 중도적인 진보진영 지식인들이 모인 <민주정부의 위기와 진보개혁세력의 진로>라는 주제를 내 건 한 세미나에서 임혁백 <좋은 정책 포럼> 공동대표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지향으로 (1) 세계화를 긍정하되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공정한 세계화; (2) 시장경제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그 불평등성을 보완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3) 통일지상주의를 배격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지속가능한 평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승욱 <시민발전> 대표는 현재 진

보운동진영의 문제점으로 (1) 집단이기주의의 상징인 노동운동; (2) 낡고 늙은 운동으로 비판받는 농민운동; (3) 정치과잉과 백화점식 운동이라고 비판받는 시민운동 등이 라고 지적하고, 진보진영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진보이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중앙일보 06/8/8)

뉴 라이트 등 온건한 보수주의자들도 60년대 이후에 거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둔 한국의 보수진영은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누적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개혁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개혁적’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심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안보정책 등에서 ‘정책지향의 차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가운데, 경제정책에서는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대북정책에서는 평화공존과 자주통일을 지향하고, 국방정책에서는 한미동맹보다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 다소 ‘좌편향적인’ 정책지향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선행시키지 않은 좌편향적 소수파의 정책지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드정치를 펼친 결과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보수 지식인과 진보 지식인, 보수적 시민단체들과 진보적 시민단체들 사이에 필요 이상의 대립과 분열을 확대 재생산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적 갈등은 경제정책, 대북정책, 안보정책 등의 중요한 정책들이 이념적 지향보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결정되고 추진되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국가정책들은 공론의 장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대화 및 설득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와 같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들을 정부가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불필요한 이념적 분열과 대립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3. 지역갈등

한국사회에서 한때 “망국병”이라고까지 불렸던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역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지역주의적 선거전략과 그 결과로서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 때문이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영호남간의 지역주의에 불을 붙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영남출신 대통령에 의한 장기집권 기간동안의 지역편중적인, 혹은 지역차별적인 지역개발정책과 인사정책 등에 대한 다른 지역, 특히 호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역감정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차별을 둘러싼 피해의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각급 선거과정에서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역시 호남을 배제한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도 영남을 배제한 호남과 충청간의 지역연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역시 경북을 배제한 부산, 경남 지역과 호남지역 주민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의해 집권이 가능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007년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계속될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선거 전략이 또 다시 동원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전 인구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지역 인구는 아직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호남지역 인구의 비중은 약 10%, 충청지역 인구의 비중도 역시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주민들도 대부분 그 출신지역은 영남, 호남, 충청 등으로 출신지별 지역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출신 주민들의 지역의식이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적 지역주의의 극복은 수도권 거주자들의 ‘탈지역화’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지역갈등의 문제는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개발정책과 인사정책,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에 의한 탈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의해서만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계몽적 활동도 지역갈등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세대갈등

현대의 한국인들은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과 정부수립, 한국전쟁, 4.19, 5.16, 6.29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국민국가 형성기,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 정보화와 세계화시대 등을 살아 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각 세대들은 각각의 시대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서로 다른 가치지향과 생활양식(life style)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구분은 (1) ‘해방과 한국전쟁, 4.19, 5.16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에 참여했던’ 전후세대(70-80대); (2) ‘196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산업화세대’(50-60세대); (3) ‘산업화와 유신이후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치열한 대학입시와 취업경쟁을 뚫고 성공의 길을 개척해야 했던’ 베이비 붐 세대(40대 중반-50대 후반); (4)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정치-사회의식과 현실참여의식이 높음’ 386세대(30대와 40대 초반); (5) ‘풍요의 세대로서 정치보다는 소비문화, 대중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PC와 휴대폰 등으로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세대(20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길성, 2004)

이와 같은 각 세대들은 가치지향이나 사회의식,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그와 같은 세대차이가 곧 세대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대차이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세대차이는 가정이나 직장 등과 같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개인적 수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굳이 세대라고 하는 사회적 범주들 간의 집합적인 세대갈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산업화과정에서의 공적은 인정하되,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후세대에 물려준 책임을 져야 하고, 기존질서의 비민주성과 권위주의, 불평등과 도덕적 해이 등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 개혁되어야 할 구세대의 유산’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그와 같은 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세대교체(인적 청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20대의 N세대는 386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며, 감성에 민감해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세대차이는 세대갈등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의 과정에서의 가벼운 ‘변증법적(?)’ 긴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5. 새로운 소수집단으로서의 이주외국인들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고 취업중인 외국인은 13만 3천 5백명이다.(노동부 2006/8, <http://www.molab.go.kr>) 그러나 공식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합법적인 체류자의 수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합법적, 불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하던 기업의 부도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의 경우 송출업체에 예치했던 예치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악덕 고용주가 그들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거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입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위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한국사회에서 그들이 새로운 소수집단(minority group)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외국인, 특히 동남아 지역출신의 신부와 결혼하는 한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국제결혼의 비율은 13.6%이며, 농어촌의 경우는 무려 35.9%에 달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결혼한 농림어업종사자 남성 8,027명중 2,885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조은 2006, 1)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농어촌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온다. 자신의 결혼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 수입 신부들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리언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차이,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차별과 편견 등으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

며, 그들의 자녀들도 한국인과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를 경우에는 한국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이와 같은 국제결혼의 수와 비율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제 세계화시대의 한국인들은 스스로 단일민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국제화된 다민족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나아가야 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살기 좋은 선진사회로 꾸며 나아가는 성숙한 세계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II.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적 갈등 현상들은 대부분 산업화시대의 거시적 사회변동이 가져 온 사회적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사회에서와는 다른 다양한 계층으로의 계층분화가 일어났으며, 분화된 계층들 간의 이익갈등이 때로는 계급갈등의 형태로 때로는 이념갈등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지역갈등의 문제도 사실상 산업화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기회의 배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 된데서 비롯된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대차이 또는 세대갈등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에서 각 세대가 담당하고 경험했던 시대적 역할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었다.

이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그 영향력을 더욱 증대해 나아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기술과 지식의 발전이 가져 온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통하여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George & Wilding 2002) 이와 같은 세계화의 역사는 20세기, 16세기, 혹은 심지어 고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 진 지난 20여 년 동안에 세계화는 더욱 빠르게 본격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거시적인 사회변동과정으로서의 세계화는 과거에 산업화가 그랬듯이 현대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요인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로 세계화는 국가간과 국가내의 계층간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의 증가는 특히 급진적인 유형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UNDP보고서가 언급했듯이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인 소수공동체에 대한 폭동과 약탈은 경제적

위기시에 민족집단간 혹은 빈부간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긴장이 폭력적인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UNDP, 1999, p.36)

둘째로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세계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 개인들을 연대시키고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시키며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지역공동체와 국가공동체를 약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계 속에서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피상적으로만 연결되는 점과 같은 존재가 됨으로써, 원자화된 전자적 대중의 시대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인 것이다.

세계화는 어느 정도는 탈국가화를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화과정에서 국민국가들은 특히 경제정책의 결정에서 그 역할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고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분명히 국민국가들의 권력은 위로는 초국가적 기구들(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을 향해, 아래로는 탈중심화를 통해 지방으로 혹은 시민사회로 이동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세계화가 개인화를 촉진하여 세계와 개인사이의 중간적인 공동체를 약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기제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셋째로 세계화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들 간의 접촉과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의 시대를 열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맥도널드나 코카 콜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되는 세계문화(global culture)의 형성과 확산을 가져 올 것이고, 선진국들의 문화산업이 만들어 낸 문화상품들이 제3세계의 문화산업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제3세계국민들의 문화정체성위기(crisis of cultural identity)를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지역적, 영토적 경계를 두고 각 각의 문화적 보편성을 주장해 왔던 기독교, 회교, 불교, 또는 유교등과 같은 세계종교(world religion)와 그와 같은 종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들이 세계화된 세계에서 '문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기도 하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건물을 폭파시킨 9.11사건은 세계화된 세계 속에서 벌어진 기독교와 이슬람문명간의 충돌이 빚어낸 세계적 수준의 사회통합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히 세계화는 과거에 산업화가 그랬던 것처럼, 인류에게 새로운 번영과 발전을 향한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은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요인을 새롭게 발생시키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거시적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긴장을 '분열과 해체를 가져오는 파괴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대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긴장과 갈등’으로 현명하게 관리해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동시대인들의 몫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박길성, 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세대 지형, 아시아재단, 한미협회 공동주최, 한국의 신세대와 대외관계의 인식, 심포지엄, 2004년 4월 21일, 서울, 신라호텔
- 서상목 외, 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
- 조 은, 2006, 오늘의 한국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아산사회복지재단, 오늘의 한국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심포지엄, 2006년 8월 24일, 서울, 아산교육연구원
- 홍두승, 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 Bauman, Zygmunt, 2000, 이승협 역, “최전선의 민주주의,” 권터 글라스 외,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6, 평사리, p.46
- George, Vic & Paul Wilding, 2002, 김영화 외 역, 2004, 세계화와 인간복지, 삼우사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1999,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제 1 주제  
이념갈등의 현황과 국민통합의 과제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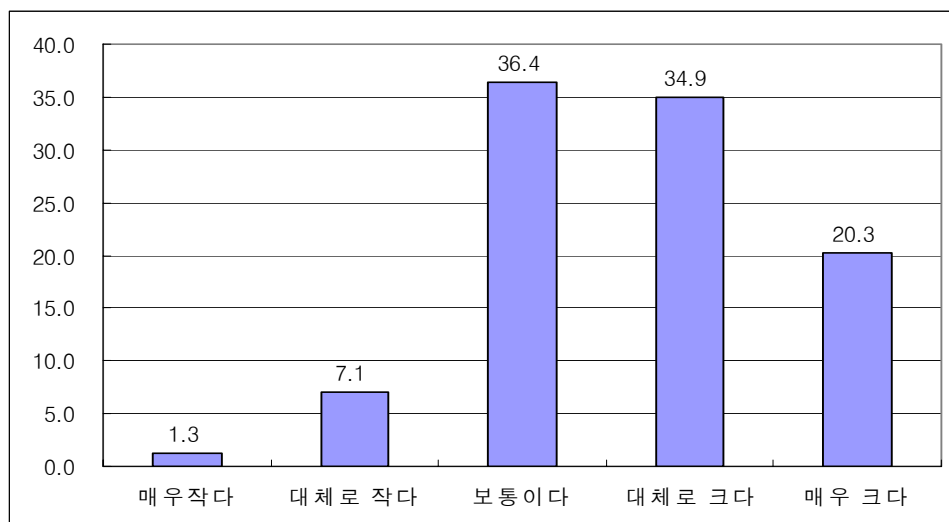
한 준 (연세대) · 설 동 훈 (전북대)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구조

한 준 (연세대) · 설 동 훈 (전북대)

##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이념은 중요한 사회적 균열(cleavage)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강원택, 1998, 2002; 김재한, 1996; 이내영, 2002). 지역갈등과 노사갈등, 그리고 빈부갈등에 못 지않게 이념갈등이 이제 현실적인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2006년 8월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사회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념성향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이 인식하는 이념갈등 정도의 분포이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 이념간의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로 작다고 응답한 8.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1>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의 정도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이념갈등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왔던 다양한 이념적 지향들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분출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동안 압축적(compressed), 돌진적(rushed) 방식으로 수행한 근대화 및 탈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과 모순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념갈등이 갈등의 현저한 축으로 등장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념갈등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20세기 중반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소모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통합의 필요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그러하듯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갈등의 해결이 어렵다. 갈등의 양상과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해서 갈등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면과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면을 구분한 연후에 우리는 갈등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현황과 구조에 대한 분석의 기초적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념 분화의 양상과 언론에 나타난 정치적, 사회적 이념 분화 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과 언론에서 발견되는 이념적 분포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동시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집합적 의지를 여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은 여론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이자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이 여론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언론에서 나타나는 의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최근 언론권력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언론이 이념갈등과 관련하여 어떤 어젠더 설정의 역할이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근래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논쟁을 불러왔다고 보이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주요 일간지 칼럼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 양상을 살펴본다. 각 쟁점별로 이념적 성향을 담고 있는 개념들의 빈도와 관계를 통해 개념들 간, 언론사 간의 이념적 분포를 측정한다. 그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 여론과의 관련성 즉, 언론의 이념 분화가 일반 국민들의 이념적 분포에 비해 과대 혹은 과소 대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이념 및 의식성향을 묻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의 패턴으로부터 이념지수를 구성하고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적 구분에 따라서 이들 쟁점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신문의 칼럼에 대한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것이다.

## II. 자료

본 연구는 크게 두 종류의 자료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에 걸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에서 64세의 남녀 1200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사는 한국갤럽에서 담당하였다. 설문문항은 이념척도 지수 구성을 위한 질문들과, 그밖에 사회, 경제,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들은 주로 대외개방성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극단주의에 대한 포용(tolerance), 젠더와 관련된 쟁점들이다. 아울러 설문에는 탈물질주의 가치, 각종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참여를 묻는 질문도 포함된다.

언론의 이념적 분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주요 중앙 일간지들의 칼럼을 사용하였다. 중앙 일간지의 칼럼들은 일반 기사와는 달리 주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명한 찬반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이념적 분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일간지가 직접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는 사설과는 다르게 각 신문사들이 한 쟁점에 대해 지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이념적 태도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이념적 갈등을 반영하는 쟁점으로는 이라크 파병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고교 평준화 존폐 논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네 쟁점은 2003년~2005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이념적 갈등을 뚜렷이 나타내주었던 것들로 다른 쟁점들에 비해 필자들의 정책적, 이념적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이념의 스펙트럼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단선적인 차원으로 존재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분포는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정치적인 측면이 강한 이라크 파병 및 국가보안법 폐지 쟁점과 함께 사회경제적 차원의 이념적 태도를 반영하는 고교 평준화 및 부동산 정책 쟁점을 동시에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진보-보수의 분화를 주로 반영한다고 본다면, 이라크 파병 논란은 그와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진보-보수 입장까지 담고 있다

는 점에서 진보-보수와 함께 로컬-글로벌 차원의 맥락까지 고려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고교 평준화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시각을,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기본적 태도를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쟁점들이라 할 수 있다.

쟁점별 분석 대상 칼럼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칼럼 현황

신문사 \ 쟁점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고교 평준화	부동산 정책
경향신문	10	7	-	6
국민일보	4	2	4	3
동아일보	10	5	7	5
매일경제	-	-	-	3
머니투데이	-	-	-	6
문화일보	8	5	5	15
서울신문	6	3	4	3
세계일보	10	1	3	1
조선일보	7	2	11	9
중앙일보	-	-	1	-
파이낸셜뉴스	1	-	1	2
프레시안	1	1	-	1
한겨레신문	11	6	6	1
한국경제	1	-	1	12
한국일보	4	-	7	3
계	73	32	50	70

### III. 분석 방법

#### 1. 이념지수의 구성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네 가지 쟁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념성향간 격차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념성향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으로 나뉜다. 주관적 방법은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 혹은 진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평가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방법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측정의 신뢰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단 개인마다 이념성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관적 편향이 반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여러 문항들에 대해 응답한 패턴을 기초로 해서 이념성향에 대한 다문항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Kerlinger, 1984; Knight, 1999;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 1990; 홍두승·박용치·설동훈·이남영·한준, 2002, 2003).

〈표 2〉 이념 지수 구성을 위해 사용된 문항

A	A에 더 가깝다	다소 A에 가깝다	반반 이다	다소 B에 가깝다	B에 더 가깝다	B
A. 북한의 기본적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무조건 지원은 곤란하다	1 ——— 2 ——— 3 ——— 4 ——— 5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B. 국가보안법은 없애서는 안된다	1 ——— 2 ——— 3 ——— 4 ——— 5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C. 회사 경영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서는 안된다	1 ——— 2 ——— 3 ——— 4 ——— 5					회사 경영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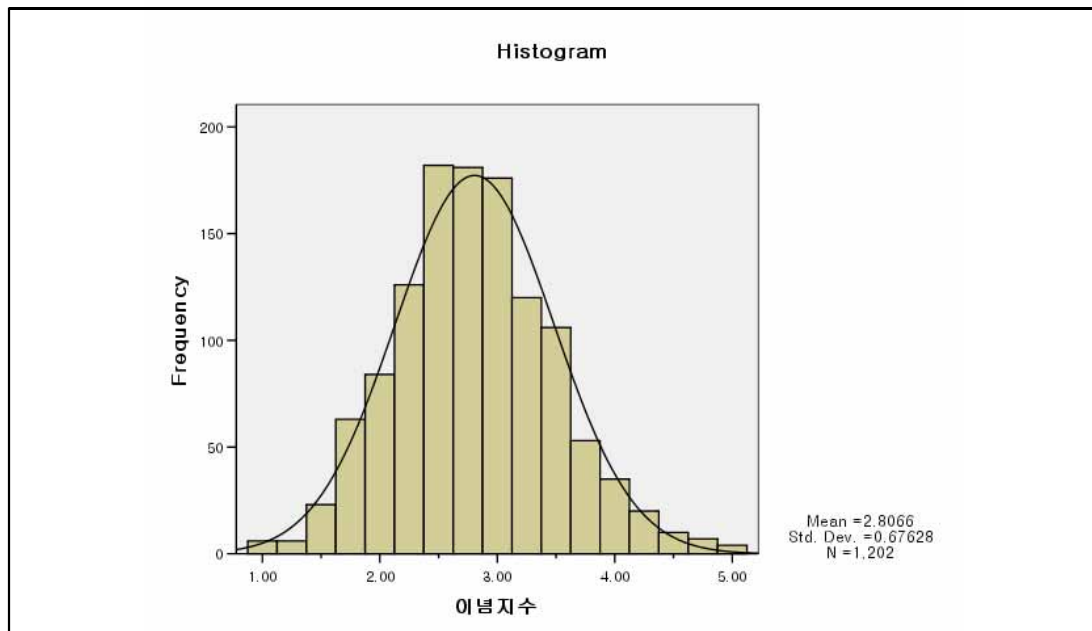
	매우 반대 한다	다소 반대 한다	반반이다	다소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D.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기업가로부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1	2	3	4	5

이념성향 척도 구성을 위해 분석에 포함된 많은 변수들 중에서 위의 <표 2>에 제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들 네 변수는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분산극대화를 위한 직교회전 결과 요인값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이념지수 차원의 분리: 요인분석의 분산극대화 직교회전 결과

	요인	
	요인1(정치)	요인2(사회경제)
북한지원태도	.835	.024
국가보안법태도	.830	.045
열악한 근로자 대우	-.022	.778
회사경영에 근로자 대표 참여	.086	.751

이들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산술평균하여 두 개의 요인차원 별 이념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각 차원은 하나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반공이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축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이념으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시장주의와 평등주의의 축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인의 차원을 한 데 아우른 지수 구성이 필수적인데, 이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옳으나,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두 개의 지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이념지수를 구성하였다. <그림 2>는 이렇게 구성된 이념지수의 분포를 <표 3>은 두 하위차원의 이념지수와 통합 이념지수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2〉 이념지수의 분포

〈표 4〉 이념지수의 구성

(N=1202)

	정치 이념지수	사회경제 이념지수	이념지수
보수(1 이상 2.5 미만)	60.1	7.9	36.7
중도(2.5 이상 3.5 미만)	24.1	31.9	40.8
진보(3.5 이상 5 이하)	15.7	60.2	22.5
계	100.0	100.0	100.0
평균	2.162	3.451	2.807
표준편차	0.997	0.833	0.676

이 표에서 정치적 이념은 1을 가장 보수, 5를 가장 진보라고 할 때 평균이 2.2로 중간값인 3을 기준으로 볼 때 보수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이념은 평균이 3.5로 진보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다. 한편 통합이념지수는 2.8로 약간 보수 쪽에 가깝고, 전반적 이념지수의 분포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8을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가 5점 척도이기 때문에 1, 2를 보수로, 4, 5를 진보로, 3을 중도로 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이념지수의 값은 연속값을 갖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 1에서 2.5까지를 보수로, 2.5에서 3.5까지를 중도로, 3.5에서 5까지를 진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보수는 전체 응답자의 36.7%, 중도는 40.8%, 진보는 22.5%로 나타났다.

## 2.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신문들의 칼럼자료는 내용분석을 통해서 자료화되었다. 내용분석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내용의 기록에 대한 분석으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말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이런 점에서 신문 칼럼이라는 텍스트의 내용분석은 이념적 태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내용분석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을 위한 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다(Babbie, 2002). 분석단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특히 내용분석의 경우에 더욱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분석단위에 따라 그 표집 및 자료 분석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신문사로 설정했다. 각 개별 칼럼별 혹은 칼럼 글쓴이 별로 분석하는 것은 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이념분포의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각 개별 분석단위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크게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신문사를 분석단위로 삼아 어떤 이념적 성향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5〉 쟁점별 신문사 현황

쟁점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고교 평준화	부동산 정책
신문사 수	12	9	11	14

내용 분석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사이의 긴장이 생기기 마련이다. 분석단위인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깊이(즉, 타당도)있는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분석은 현재적 내용(manifest content) 즉,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 내용의 분석과 잠재적 내용(latent content)의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념적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객관적 지표로 선정하여 이 단어들이 각 언론사별로 어떤 빈도로 등장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런 현재적 내용 분석은 단순히 각 쟁점별로 한 신문사의 이념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념적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신문사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이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선정한 단어(개념)들은 쟁점별로 다음과 같다.

〈표 6〉 이념 지표 단어들

쟁점	단어들
이라크 파병	한미, 동맹, 테러, 반미, 안보, 국제사회, 명분, 실리, 월남(베트남), 국론, 평화, 반전, 부시, 석유, 경제, 국익, 재건, 복구
국가보안법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체성, 안보, 안전, 질서, 이적, 헌법, 형법, 민생, 인권, 양심, 민주, 자유, 개정, 폐지, 보수, 진보
고교 평준화	폐지, 경쟁, 자율, 획일, 사교육, 공교육, 서울대, 보완, 지역, 격차, 언론, 평등
부동산 정책	공급, 수요, 규제, 서민, 전세, 시장, 경기, 일관, 환수, 불로소득, 보유세, 거래세, 토지공개념, 다주택, 건설

본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내용분석과는 달리 빈도를 조사한 단어들을 단순히 이념적 범주에 해당 신문사를 위치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지표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수 혹은 진보적 내용이나 함의를 담고 있는 특정 단어가 어떤

신문사의 칼럼에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신문사가 보수나 진보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텍스트 내용의 깊이 있고 신중한 평가 및 분석과 신뢰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재적 내용분석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단어들을 절대적인 단순 지표(index)로 활용했다기보다는 언론(신문사들)의 이념 분포 지도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상대적 단위 자료로 사용했다. 즉, 한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고 있는가를 넘어서 어떤 단어들과 함께 나타났는가(co-appearance)를 함께 고려해 단어들 간의 상대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이념적 분화 지형 속에 각 언론사들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대응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표 7a〉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각 신문사 칼럼별 단어 빈도

	한미	동맹	테러	반미	안보	국제사회	명분	실리	월남(베트남)	국론	평화	반전	부시	석유	경제	국익	재건	복구
경향	9	16	10	10	5	10	17	1	6	6	27	1	7	1	4	19	7	3
국민	2	2	1	0	2	1	9	5	4	4	6	3	3	1	2	9	1	1
동아	11	15	14	1	10	4	19	3	1	6	15	5	4	2	10	12	14	3
문화	15	17	5	3	4	4	7	5	19	1	11	7	10	2	12	13	2	4
서울	8	13	1	1	3	0	12	0	1	1	11	0	1	3	9	12	1	1
세계	20	11	29	5	7	6	12	3	2	3	24	4	9	2	14	10	12	4
조선	16	23	19	3	12	6	13	1	3	1	13	0	9	2	10	10	3	3
프레시안	2	1	0	0	0	0	0	0	0	0	6	0	0	0	0	0	12	1
한겨레	10	10	17	4	3	11	15	3	16	3	11	1	11	2	13	16	4	6
한경	0	0	11	2	0	0	1	0	2	0	2	0	0	2	0	0	0	0
한국	3	4	0	1	0	1	7	1	8	1	2	1	5	1	1	13	3	1
파이낸셜	3	3	2	0	3	0	1	0	3	0	3	0	0	0	4	1	0	0



〈표 7b〉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신문사 칼럼별 단어 빈도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체성	안보	안전	질서	이적	헌법	형법	민생	인권	양심	민주	자유	개정	폐지	보수	진보
경향	2	22	7	8	0	5	13	20	16	0	7	8	39	22	6	32	9	0
국민	2	2	2	6	8	8	0	5	11	2	9	3	19	8	8	26	1	0
동아	1	0	0	7	0	1	1	3	22	0	8	1	5	3	11	49	3	2
문화	7	2	1	11	7	16	1	39	11	1	7	4	3	6	10	18	2	2
서울	0	0	0	6	0	1	1	1	2	0	13	0	2	6	8	17	2	1
세계	1	0	0	1	1	0	0	2	1	0	5	2	2	4	2	6	0	1
조선	4	4	0	3	2	0	0	1	7	0	1	0	0	0	2	6	0	0
프레시안	1	0	1	0	0	1	0	0	0	0	1	10	12	1	2	9	0	1
한겨레	5	5	1	5	4	3	7	3	9	0	11	2	6	8	2	10	3	2

〈표 7c〉 고교 평준화에 대한 각 신문사 칼럼별 단어 빈도

	폐지	경쟁	자율	획일	사교육	공교육	서울대	보완	지역	격차	언론	평등
국민	9	6	2	3	1	0	1	2	6	0	1	9
동아	3	13	1	3	5	4	11	3	4	2	0	6
문화	3	18	3	1	14	7	19	3	6	0	2	12
서울	8	10	1	3	3	7	9	4	3	2	2	10
세계	8	4	2	0	0	9	0	0	11	1	0	10
조선	3	20	5	12	38	28	20	3	32	2	2	23
중앙	0	6	4	1	1	0	0	1	2	0	0	0
한겨레	8	60	0	7	13	20	28	1	9	3	9	18
한경	3	1	0	1	3	2	0	1	4	0	0	4
한국	2	9	2	0	7	5	17	3	27	6	4	7
파이낸셜	0	0	1	0	0	0	1	0	1	0	0	0

〈표 7d〉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신문사 칼럼별 단어 빈도

	공급	수요	규제	서민	전세	시장	경기	일관	환수	블로소득	보유세	거래세	토지공개념	다주택	건설
경향	10	5	5	7	1	17	0	3	4	3	7	6	1	3	7
국민	6	8	2	3	0	12	3	1	8	0	7	0	0	0	5
동아	22	29	2	12	3	25	5	1	1	0	7	2	0	1	8
매경	5	3	0	1	0	11	2	0	1	2	4	0	0	0	1
머니투	19	12	9	1	6	92	5	1	5	0	8	6	3	1	15
문화	43	36	16	10	1	61	14	1	8	0	59	21	0	0	13
서울	0	3	0	1	0	11	6	0	0	0	20	3	0	1	7
세계	5	8	1	0	0	1	1	1	3	0	0	0	0	0	3
조선	22	22	4	6	0	49	4	0	8	9	23	5	2	6	14
프레시안	14	21	0	1	1	2	1	0	20	29	12	0	0	0	3
한겨레	1	0	1	1	0	5	1	0	1	4	2	0	1	0	1
한경	39	31	22	8	3	70	5	4	8	2	24	10	1	6	15
한국	3	1	2	2	1	8	3	0	1	1	18	2	0	1	3
FN	4	5	0	0	0	19	3	0	0	0	1	0	0	7	0

### 3.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대응분석은 분할표(contingency table) 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들의 대응관계를 탐구하는 탐색적 자료 분석의 방법이다. 대응분석은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한 두 개의 축(axis) 상에 표현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언론의 이념적 분화 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진, 2005).

대응분석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상당히 기술적인(descriptive) 통계기법이라는 점이다. 즉, 주어진 자료를 통해 가설이나 이론을 엄밀하게 검증하고, 현상으로 관찰되는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자료를 단순하고 평이하게 시각화하여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범주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구체적인 형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대응분석은 주로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나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만을 다룬다는 특징을 지닌다. 물론, 로그선형분석(log-linear analysis)과 같이 범주변수를 다루는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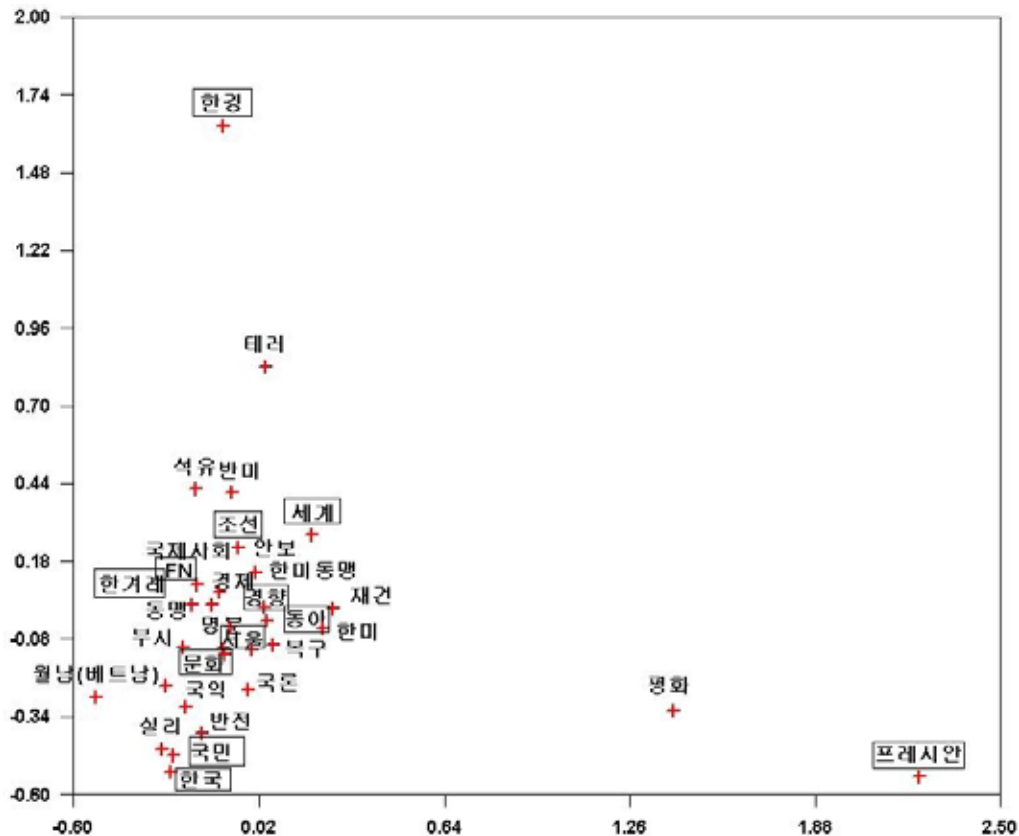
분석기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응분석은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통계학적 조건이나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셋째, 대응분석은 기술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 결과 도출된 도표 및 지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창조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른 기법처럼 이론적인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 혹은 엄밀한 가설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와 같이 대체적인 이념적 지형을 파악하려는 연구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했던 <표 7a>~<표 7d>가 각 이슈별로 대응분석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분할표라고 할 수 있다. 이 표들에 대한 대응분석을 통해서 이념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 단어들의 상호 대응관계로 구성된 이념 지형 속에서 각 신문사들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대응분석에 의해 작성된 언론사의 이념 지도는 그 분포의 양상에 따라 한 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순히 어떤 신문사가 진보적 혹은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의 글들이 각각 어떤 논점을 가지고 자신을, 때로는 상대방을 규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지, 그에 따라 동일 이슈 내에서라도 논점이 얼마나 이념에 따라 분화되어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 IV. 결과 해석

### 1. 쟁점별 결과의 해석

#### 1) 이라크 파병



<그림 3> 이라크 파병에 대한 주요 이념 단어와 신문사 칼럼의 대응관계

위 <그림 3>은 이라크 파병 논쟁에서 나타난 주요 단어들이 만들어 내는 이념적 지형과 그 안에 각 신문사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응지도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우측 하단에 ‘평화’와 ‘프레시안’, 좌측 상단의 ‘테러’와 ‘한경’ (한국경제)을 제외한 나머지 개념들 및 신문사들이 좁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조선일보가 ‘안보’나 ‘한미동맹’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단어들 및 신문사들 사이에 특별한 이념적 성향을 뚜렷이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논점이 매우 분화되어 있지 못한 채용어들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단어에 대한 공통의 이해 혹은 그 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각자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쟁점에 대한 태도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생산적이지는 않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익’, ‘국제사회’, ‘베트남’(월남) 등의 단어들이다. 파병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측 모두 파병이나 반전 모두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르는 길이며 상대방의 입장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진정 국제사회의 규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 경험도 찬반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

위 그림에서 가장 뚜렷한 구분은 파병을 둘러싼 양측의 이념적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단어인 ‘안보’와 ‘평화’를 중심으로 명백히 관찰되는 분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평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파병 반대 의견을, 그리고 ‘안보’는 그보다 국내적 차원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대체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부분 사이의 구분은 진보와 보수로 구별된다기보다는 글로벌 진보의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낸 소수 그룹과 그밖에 미분화된 논점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논쟁을 벌이는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수행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중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항은 없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이념 분포와 언론에서 반영된 이념 분화 양상을 비교하려 했던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대신 한국군이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여부를 묻는 항목을 살펴봤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5%, 중립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40.5%,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 49.0%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유지군 활동 참여에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화유지군 활동에 긍정적 태도를 가진 비율은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가 국제평화유지군 파병에 덜 호의적인 반면, 보수와 중도는 평화유지군 활동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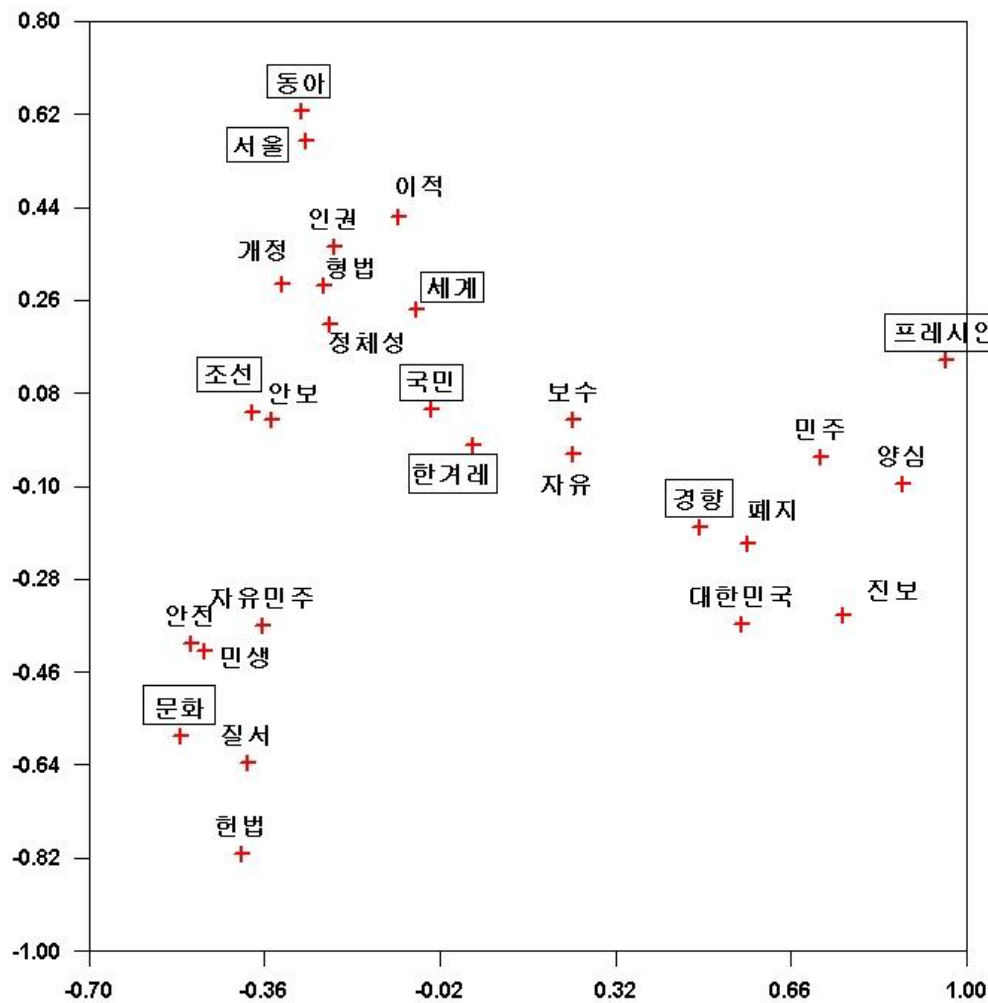
〈표 8〉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보수	중도	진보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2.9	1.2	1.3	1.7
별로 그렇지 않다	10.1	7.3	11.5	8.8
그저 그렇다	36.4	41.1	44.3	40.5
대체로 그렇다	41.6	43.2	31.9	40.6
매우 그렇다	9.1	7.1	11.1	8.4
	100	100	100	100

사실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파병부대의 역할을 평화유지군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한 전쟁에 전투부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봐야하는가 사이의 논쟁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논쟁의 영향이 국제평화유지군 자체에 대한 이념적 이해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에 덜 긍정적이고, 반대로 보수 입장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찬반 입장이 크게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쟁점이 미분화되어 있는 언론의 논쟁과 다소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설문 항목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

## 2)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을 다룬 신문사들의 이념적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그림은 크게 두 차원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어지는 문화-한겨레-경향-프레시안의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신문들의 군집과 좌측 상단의 동아-서울-조선-세계-국민 등으로 묶을 수 있는 군집이다. 후자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가진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른 한 차원의 구분은 문화일보를 중심으로 한 소수 군집과 나머지 군집 사이의 균열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들을 대변하고 논쟁을 벌이는 언론사 집단들과 그에 비해 덜 논쟁적인 개념들과 친화성을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일보 사이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요 이념 단어와 신문사 칼럼의 대응관계

개념들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보수, 진보, 중립적 함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단어들 사이에 완전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상대적 개념들인 ‘보수’와 ‘진보’, ‘개정’과 ‘폐지’, ‘민주’와 ‘자유민주’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념적 성향을 뚜렷하게 지닌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들과 자신의 이념을 긍정적으로 규정짓는 개념들(예를 들어, 보수의 경우 ‘안보’, ‘정체성’, ‘자유민주’, 진보의 경우 ‘양심’, ‘진보’, ‘민주’) 및 반대측의 이념을 부정적으로 규정짓는 개념들(보수의 경우 ‘이적’, 진보의 경우 ‘보수’)이 상대적으로 근접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언론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즉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표 9〉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보수	중도	진보	
전혀 그렇지 않다	69.5	25.3	4.3	32.5
별로 그렇지 않다	22.7	37.2	7.7	27.7
그저그렇다	7.1	24.1	21.3	19.2
대체로 그렇다	0.3	10.5	36.6	13.0
매우 그렇다	0.3	2.9	30.2	7.6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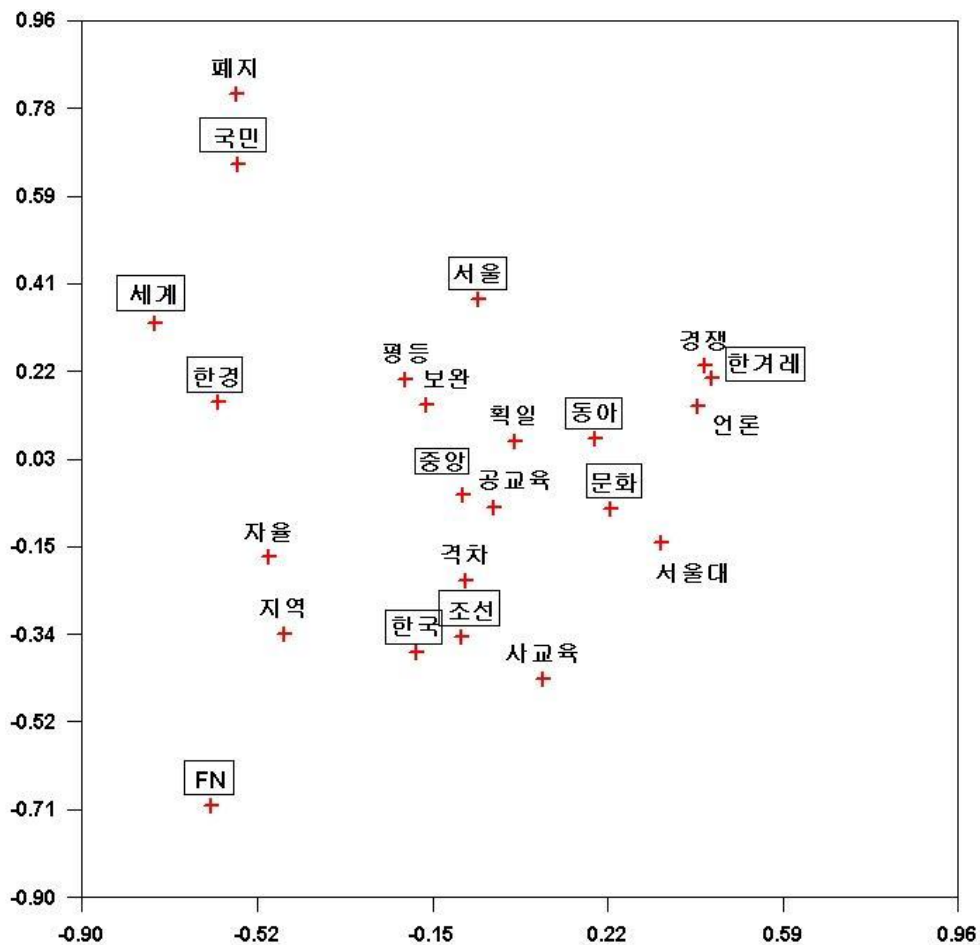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보적인 입장에 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그 입장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 다수의 국가보안법 유지 입장과 상대적 소수의 폐지 입장이 뚜렷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론사들 간에도 비교적 뚜렷한 이념적 위치 구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언론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비교적 왜곡되지 않게 반영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3) 고교 평준화

고교 평준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교육의 형평성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평준화 유지론자와 현행 교육 체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준화 폐지론자 사이의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후자는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발하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의 이념 지도에서 각 신문사들의 위치는 대체로 중도-보수적 입장을 가진 다수의 그룹과 진보적 입장을 가진 한겨레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높은 논쟁적 입장을 보이는 언론사들의 한 집단(한겨레, 동아, 문화, 조선, 서울, 중앙, 한국)과 상대적으로 논쟁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머지 집단(국민, 세계, 한경, F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림 5〉 고교 평준화에 대한 주요 이념 단어와 신문사 칼럼의 대응관계

개념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념에 있어서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획일’, ‘경쟁’과 ‘평등’, ‘폐지’와 ‘보완’ 등이 각각 거리를 두고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이들 개념들이 논의될 때, 상대적 개념들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고교 평준화 쟁점이 다른 쟁점들과는 달리 언론에 의해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한겨레신문이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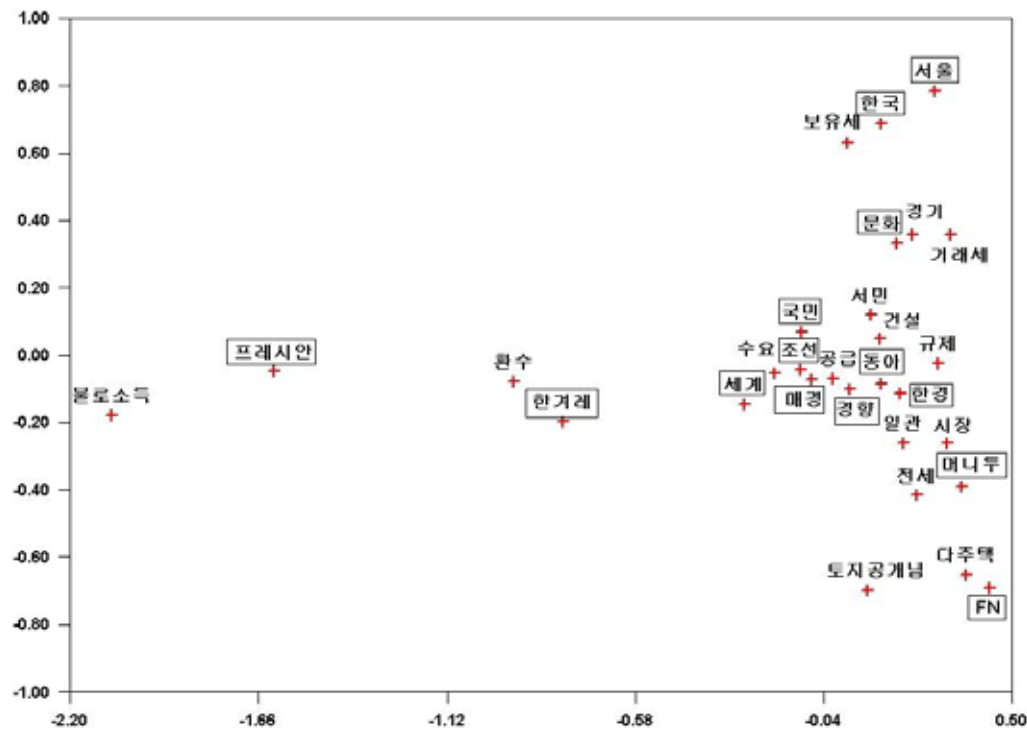
대체로 다수의 언론사들이 고교 평준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의 태도는 미약한 이념적 분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이 불평등 완화보다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이

념적 입장에서 강하지만, 한편으로 교육의 형평성에 무게를 두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도 다소 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언론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미분화 양상은 시민사회에서의 이러한 이념적 분화의 미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교육에 대한 태도  
 - “A.교육에서는 우수한 인재양성이 더 중요하다~B.불평등의 완화가 더 중요하다.”

	보수	중도	진보	
A에 더 가깝다	45.8	30.2	25.1	33.2
다소 A에 더 가깝다	26.0	31.0	23.4	28.2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14.9	18.1	16.2	16.9
다소 B에 더 가깝다	6.2	15.2	17.9	13.4
B에 더 가깝다	7.1	5.6	17.4	8.3
	100	100	100	100

#### 4) 부동산 정책



〈그림 6〉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 이념 단어와 신문사 칼럼의 대응관계

부동산 정책 역시 시장질서와 시장의 실패로 나타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쟁점이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분화의 폭은 그다지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에서 언론사들은 크게 한겨레-프레시안의 그룹과 나머지 미분화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겨레와 프레시안이라는 진보적 신문들이 나머지 언론사들과 상당한 상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이념적 분화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 논쟁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았던 그룹이었다는 점으로 이 거리를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이념적 분포를 반영하는 핵심 균열지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한경, 매경, 머니투데이, FN(파이낸셜뉴스)과 같은 경제신문들이 좌측 중간 이하 지점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신문들은 중간에서 그 위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문 일간지들이 일반적으로 시장 친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 쟁점에서 이들의 공통적인 친시장적 성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신문과 일반 신문 사이에 이념적 균열이 일관적이고 뚜렷이 나타난다는 설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서울, 한국, 문화를 제외한 다른 신문들(국민, 조선, 동아, 세계, 경향) 역시 이들 경제신문들과 근접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론에서 경제적 쟁점에 관하여 시장 친화적 관점이 일단 매우 지배적이 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분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잠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1〉 부동산 세금에 대한 태도

- “A.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시장질서를 침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B.부동산 투기와 집종을 줄이기 위해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보수	중도	진보	
A에 더 가깝다	17.5	11.2	7.2	12.1
다소 A에 가깝다	31.2	22.9	15.3	23.5
어느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23.1	27.8	23.0	25.6
다소 B에 가깝다	13.3	26.9	28.5	23.7
B에 더 가깝다	14.9	11.2	26.0	15.1
	100	100	100	100

비교적 미분화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태도들에 비해 시민사회의 태도는 훨씬 첨예하게 두드러짐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념별로 부동산 시장을 높은 세금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진보적 입장과 가급적 시장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중간을 중도적 입장이 차지하지만 중도적 입장의 경우에는 진보적 입장에 보다 근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언론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쟁점 간 비교

지금까지 네 가지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언론의 이념적 지형을 해당 설문조사 항목 응답결과와 함께 각각 살펴보았다. 이념 지형은 언론에서나 시민사회에서나 공히 쟁점별로 크고 작은 편차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분포가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또한 개별 쟁점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각각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쟁점 간 비교의 결과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쟁점 간 관찰된 이념 분포들 간의 변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국가보안법과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비교적 신문사들 간 이념의 폭이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나타난 반면, 이라크 파병 및 부동산 정책 논란은 언론사들 간의 위치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개념들도 혼재되어 있어 논점이 상당히 미분화되어 이념적 갈등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사별로 이념적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쟁점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특히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 진보적 입장을 가진 신문들의 클러스터가 가시적으로 관찰된다. 고교 평준화는 국가보안법 문제만큼 일관적인 이념적 스펙트럼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겨레와 나머지 중도, 보수적 신문들로 클러스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념 분화가 미비했던 부동산 정책과 이라크 파병은 두 이념지도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실제로 칼럼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고보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입장과 제언을 밝히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이라크 파병의 경우 각 신문별, 칼럼별로 찬반의 입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거나,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 기반이 없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미분화된 이념 분포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각 이슈마다 신문들이 보이는 논쟁적 성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다. 이념 지도에서 대체로 주요 단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문의 경우 그 주제에 대해 다른 칼럼의 수가 적거나 다양한 내용의 칼럼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경우 이 신문은 해당 쟁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로는 아예 일부 논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신문들도 있다. 경제신문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면,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활발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네 개의 쟁점들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이념 분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발견되는 특징으로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 신문들은 그 위치가 잘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동아와 같은 보수적 색채의 신문들의 경우 신문의 성향과는 다른 비교적 중도 혹은 진보적 입장을 가진 칼럼들도 종종 게재하는 반면, 한겨레, 경향과 같은 진보적 성향의 신문들에서는 네 가지 쟁점 공히 보수적 입장의 칼럼을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진보적 지식인들 및 언론사들의 연대가 보수적인 쪽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으로, 시민사회에서의 이념적 분화와 언론의 이념적 분화 사이의 차이가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라크 파병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언론이 시민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고교 평준화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다른 이념적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진보적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상당했는데 반해, 언론은 대체로 중도-보수적 입장에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과대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 역시 시민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반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이념적 논조는 대체로 시장주의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는 정치적 쟁점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쟁점의 경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및 지식인들이 기고하는 언론 칼럼과 시민사회의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언론 칼럼에 나타난 이념의 분화와 설문을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의 분화를 최근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념 갈등이 사회를 분열로 이끌어가고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갈등으로 몰고 간다면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념 갈등을 극복하는가이다. 모든 갈등이 그러하듯이 객관적 분석이 올바른 대책의 모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이념에 대한 조사나 연구들은, 특히 언론사들이 중심이 된 연구들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국민들 중에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고 진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라는 이념의 수량적 분포에 집착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수량적 분포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단순한 이념적 차이가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적 요인들과 매개적 변수들이 개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론이 여론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념적 차이를 증폭 혹은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내용분석 자료의 분석 결과를 최근 뜨거웠던 이념적 논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교의 결과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쟁에서의 이념적 입장의 차이를 보다 넓게 만드는 언론의 역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언론들이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경우들은 발견되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분화된 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언론들의 미분화된 태도 속에서 의미와 입장의 모호함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경우 갈등 상황에서의 모호함은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는 경향보다는 모호함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 결국 모호함이 겹치고 서로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잘 부각되어 한정된 차이점들을 가지고 합리적 조정이나 경쟁이 벌어질 때 이념의 차이는 소모적 갈등보다는 합리적 논쟁과 경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념의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점보다는 오히려 분화된 이념에 따라서 생산된 정책적 지식에 입각한 논쟁이 부재한 것이 갈등을 소모적으로 만드는 보다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신문 칼럼들에서 사용된 주된 개념적 용어들의 미분화된 구조적 양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 강원택. 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푸른길. pp. 45~96.
- \_\_\_\_\_.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김재한. 1996. “한국 유권자의 이념 분포와 정계 구도.” 김재한 외, 『한국 정치외교의 이념과 논제』. 소화. pp. 11~45.
-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계간사상》 14(3):53~79.
- 이명진. 2005. “대응분석의 소개와 적용,” 이재열 편, 『고급사회과학분석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선일보. 2002a. “국민의식 조사 (상).” 《조선일보》 2002·5·2, pp. 1, 8~9.
- \_\_\_\_\_. 2002b. “국민의식 조사 (하).” 《조선일보》 2002·5·3, pp. 8~9.
- \_\_\_\_\_. 2003a. “국민의식 2차 조사 (1).” 《조선일보》 2003·5·2, pp. A1, A6~A7.
- \_\_\_\_\_. 2003b. “국민의식 2차 조사 (2).” 《조선일보》 2003·5·5, pp. A1, A5.
- \_\_\_\_\_. 2004. “2004 국민의식 조사: ‘체제 상관 없이 통일’ 31%, 37%는 ‘보안법 폐지해야.’” 《조선일보》 2004·5·3, p. A5.
- 중앙일보. 2002a. “의원 노선 대 해부.” 《중앙일보》 2002·2·1, pp. 1, 4~5.
- \_\_\_\_\_. 2002b. “국민과 의원들의 이념좌표 비교.” 《중앙일보》 2002·2·4, p. 4.
- \_\_\_\_\_. 2002c. “대선 예비주자 노선 대 해부.” 《중앙일보》 2002·4·12, pp. 1, 4~5.
- \_\_\_\_\_. 2002d. “대선 여론조사 분석: 지지자 이념성향 갈려.” 《중앙일보》 2002·8·14, p. 4.
-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겨울):83~102.
- 한겨레. 2002a. “한국인의 이념성향 (상).” 《한겨레》 2002·6·3, pp. 1, 3~4.
- \_\_\_\_\_. 2002b. “한국인의 이념성향 (하).” 《한겨레》 2002·6·4, pp. 1, 4.
- 한국일보. 2002a. “정치·사회·의식 여론조사 (상).” 《한국일보》 2002·6·7, pp. 4~5.
- \_\_\_\_\_. 2002b. “정치·사회·의식 여론조사 (하).” 《한국일보》 2002·6·8, pp. 8~9.
- \_\_\_\_\_. 2003. “정치·사회 국민의식조사.” 《한국일보》 2003·6·9, pp. 1, 12~13.
- 홍두승·박용치·설동훈·이남영·한준. 2002. 『한국인의 이념 조사연구, 2002』. 한국조사연구학회.

- 홍두승 · 박찬욱 · 설동훈 · 이계오 · 한준. 2003. 『한국인의 이념 조사연구, 2003』. 한국조사연구학회.
- Babbie, Earl. 2002. Social Research Methods. (번역: 사회조사방법론), 그린.
- Kerlinger, Frederick Nichols. 1984.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e Nature and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night, Kathleen. 1999. "Liberalism and Conservatism." Pp. 59-158 in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edited by John P. Robinson, Phillip R. Shaver and Lawrence S. Wrightsma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제 1 주제  
이념갈등의 현황과 국민통합의 과제

# 이념 갈등과 사회 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강 원택 (숭실대 정외과) · 정 병 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 이념 갈등과 사회 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강 원 택 (숭실대 정외과) · 정 병 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 I. 서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의 해소는 공통의 정치적 목표이다. 그만큼 모든 나라는 내부적으로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갈등은 그 사회가 거쳐 온 역사적인 과정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나라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립셋과 로칸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좌-우 이념간의 대립은 서구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동결된(freezing)’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모든 나라에 유사한 형태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러한 갈등의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관리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어떤 갈등은 잘 관리되는 반면 다른 갈등은 잘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역시 지역갈등이었다. 그 때문에 지역주의를 제외한 다른 정치·사회적 갈등은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크게 성장해 왔지만 본격적인 계급정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했고, 종교나 환경-여성 등 서구 국가에서 나타나는 다른 균열 역시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이념적인 대립으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이념 갈등은 민주화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서구 민주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념 갈등의 주체는 계급이 아니라 세대라는 것이다. 즉 서구에서 표출되고 있는 이념 갈등이 좌-우 이념 대립의 형태로 요약해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의 속성은 서구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원인과 속성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소해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중요한 쟁점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이념 집단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이념 대립이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인 형태의 갈등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념 갈등을 해소해 온 외국의 사례를 선정하여 그 국가에서 이뤄낸 갈등 해소의 방안과 해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이념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나라들은 영국과 독일이다. 이들 두 국가는 인구나 규모에서 우리와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또 계급에 기초한 이념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이라는 두 국가에 대한 질적 연구와 비교 연구를 통해 정치·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념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 II. 영국의 이념 갈등과 사회 통합

### 1. 영국 사회의 이념적 특성: 계급과 좌-우 이념

영국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의 특성은 계급(class)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계급은 맑스(Karl Marx)가 말하는 것처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영국에서 계급은 이외에도 역사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영국 사회에서 계급은 단지 개인의 현재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재산의 정도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단성을 갖고 있으며 다음 세대로 세습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급은 영국 정치와 영국의 이념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잉글랜드는 태양 아래서 계급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class-ridden) 사회다. 잉글랜드는 대부분 늙은이나 어리석은 자에 의해 지배되는 오만한 자들과 특권계급의 땅이다”(1970, 87)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 사회에서의 계급 갈등은 이념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동계급이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이념을 표출해 왔고, 중산계급은 보수적인 이념을 지지해 왔다. 또한 각 계급의 지지에 기반한 정당에 의해 이러한 이념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구현되어 왔다. 보수당이 보수주의 이념을, 그리고 노동당이 진보적인 이념을 대표해 왔다. 이들이 대표하는 이념은 좌(left)-우(right)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의 배분이나 국가의 개입 여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영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기본적으로 계급을 대표하는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계급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영국에서 계급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소득이나 부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교육 수준, 직업, 주거형태,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투나 억양, 옷차림 등 문화,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행하는 사회경제조사에는 공식적으로 계급 구분을 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현재 사용되는 계급 분류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통계청에서 행하는 공식 조사는 모두 8개의 계급 군으로 나누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인 통용되는 IPA 구분은 6개의 계급 군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계급 구분은 영국 사회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의 IPA 계급 구분에서 일반적으로 Class A, B가 중산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Class A, B와 C1까지가 화이트칼라, 즉 비노동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가장 대표적인 노동계급이 C2, D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산업화의 시기에는 수적으로 Class C2, D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노동 계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중산 계급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표 1〉 영국의 계급 구분

공식 통계용 구분(2001년 이후)*		IPA 구분**	
Class 1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Class A	고위 관리, 행정, 혹은 전문직
Class 2	하위 관리직과 전문직	Class B	중간 관리, 행정 혹은 전문직
Class 3	중간 직업군	Class C1	감독직, 사무직, 하위 관리직, 행정 혹은 전문직
Class 4	중소자영업자	Class C2	숙련 육체노동자 (skilled manual workers)
Class 5	하위 감독직(supervisory), 수공업 자(craft)와 관련 직업군	Class D	준숙련(semi-skilled), 미숙련 (unskilled) 육체 노동자
Class 6	준임시직, 준일용직 (semi-routine 직업군) 가게 점원 등	Class E	기타 소득이 없는 연금 수혜자, 독 신, 장기실직자, 임시직 혹은 최하 위직 노동자(casual or lowest grade workers)
Class 7	임시직, 일용직(routine occupations) 웨이터, 도로 청소부 등		
Class 8	무직, 장기간 실직		

\* 2001년부터 영국 통계청(Registrar General)에서 사회경제 인구센서스(NS-SEC)에 사용하고 있는 계급 구분. 2001년 이전에는 5개의 계급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언론 등 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계급 구분임. 원래는 광고업계에서 소비의 목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the Institute of Practitioners in Advertising(IPA)의 정의로 불림. 여기서도 IPA의 구분에 따른 계급 구분을 이용할 것임.

자료: [http://www.statistics.gov.uk/methods\\_quality/ns\\_sec/default.asp](http://www.statistics.gov.uk/methods_quality/ns_sec/default.asp)(검색일 2006. 9. 12)

〈표 2〉는 2005년 현재 영국 사회의 계급 구성 비율이다. 대표적인 노동계급인 Class C2와 D의 비율을 합치면 32% 정도가 된다. 반면 비(非)노동계급인 Class A, B, C1을 합치면 50%를 약간 넘는다. 노동계급 인구보다 비노동계급 인구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비노동계급 인구는 1950년대는 25% 수준,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20% 정도에 불과했다. 1950년대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계급 구성의 변화가 영국사회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과거 노동 계급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계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형태의 조직화된 노동이나 작업장 중심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 형태나 근로 조건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표 2〉 영국 사회의 계급 구성 비율(2005)

계급 구분	전 인구 가운데 비율(%)
Class AB	21.97
Class C1	29.67
Class C2	15.12
Class D	17.16
Class E	16.08

자료: British Social Attitude (2005, London: Sage)에 의해 계산.

여기서의 계급 구분 기준은 <표 1>을 참조할 것.

영국은 과거 공업 중심의 사회였다. 조선, 철강, 자동차 공장이나 탄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 인구 구성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대 작업장에 집결해 있는 남성, 블루칼라 중심의 고용 구조였으며 자연히 노조의 중요성이나 영향력도 컸다. 그러나 제조업이 줄면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 등이 보다 중요한 산업 형태가 되면서, 화이트칼라, 개별 고용 협약, 여성 노동력의 증가,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구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 구조의 변화로 노조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하여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대처의 강력한 반(反)노조 정책으로 노동 운동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보수당 대처가 처음 집권에 성공한 1979년 당시 인구의 53%가 노조원이었지만 이 비율은 2002년이 되면 18%로 크게 낮아졌다(Curtice and Seyd 2003). 이처럼 영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육체 노동 계급(manual working class)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그만큼 계급이 정치적으로 갖는 중요성도 약해졌다. 예컨대, 보수당 존 메이저(John Major) 총리는 영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든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행운에 따라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계급 없는 사회(a genuinely classless society)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Bentley et al. 1999, 127). 메이저 총리가 출신 계급과 무관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국이 그동안 계급에 의한 제약이 큰 사회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면서도, 계급과 관련한 의미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여전히 중요한 갈등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 기회, 주택 형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균형을 고려할 때 영국 사회를 분석하는 데 계급이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고용구조의 변화와

계급성의 약화가 바로 소득이 보다 공평하게 재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영국은 실질가치 기준으로 13% 정도 성장했지만,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계급 정치가 가장 고조에 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0.25에서 0.275 사이를 오갔다. 197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되기 시작해서 1992년에는 0.37로 최고점에 올랐고, 그 이후에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0.384로 1992년보다 다소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Usher 2003, 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에서 블루칼라 육체노동의 감소, 중산 계급의 성장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는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계급이 정치적으로 갖는 중요성도 이전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계급의 변화가 정당 정치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 계급과 정당 정치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계급이 영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펄저(Pulzer)는 1960년대 영국 사회를 거론하면서 “계급은 영국 정당 정치의 기반이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다 장식품(embellishment)이거나 사소한(detail) 것이다”(Pulzer 1967, 98)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영국 정치의 근간이 계급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급 투표(class voting) 현상이다. 무엇보다 투표가 계급에 따라 행해졌던 것이다. 노동계급은 노동당을, 중산 계급은 보수당을 선거에서 지지해 왔다. 영국의 양당제는 바로 이러한 계급에 기초한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버틀러와 스토크스는 “계급과 정파 성향간의 연계의 강도에 대한 우리의 발견점은 다른 모든 여론조사나 투표 관련 연구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계급의 압도적인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Butler and Stokes 1971, 102)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영국 사회에 존재하는 이념 갈등은 각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 정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이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계급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났다. 영국 사회에서 계급간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했고, 계급간 차이도 이전에 비해서 보다 유연해

졌다. 소득이나 부의 불균형이 이전에 비해서 덜 두드러지게 되었고 중산 계급 직업의 확대가 커졌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가 계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Saunders 1997).

실제로 투표 행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본 대로, 영국 선거에서 사회 계급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특히 1945년부터 1970년까지는 사회 계급에 따른 투표 행태의 차이가 매우 분명했다. 보수당은 중산계급 대부분의 표를 얻었고 노동당은 노동계급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중산층의 80% 정도가 보수당을 지지했으며, 노동계급의 60% 정도가 노동당에게 표를 던졌다. 이 시기가 계급 정치의 가장 극성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계급투표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 투표의 변화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1974년부터 2005년까지 총선에서 각 계급별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1974년 선거에서는 사회계급별 차이에 따른 정당 지지의 차이가 확연하다. 당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의 중산층, 화이트칼라 유권자(A, B, C1)들은 압도적으로 노동당보다 보수당을 지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가 무려 37%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숙련육체노동자인 C2 집단에서는 23%, 그리고 미숙련노동자 D, 국가지원대상 E 집단에서는 35% 정도의 차이로 보수당보다 노동당을 더 많이 선택했다. 즉 1974년 총선에서는 사회적 계급에 따른 정당 지지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보수당 지지자와 노동당 지지자의 사회계급별 차이(보수당-노동당)

	1974. 10	1983	1992	1997	2001	2005
ABC1	+37	+39	+32	+5	+4	+3
C2	-23	+8	-1	-23	-20	-12*
DE	-35	-8	-18	-38	-31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의 절대값의 합이 100이 되지는 않는다.

\* C2, D, E 모두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MORI, You Gov(2005). (Kavanagh 2006: 407).



그러나 보수당의 대처 총리가 최초 재임에 성공한 1983년 선거에서는 다소 다른 패턴이 확인된다. 이 선거에서 보수당은 압승을 기록했으며 노동당은 전후 최저 득표율을 보였다. 당시 중산계급 혹은 화이트칼라층이라고 할 수 있는 ABC1 집단에서 보수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여기서도 여전히 확인되지만, 흥미로운 점은 블루칼라층이나 연금수혜층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집단에서 노동당을 선택한 비율이 1974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노동계급 가운데서 보수당을 선택한 이들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통적 노동계급인 C2 집단에서는 보수당을 선택한 이들이 노동당을 선택한 이들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메이저가 보수당을 재집권으로 이끌었던 1992년 총선에서도 1983년 선거에서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즉 보수당은 중산계급, 화이트칼라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유권자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1983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18년 만에 총선에서 승리한 1997년에는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유권자 대다수가 보수당으로부터 노동당 지지로 크게 옮겨간 패턴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C2나 DE와 같은 과거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의 지지의 복원은 물론이고 보수당에 가까운 ABC1 집단에서도 보수당과 노동당간의 지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보수당 쪽으로 지지가 크게 쏠렸다면, 1997년 총선에서는 반대로 노동당 쪽으로 유권자 대다수의 선호가 쏠려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5년 총선에서는 1997년 총선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그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0년 이후 선거에서는 계급별 정당 선호의 패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중산층은 보수당 지지, 노동자는 노동당 지지’라는 전통적인 계급 투표 대신 정치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이 각각 달라지는 유연한 투표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1983년 선거에서 보수당은 노동 계급 유권자 중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고, 1997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중산층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는 자신이 속한 계급에 의해 정당을 선택하던 과거의 투표 행태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매력적이고 지도력을 갖춘 당 지도자를 갖춘 정당에게 유권자의 표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계급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갈등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영국 사회의 변화는 사

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수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권이 기여한 바도 사실 적지 않다. 영국의 정당 정치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이념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잘 대표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에 따른 이념적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해 왔다. 영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각한 사회균열로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통합될 수 있었는지 다음 절에서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3. 이념적 갈등과 통합: 정당 정치의 역할

영국의 정당은 이념 정당이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이며, 자유(민주)당은 자유주의 이념을 주창한다. 그리고 보수당은 보수적 이념을 대표해 왔다. 이들 정당들은 이념적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지지자들 역시 자신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정당을 선택해 왔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념의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영국 사회는 좌-우(left-right) 이념 축이 가장 중심으로 작용해 왔다 (Budge et al, 1998, 406).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영국 정당이 이념적으로 뚜렷한 색채를 갖는 정당들이지만 실제로 이념적인 갈등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유한 이념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당간 이념적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영국의 정당은 이념의 구현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성격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집권에 도움이 된다면 이념적인 ‘변신’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치러진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최초로 안정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집권당이 되었다. 이와 함께 국유화, 복지 증대 등 국가 개입에 의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전개하였다. 노동당의 이러한 정책 노선에 대해서 처음에 보수당은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의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게 되자 보수당은 입장을 바꿔 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수용하였다. 특히 1955년부터 1964년까지 노동당과 보수당은 복지국가와 혼합형 경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거대 산업의 국가 소유 등의 정책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NATO를 중심으로 한 동맹 중시 등에서 양당간 입장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보수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실용적 입장에서 이념적 유연성을 보인 때문이지만 동시에 노동당 역시 자신들의 강령 중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은 완화시키는 유연함을 보였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었

다. 이러한 정책적 유사성은 언론에서 ‘버츠크리즘(Butskellism)’으로 불리곤 했는데,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게이츠크(Hugh Gaitskell)과 뒤 이어 집권한 보수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은 버틀러(R. A. B. Butler)의 경제정책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만든 표현이었다. 이러한 버츠크리즘이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시기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급 투표 성향이 가장 뚜렷했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냉전에 따른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지만 1950-60년대에 정당 정치는 오히려 합의 정치(consensus politics)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회적인 수준에 존재하는 이념 갈등이 정치권에서 확대재생산되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버츠크리즘’이 시사하는 사민주의적 합의는 1970년대까지 대체로 유지되어 오다가 보수당 대처 총리의 등장 이후 깨지게 되었다<sup>1)</sup>. 그리고 대처 총리가 집권 이후 1980년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념에 의한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념적 갈등이 격화되었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대로 1980년대 초 노동당은 좌파가 당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대처리즘이라는 보수당의 강한 이념적 입장과 충돌하면서 이념적 대립이 극심했다. 사회적으로도 광산 노조의 파업 등 저항이 만만치 않게 일어났다. 이러한 이념 갈등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보수당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가 대처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양당간 차별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노동당의 기본 입장은 지켰지만, 복지국가의 개혁, 시장 중시, 국가 개입 축소, 화폐주의적 경제 정책, 노조의 약화 등 대처 정부 시기에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 기조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05년 선거에서 잘 드러났듯이, 이제 과거와 같은 굵직한 이슈들, 예컨대, 공공 소유,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 유럽연합 회의 문제, 핵무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당간의 입장 차이는 대체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영국 정치에서 정치 마케팅이나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차별성의 감소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1950년대-60년대 양당간 합의 정치가 좌파적인 ‘사민주의적’ 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1990년대 이후 수립된 양당간 합의 정치는 우파적인 ‘신자유주의적’ 틀에 의해 이뤄졌다.

1) 1966년부터 보수당의 정책적 입장은 버츠크리즘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우경화되기 시작했다. 노동당 역시 1974년 선거 강령에서 좌파적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었으나 역시 가장 좌파적 색채가 강했던 것은 1980년대 초부터 1992년 선거까지였다(Budge et al., 1998, 411-412).

이처럼 계급에 의한 이념적 대립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영국 정치에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이념 갈등이 사회적 혼란이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이러한 영국의 이념 갈등 해소에는 정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영국 정당은 매우 뚜렷한 이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 비교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강한 당내 기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지자들 역시 정당이 대표하는 정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당은 비교적 강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념에 경도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영국 정당의 보다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정당은 집권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당 경쟁은 구심적이다. 1950년대의 보수당이나 1990년대의 노동당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면 정당이 대표하는 이념적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는다. 예컨대 보수당은 한 때 자신들이 반대했던 상원의 약화, 아일랜드 독립 허용, 여성에 대한 참정권 허용, 산업의 국영화, 공공지출과 세금의 증대, 제국의 상실 등 모든 이슈에 대해 일단 정책이 추진되고 나면 그것을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모두 수용해 왔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유연한 적응력을 보여준 것이며 원칙이나 이념에 집착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서의 승리, 즉 집권을 위한 변신이 보수당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보수당은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였다. 노동당 역시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였고 초기만 해도 ‘강력한’ 사회주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었고 사회주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과거 노동당의 당헌 4조가 규정하는 사회주의의 원칙을 집권 후 실제 정책에서 추진하고 실현시키려는 의도는 그 어떤 노동당 정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당 정치의 특성 때문에 영국에서 나타난 이념적 갈등이 사회적 분열로 나아가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표 4>의 결과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당간 정책이나 이념의 차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시기마다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정당간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1964년부터 79년까지는 22-37%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다가, 1983년과 87년 선거에서는 6%, 4%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정당간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응답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주요 정당간의 입장은 대처 정부 초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상으로 수렴하고 온건한 특성을 보여 왔다. 이처럼 계급으로 대표되는 영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정당 정치를 통해 제도권 정치 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왔다. 그리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당 정치의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갈등이 사회적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사회 통합과 정치 안정을 유지해 온 것이다.

〈표 4〉 정당의 정책, 이념 차이에 대한 인식(1964-1997)

선거 연도	64	66	70	74.2	74.10	79	83	87	92	97
매우 크다	46	42	32	33	39	46	82	84	55	33
다소 크다	23	26	27	30	30	29	10	11	31	42
크지 않다	26	28	37	35	30	22	6	4	12	23
모르겠다	4	3	3	2	1	2	1	1	2	2

자료: Evans et al. 1999, 97.

### Ⅲ. 독일의 이념 갈등과 사회 통합

#### 1. 이념적 특징과 사회계급 구성

독일은 유럽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가장 먼저 창당되어 성공적으로 의회에 진입한 국가이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했고 19세기 중반에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맑스주의적 혁명이 최초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 국가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념적 갈등의 뿌리가 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사민주의 사상은 맑시즘보다는 라살주의(Lassalleanism)에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 노동자운동과 사민주의 정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의회주의 전략을 통한 복지국가적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정병기 2002). 라살주의는 헤겔과 피히테의 국가관에 맑스의 국가관을 절충하여 이중적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자유를 향한 인간의 계발과 역사의 발전은 시대정신으로서의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며, 그 국가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강력한 통일 국가로 존재하여야만 한다. 계급 국가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는 다만 국가의 다른 한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폐지될 것이지만, 헤겔적 절대이성으로서의 국가는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거이자 후견자로서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독일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이념적 특징은

이러한 라살주의에 근거한 국가의존적 경향을 강하게 띠어온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존적 경향은 또한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제2차대전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가 완성되고 작동해간 시기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구조변동기에 해당한다.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높은 고용수준에서 소득분배와 구조조정이 결합될 수 있었으며, 저임금 농업부문에서 고임금·고생산성의 광공업부문으로 고용이 이동되었다.

1949년 기민연(CDU)의 아데나워(K. Adenauer) 총리시절에 채택되어 1960년대 초 중반 에어하르트(L. Erhard) 총리시절에 완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원칙 안에서 계층간 차별없이 사회경제적 형평을 기하는 “형평을 갖춘 중산층사회(nivellierte Mittelstandsgesellschaft)”의 건설을 이념으로 했다(Braun 1972, 34). 그리고 이 이념은 전통적인 사회보장 영역을 확대하여 종래의 특정 집단별·계층별 사회정책을 포괄적 사회정책(umfassende Gesellschaftspolitik)으로 전환한 사회국가원칙을 의미했다.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는 또한 공동결정법과 같은 산업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동결정법을 비롯한 산업관계의 제도화는 노동운동의 탈정치화도 초래했는데, 이는 곧 독일의 정당국가적 성향을 확립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정당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되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가 배제된 의회중심정치와 의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정당에 제한하는 정당중심정치라는 독일의 현실정치적 측면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독일에서 이념 갈등이라고 하면, 체제와 결부된 이데올로기적 사회집단간의 갈등이 아니라 입법 테두리와 국가의존적 경향 내에서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잠재적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계층의 이념 성향은 대부분 투표경향으로 표현되고 정당정치를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독일 사회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 구조를 미리 파악한 다음, 이어지는 절에서는 그에 따른 투표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이데올로기 스펙트럼과 연결하여 고찰하여 독일의 이념 갈등을 살펴본 후, 정당정치적 통합의 역사를 추적할 것이다.

<표 5>는 2004년 독일 사회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 구조를 동서독 지역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독일 사회도 다른 산업국가들처럼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점

차 광공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산업이 팽창했으며 사무직과 실업자 및 연금수혜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시대적 비교를 위해 서독만을 살펴보면, 1950년도에 20.6%였던 사무직과 공무원의 비율은 그동안 진척되어온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26.2%로 증가한 반면(1970년에는 38.4%), 육체노동자는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 51%에서 14.1%에 이르렀다(Alemann 1992, 96과 <표 5>). 실업자는 1950년대 10.4%였다가 경제회복의 절정기였던 1970년도에 가장 낮아 0.7%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4년 현재 12.0%에 도달했다(Friedrich and Kraft 2000, 292와 <표 5>). 연금수혜자는 1950년대 연금제도 도입 직후 지속적인 사회 노령화에 따라 거듭 상승하여 1988년 19.2%를 거쳐 2004년에 24.4%에 이르렀다(Datenreport 2004, 605와 <표 5>).

<표 5> 독일의 직업과 계급 구분(% , 2004)

연령	직업/종사상 지위	서독지역	동독지역
60세 이하	고위 사무직/공무원	2.0	0.8
	중간 사무직/공무원	10.1	8.0
	하위 사무직/공무원	14.1	12.8
	기술직/숙련 육체노동자	9.1	12.7
	단순노무직/미숙련 육체노동자	5.0	2.9
	자영업자	5.5	6.6
	실업자/미취업자	12.0	18.5
	학생	6.8	6.5
	가정주부(남/녀)	8.5	1.8
61세 이상	취업자	1.8	0.9
	평생 미취업자	0.9	0
	연금수혜자(전직 사무직노동자)	11.2	13.9
	연금수혜자(전직 육체노동자)	10.9	12.7
	연금수혜자(전직 자영업자)	2.3	2.0

자료: Datenreport 2006, 588.

## 2. 이념 갈등과 정당정치적 통합

제2차 대전 종전 후 사민당(SPD)과 기민/기사연(CDU/CSU)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사회계급간 이념갈등은 공산당이 존재하는 라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었으며, 영국에 비해서도 절반이 되지 않는 심도를 보였다. 이것은 우선 기원적으로 라살(F. Lassaalle)의 국가의존적 사민주의에 입각한 사민당의 성격과 가톨릭사회주의 경향의 기민/기사연의 성격에 기인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욱 완화되어 2005년 현재에는 노동자들 내의 지지율 차이가 5% 포인트 안팎으로까지 줄어들었는데(<표 6> 참조), 이것은 상술한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와 같은 합의 정치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의 정당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6〉 기민/기사연 지지율과 사민당 지지율의 사회계급별 차이  
(기민/기사연-사민당, %, 연방의회 선거)

	1961	1990	2005
사무직/관리직/공무원	+14	+7	+5
육체노동자	-13	-8	-6
자영업	+25	+40	+21
연금수혜자	-	-	+6

1) 농민, 가정주부

\* 1961, 1990: 서독; 2005: 독일 전체

자료: Klingemann 1969, 93; Cusak and Eberwein 1993, 194; <http://stat.tagesschau.de/wahlarchiv/wid246/umfragejob0.shtml>(검색일: 2005년 9월 19일).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에서 포괄적 사회정책의 결실은 1950년 전쟁희생자들을 위한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과, 1952년 피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을 거쳐 1953년 포괄적 사회개혁 성명에 따라 이루어진, 1957년과 1959년의 연금개혁이었다(김수행 외, 2006, 148-9). 개정된 연금보험은 연금수준을 임금상승에 연계시키는 ‘슬라이드’ 제도를 통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확보하고, 의무가입의 대상을 확대하며, 기존의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대폭 변경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연금개혁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72년에 남성 63세, 여성 60세를 연금수령 최소연령으로 규정하고,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에게도 공적연금가입의 자유를 부여했으며,<sup>2)</sup>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었다. 또한 1977년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순수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었고, 1978년에는 슬라이드제의 적용이 일정 기간 중지되는 등 후퇴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1개월

2) 1968년에 일반노동자와 달리 사무직노동자들은 연금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자영업자는 처음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다(Oberender und Volk 1990, 313-4).



의 적립금만 남기고 연금총액을 현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전액 충당하는 세대간 계약원칙이 완성되었다(김수행 외 2006, 149).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에는 또한 공동결정법과 같은 산업관계의 제도화도 중요했다. 독일의 공동결정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1951년 아데나워의 조력으로 의회를 통과한 탄광 및 철강산업의 공동결정법이 기업체의 감독위원회에 노동과 자본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경영위원회에 한 사람의 노동감독관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이후 1976년에는 2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체에 감독위원회의 노사동등 대표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기도 했다(김수행 외 2006, 149-50).

케인즈주의적 동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독일의 양대 정당은 더욱 두드러지게 국민정당(Volkspartei)화하고 중도통합정당(catch-all-party)화했다. 그 절정은 노동자 가정의 양대 정당 지지율이 약 40%로 근사치를 이룬 1970년대 말이었다(Schmitt 1992, 15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표 5>에서 7% 안팎으로 나타난 1990년도 양대 정당의 노동자계층 지지율은 1970년 말 이후 다시 벌어진 이념갈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케인즈주의에 머문 사민당과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기민/기사연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80년대는 1970년대에 배태된 경제위기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실제 독일의 사회경제 지수가 악화 일로를 보였으며, 1990년의 독일 통일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실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서독지역에서만 11%대에 이르렀으며, 물가인상률도 1990년대 중반에 다소 잡혀가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4% 내지 5%대를 유지해 왔다(Friedrich und Kraft 2000, 292).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1970년대에 이미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후반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통일의 충격 또한 적지 않아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문제 등은 독일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독일의 신보수주의 사회정책은 구성원칙의 측면에서 연대원칙보다 보조원칙을 강조하고 목적원칙보다 인과원칙을 강조했다(Hickel 1984, XI-XIII). 여기에서 보조원칙이란 ‘자구에 대한 원조’를 보장하고 국가를 ‘최후의 결손보정’ 기구로 보는 ‘후생과 구제의 원칙(Fürsorgeprinz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매개적인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는 반면, 연대원칙은 상호 원조의 공급과 양육 등 ‘보호와 부양의 원칙(Versorgungsprinzip)’을 말한다. 인과원칙은 동일한 문제일지라도 원인이 다르면 달리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보조원칙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적 조정을 근거 짓는 반면,

목적원칙은 원인과 무관하게 곤궁 상태의 해결을 필수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이러한 정책 전환은 구체적으로 이윤추구의 보장, 사회보장권의 제한, 노동조합 이익대표권의 제한,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사회화 축소와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 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1982년도에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 34%에 달하게 되었다(Eichner 1986, 90). 또한 1980년대 민영화 재개 이후 전개된 민영화는 1980년대에 1987년 베바(VEBA)의 추가적 완전 민영화를 비롯해 1988년 피악(VIAG)과 폴크스바겐(Volkswagen) 그리고 1989년에 자츠기터(Satzgitter AG) 등 주요 공기업들을 망라했다.<sup>3)</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현 적녹연정이 출범하기 전까지 이르는 시기에는 독일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에 즈음하여 사민당의 케인즈주의가 지속되는 반면 기민/기사연의 신보수주의 정치가 시작되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그에 따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민당 지지자들의 이념성향은 1979년 이후 다시 좌편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표 7〉 사민당 지지자들의 이념 경향

(%)

	1976	1979	1986
좌	7	2	8
중도 좌	52	34	41
중도	33	54	37
중도 우	6	7	10
우	2	3	4

자료: Schmitt 1992, 142.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사민당의 ‘현대적 경제정당’화가 시작됨으로써 양대 정당의 이념 성향은 다시금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독일 사민당은 두 단계를 거쳐 좌파 국민정당에서 ‘현대적 경제정당’으로 전화해 갔다. 강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행보는 ‘민주적 사회주의(Demokratischer Sozialismus)’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1989년 베를린 강령의 제정이다(Vorstand der

3) 민영화는 물론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이후 사민당의 신자유주의화를 증명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즉, 1990년대에도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친 루프트한자 항공사(Deutsche Lufthansa AG)의 민영화와 1996년과 1998년 역시 두 차례에 걸친 텔레콤(Deutsche Telekom AG)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0, 196).

SPD 1999). 그리고 두 번째 행보는 강령적 수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연립정부의 새로운 정책강령에 해당하는 1999년 블레어-슈뢰더 성명(Blair-Schröder Papers)이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베를린 강령은 ‘사회적 정의’를 구체적 정치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브란트(W. Brandt) 이후의 좌파 국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강령에서 언급되는 ‘사회적 정의’는 “재산과 소득 및 권력의 분배에서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민주적 사회주의’ 강령도 ‘사회적 정의’라는 정치적 목표를 구체적 실천목표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규범으로만 제시한 것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사안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들에 있어서조차 경쟁 및 시장의 개념과 타협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통일 이후 1990년대에는 정의의 이러한 개념에 대한 언급조차 줄어들다가 1998년 연방의회선거 당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Jun und Celikates 2000, 1518). 추상적 규범으로 제시된 ‘민주적 사회주의’가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모순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령과 실천 간의 모순도 재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이었다. 블레어-슈뢰더 성명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재해석이였다. ‘시장의 조정기능이 정치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성명서는 베를린 강령의 결과적 평등 개념의 여지마저 포기한 것으로서, 이는 곧 강령과 현실 정부정책간의 괴리를 후자에 맞추는 방향으로 해소한 것이며 ‘현대적 경제정당’화로의 노선변화를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Oberreuter 2001, 207). 또한 선거전략과 관련해 사민당은 이 성명을 통하여 재집권을 위한 ‘상이한 이해관계들의 느슨한 결합체’로 변해 간 것이었다(Dörre 1999, 6-7).

전후 복구기 이후 1970년대까지의 합의 정치가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였다면, 1990년대 이후의 합의 정치는 영국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독일 사민당이 보수진영의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동의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는 비록 1980년대의 간극을 메우기는 했지만 녹색당과 민사당으로의 좌파 유권자들의 이탈뿐만 아니라(아래 <표 8>과<표 9> 참조) 투표에서의 기권도 아울러 초래하여 정치적 무관심층을 확대하기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독일: 1987년 84.3%, 2002년 79.1%, 2005년 77.7%).<sup>4)</sup>

4) 투표참여율 저하는 영국에서 더욱 심각하여 1987년 75.3%였는데 비해 2001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60%이하로 내려간 59.4%였으며 2005년에도 61.3%로 대단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3. 재통일 이후 이념 갈등의 변화

독일의 사회계급적 이념갈등의 양상은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 지역갈등과 융합되었으며,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경제적 통일의 지연에 따라 새로운 지역갈등으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sup>5)</sup> 통일 직후 좌파 성향 지지자 비율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당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녹색당과 사민당은 서독에 비해 약간 높은 정도를 보였다. 적어도 민사당의 표밭은 좌파성향 유권자들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8> 좌파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경향

(%, 1990)

	민사당	녹색당	사민당	자민당	기민/기사연
서독 지역	-	57	45.3	13.7	2.8
동독 지역	84.8	50.9	39.9	17.3	12.2

자료: Schmitt 1992, 143.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정당 지지율 분포에 한정해서 보면 지역적 투표경향이 부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도에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1994년 이후 연방 선거에서 민사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도에 25.4%를 차지하여 근소한 차이로 기민연을 누르고 제2당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표 9> 참조).

5) 물론 동독과 사회주의 이념의 결합으로 민사당 지지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 1994년 민사당 지지자들의 약 80%가 자신들을 ‘독일인’이라기보다 ‘동독인’, 즉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국민’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동독 전체로 볼 때 이 비중은 약 1/3에 해당하며, 이들은 적어도 1994년 당시까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Winter 1996, 315). 그러나 1990년 3월에 치러진 최초의 자유선거 인민의회 선거 당시 93.4%에 달했던 투표참여율이 같은 해 말에 치러진 통일 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74.7%로 약 20% 가까이 낮아졌으며, 그와 함께 기민연과 자민당의 지지율은 53.3%에서 54.7%로 약간 상승한 결과를 보인 반면, 민사당의 지지율은 16.4%에서 11.1%로 상당한 폭의 감소를 보였다는 사실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 내 개혁의 실종과 대안부재에 실망한 사회주의 지지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정병기 1997).

〈표 9〉 구동독지역 연방의회 선거

(%)

	기민연	사민당	자민당	동맹'90/녹색당	민사당
1990	41.8	24.3	12.9	6.1	11.1
1994	38.5	31.5	3.5	4.3	19.8
1998	27.6	35.6	3.6	5.2	19.5
2002	28.3	39.7	6.4	4.7	16.9
2005	25.3	30.5	7.9	5.1	25.4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자료 종합

〈표 10〉 동베를린과 구동독 5개 주 지방선거

(%)

주, 동베를린	연 도	기민연	사민당	자민당	동맹'90/녹색당	민사당
Mecklenburg-Vorpommern	1990	38.3	27.0	5.5	4.2	15.7
	1994	37.7	29.5	3.8	3.7	22.7
	1998	30.2	34.3	1.6	2.7	24.4
	2002	31.4	40.6	4.7	2.6	16.4
Brandenburg	1990	29.5	38.2	6.6	9.2	13.4
	1994	18.7	54.1	2.2	2.9	18.7
	1999	26.6	39.3	1.9	1.9	23.3
	2004	19.4	31.9	3.3	3.6	28.0
Sachsen-Anhalt	1990	39.0	26.0	13.5	5.3	12.0
	1994	34.4	34.0	3.6	5.1	19.9
	1998	22.0	35.9	4.2	3.2	19.6
	2002	38.2	21.3	13.1	2.1	21.0
Thüringen	1990	45.4	22.8	9.3	6.5	9.7
	1994	42.6	29.6	3.2	4.5	16.6
	1999	51.0	18.5	1.1	1.9	21.3
	2004	43.0	14.5	3.6	4.5	26.1
Sachsen	1990	54.4	19.1	5.3	5.6	10.2
	1994	58.1	16.6	1.7	4.1	16.5
	1999	56.9	10.7	1.1	2.6	22.2
	2002	33.6	33.3	7.3	4.6	16.2
Berlin-Ost	1990	25.0	32.1	5.6	9.8	23.6
	1995	23.6	20.2	-	10.0	36.3
	2001	12.4	23.2	5.3	5.9	47.6
	2006	11.4	29.8	4.0	11.2	34.3

자료: Andersen und Woyke(2003) 부록;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Germany](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Germany)(검색일: 2006.07.11).

주 및 시의회 선거를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표 10> 참조). 특히 동 베를린 지역에서 민사당은 1995년 이후 제1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센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지역에서만 가장 최근 선거에서 하락세를 보였을 뿐,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 중에서도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민사당은 1999년과 2004년에 모두 제2당을 차지했으며, 특히 2004년에는 28.0%를 획득하여 31.9%를 획득한 사민당을 바싹 추격했다. 작센-안할트 주에서도 민사당은 2002년에 21.0%를 차지해 2위를 차지한 사민당과 불과 0.3%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튀링엔 주도 민사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민사당이 2004년에 26.1%를 얻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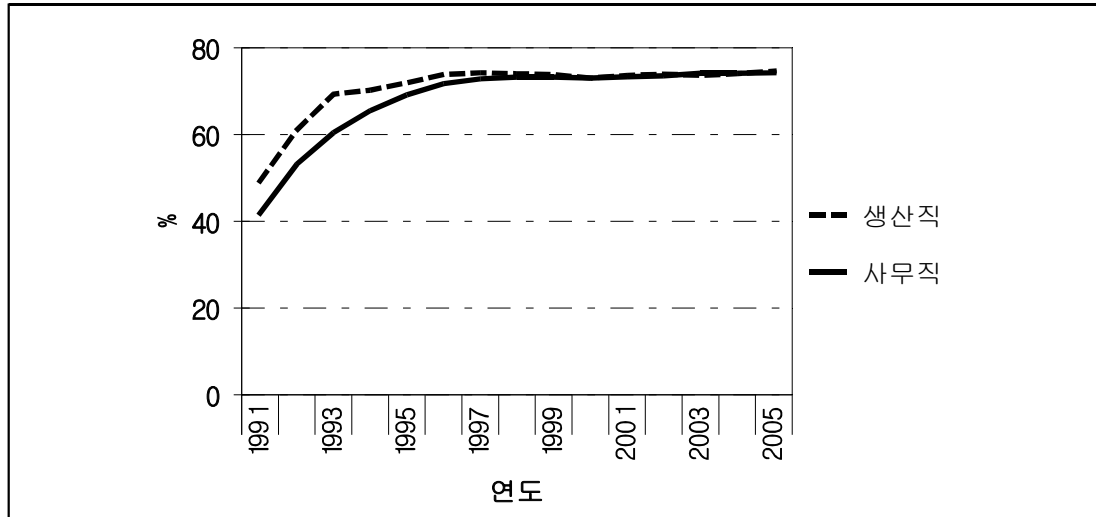
이러한 선거결과는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구동독 주민들의 의식에 잘 반영되어 있다. 경제가 상호 근접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구동독 주민은 오히려 24%에서 18%로 줄어들었으며, 자신을 통일독일의 국민이 아니라 구동독 인민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거꾸로 36%에서 52%로 늘어났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3.05.19). 이것은 단기적으로 실질소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동·서독 임금수준의 동일화 지체와 고용구조의 불균형에 따라 서독자본주의 선택의 주 이유였던 사회안전망과 소득향상에 대한 장기적 전망의 퇴색이 가져온 결과였다.

실제 구 동·서독 주민들의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 있다. <표 11>에서 보다시피 통일 직후인 1991년에 구동독 지역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구 서독지역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5년 후인 1996년에 생산직과 사무직이 모두 70%를 넘어 각각 73.8%와 71.7%로 나타나 일정하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6년도에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70%선을 넘은 후에는(생산직은 1994년부터 70.2% 이상, 사무직은 1996년부터 71.7% 이상) 다시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그림 1> 참조). 2001년에 생산직은 오히려 감소하여 73.6%를 보였으며, 사무직은 소폭 상승하여 73.3%를 보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2001년에 비해 구동독지역의 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불과 1.0% 포인트, 사무직의 경우 0.9% 포인트만 구서독 지역 수준으로 더 접근해 갔다.

〈표 11〉 동·서독 월평균 임금 수준 비교 (EURO: 제조업, 무역, 상업, 금융보험)

종사상 지위	1991		1996		2001		2005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생산직	1,862	918	2,202	1,626	2,440	1,795	2,626	1,960
사무직	2,277	955	2,778	1,993	3,167	2,321	3,538	2,626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그림 1〉 구서독지역 대비 구동독 지역 임금수준  
(%: 제조업, 무역, 상업, 금융보험)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실업과 관련해서도 1994년 12월까지 구동독지역 광공업부문에서 70%의 일자리가 상실되었으며(Nolte und Sitte 1995, 31), 1996년 구동독지역 실업률은 예상치(15.9%)를 넘어 16.7%(구서독지역 10.10%).3%)에 달했고, 1998년에는 구서독지역(10.5%)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9.5%를 기록했다(<표 12> 참조). 그 이후 200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서독지역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표 12〉 동서독 실업률 비교

(연평균, %)

	1991	1993	1996	1998	2002	2005
구동독지역	10.3	15.8	16.7	19.5	17.9	18.8
구서독지역	6.3	8.2	10.1	10.5	8.1	9.9
전국	7.3	10.5	11.5	12.3	10.1	11.7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 IV. 결론

영국과 독일의 이념 갈등은 광공업 분야의 축소와 서비스업의 확대 및 노동자층의 다양화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양당의 합의 정치에 의해 크게 완화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196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지는 사민주의적 혹은 케인즈주의적 합의가 그 첫 번째이고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합의가 그 두 번째이다. 두 차례의 유가 파동과 산업구조의 변동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도 사민주의적 합의는 비록 이전처럼 공고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버츠헤리즘의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독일에서도 사민당-자민당 연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지되고 양대 정당의 거의 동일한 노동자층 지지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합의 정치와 그에 따른 이념갈등의 완화는 두 국가에서 모두 양대 정당의 실용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복구기의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양대 정당들은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정치는 또한 역사적으로 영국의 산업 민주주의 추구와 독일의 라살적 국가의존성이라는 특수하면서도 계급화해적 일반성을 띤 사회이념적 특징에도 기인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치가 본격화된 1979년 이후 영국과 1983년 이후 독일에서 사정은 달라졌다. 영국과 독일에서 보수당 정부와 보수-자유 연정이 각각 출범함으로써 민영화와 탈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치가 가속화된 반면, 노동당과 사민당은 여전히 케인즈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 시기에 양국의 이념적 간격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간극이 다시 좁아진 것은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케인즈주의를 포기한 노동당과 사민당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양대 정당의 정책은 다시 수렴해갔고 지지층 분포도 다시 근접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후반의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는 사민주의적 합의 정치와는 사뭇 다른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합의 정치라는 형식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민주의적 합의 정치가 이룩한 사회안정망들을 축소함으로써 내용면에서는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대 정당의 지지율 분포는 다시 유사해져 갔지만, 전통적인 지지자층의 기권이 증가함으로써 투표참여율 하락으로 표현되는 정치 무관심은 증가했다.

한편 재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독일의 경우는 기존의 이념 갈등이 완화되는 대신 동서독간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새롭게 증첩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2005년 선거에서 민사당은 전 구동독 지역에서 제2당으로 부상했으며,



동베를린에서는 제1당의 위치를 유지했다.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감의 증대와 함께 지역 갈등의 심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계급에 따른 이념적 갈등은 주로 양대 정당의 정치적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대 정당이 이념적 갈등과 정쟁을 심화할수록 사회적 갈등은 그만큼 악화되는 반면, 합의 정치로 국가 정책을 해결해 가면 사회적 갈등도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완화와 사회적 통합은 합의 정치의 내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가 시민주의적 합의 정치에 비해 갈등 완화 효과가 적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여론을 살피고 민생을 돌보는 합의 정치가 사회적 통합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김수행·정병기·홍태영. 2006.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병기. 1997.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여름호), 61-86.
- 정병기. 2002. “라쌀의 국가관과 독일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영향과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285-301.
- Andersen, Uwe und Wichard Woyke, Hrsg. 2003,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Bentley, Roy, Alan Dobson, Maggie Grant and David Robert. 1999. *British Politics in Focus*. Ormskirk: Causeway Press.
- Budge, Ian, Ivor Crewe, David McKay and Ken Newton. 1998. *The New British Politics*. Harlow: Longman.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0. *Wirtschaft heu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Butler, David and Donald Stokes. 1971. *Political Change in Britain*. London: Penguin.
- Curtice, J. and B. Seyd. 2003. “Is there a Cri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20th Report*. London: Sage.

- Cusak, Thomas R. and Wlof-Dieter Eberwein. 1993. "The Endless Election: 1990 in the GDR." Dirk Berg-Schlosser and Ralf Rytlewski, Hrsg. *Political Culture in Germany*, 188-212. London: Macmillan.
- Datenreport 2004*, Köl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Datenreport 2006*, Köl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Denver, David. 1994. *Elections and Voting Behaviour in Britain*. 2nd edition.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Dörre, Klaus. 1999. "Die SPD in der Zerreißprobe: Auf dem 'Dritten Weg'." Klaus Dörre, Leo Panitch und Bodo Zeuner, u. a., *Die Strategie der 'Neuen Mitte': Verabschiedet sich die moderne Sozialdemokratie als Reformpartei?*, 6-24. Hamburg: VSA.
- Eichner, Harald. 1986. *Zwischen Privatisierung und Solidarität*. Berlin: Neue Gesellschaft.
- Evans, Geoffrey, Anthony Heath and Clive Payne. 1999. "Class: Labour as a Catch-All Party?." Norris and Evans, eds. *Critical Elections: British Parties and Voters in Long-term Perspective*, 87-101. London: Sage.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3.05.19.
- Friedrich, Horst und Maria Kraft. 2000. "Gesamtwirtschaftliche Entwicklung und Wirtschaftspolitik." Helmut Keim und Heiko Steffens, Hrsg. *Wirtschaft Deutschland: Daten - Analysen - Fakten*, 291-356. Köln: Wirtschaftsverlag Bachem.
- Halsey, A. H. 1987. "Society and Class", in Martin Burch and Michael Moran, eds., *British Politics: A Reader*, 27-41.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eath, A. R. Jowell, and J. Curtice, G. Evans, J. Field and S. Witherspoon. 1991. *Understanding Political Change: the British Voter 1964-1987*. Oxford: Pergamon Press.
- Hickel, Rudolf. 1984. "Sozialpolitik in Geschichte, Theorie und Praxis." Karl Diehl und Paul Mombert, Hrsg. *Sozialpolitik: Ausgewählte Lesestücke zum Studium der politischen Ökonomie*, V-LIV. Frankfurt a. M., Berlin und Wien: Ullstein.
-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Germany](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Germany)(검색일: 2006.07.11).
- <http://stat.tagesschau.de/wahlarchiv/wid246/umfragejob0.shtml>(검색일: 2005년 9월

19일).

- Jun, Uwe und Robin Celikates. 2000. "Die Transformation der Sozialdemokratie: Der Dritte Weg, New Labour und die SPD."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Jg. 10, Nr. 4, 1501-1530.
- Kavanagh, Dennis, and David Richards, Martin Smith, and Andrew Geddes. 2006. *British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lingemann, Hans-Dieter. 1969. *Bestimmungsgründe der Wahlentscheidung: Eine regionale Wahlanalyse*. Meisenheim am Glan: Anton Hain.
- Lipset, Samuel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Lipset and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1-64. New York: Macmillan.
- Nolte, Dirk und Ralf Sitte. 1995. "Aufschwung Ost: Bilanz und Ausblick." Dirk Nolte, Ralf Sitte und Alexandra Wagner, Hrsg.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inheit Deutschlands. Eine Bilanz*, 27-47. Köln: Bund-Verlag.
- Oberender, Peter und Michaela Volk. 1990. "Soziale Sicherung zwischen staatlicher Vorsorge und Eigenverantwortung." Ulrich Sarcinelli, Hrsg. *Demokratische Streitkultur: Theoretische Grundpositionen und Handlungsalternativen in Politikfeldern*, 311-329.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Pulzer, P. G. 1967.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lections*. London: Allen & Unwin.
- Sanders, David. 1997. "Voting and the electorate." Dunleavy, et al., eds.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5*. London: Macmillan.
- Schmitt, Hermann. 1992. "Di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Alf Minzel und Heinrich Oberreuter, Hrsg. *Parte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33-171. Köl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Schultze, Rainer-Olaf. 1995. "Widersprüchliches, Ungleichzeitiges und kein Ende in Sicht: Die Bundestagswahl vom 16. Oktober 1994."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Jg.26, Nr.2, 325-352.
- Statistisches Bundesamt, 선거와 인구 자료.
- Strachey, R. 1928. *The Cause*. London: Virago.
- Usher, K. 2003. "Is Rising Inequality a Problem? The UK Experience." Browne and Diamond, eds. *Rethinking Social Democracy*. London: policy Network.

- Vorstand der SPD, Hrsg. 1999. *Grundsatzprogramm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Bonn.
- White, S. 2001. *New Labour: The Progressive Future?*. Basingstoke: Palgrave.
- Winter, Thomas von. 1996. "Wahlverhalten in den östlichen Bundesländern: Wahlsoziologische Erklärungsmodelle auf dem Prüfstand."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Jg.27, Nr.2, 298-316.

제 2 주제  
성평등과 세대간 문화갈등

#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갈등 실태 및 해결방안

박 영 균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갈등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책임자 : 박 영 균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치관의 정립이나 자아개념 형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 등 새로운 사회양상의 변화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에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 다원화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만한 다양한 문화적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청소년과 성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발달하지 못하여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갈등은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갈등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집단 간 위화감과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적절한 수준의 갈등은 역동적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으나, 지나친 사회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국가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능력과 가변성을 지닌 유연한 존재이다.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고 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보다 건강한 시민으로 성

장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문화적 갈등 현상과 이러한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청소년 문화갈등 해소 및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그 원인과 현상을 밝혀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터하여 청소년들이 겪는 문화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시민세대로 통합해 내기 위한 세대 간 문화소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화갈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분석이며, 이에 근거하여 연구를 통해 세대 간 문화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학교별, 계층별로 부모와의 사이에서 겪고 있는 문화갈등 현상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소통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제가 청소년의 문화갈등 및 세대 간 문화소통 방안이므로 가능한 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문화갈등에 대해 다루려고 하였으며, 기타 영역의 갈등이나 세대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영역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청소년과 부모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것이나 지역별, 성별, 학교급별 및 특성별로 모든 청소년과 성인계층을 골고루 대표하는 집단은 아니다. 가능한 많은 영역에 걸쳐 갈등을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화갈등이라 하더라도 이 연구에서 모든 갈등현상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다. 설문대상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학교급, 학교특성, 그리고 학년별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료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기초 데이터는 설문지를 통해 확보하였기 때문에 설문지에 응답한 청소년과 그 부모들의 성실성에 따라 결과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모든 지역과 학교, 그리고 모든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문화갈등

청소년기는 부모-자녀 간 불일치가 심하여 생활 주기 중 가족구성원간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고 가족의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때라고 하였다(Olson 외, 1983). 청소년 문화란 청소년 집단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로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윤리의식과 규범, 태도, 언어, 복장, 행동, 인간관계, 오락 및 여가생활 등 그들의 내면적인 의식구조뿐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양식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황리리, 1996).

정보의 공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더 고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세대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김종명, 2005). 부모나 성인집단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기존의 사고를 고수함으로써 더 큰 세대차가 생기고 갈등이 증가하며,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변화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갈등은 점차 고조되기도 한다(김명자 외, 2003).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와 도시화, 계층구조의 평준화, 정보의 다양화, 대중매체의 첨단화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우리의 전통적 의식구조와 가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가치질서와 규범문화의 정립을 강요하여 왔다(김경옥, 2004). 급격한 사회변동과 서로 다른 성장배경에 의한 의식, 행동, 생활양식의 괴리가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세대 간 차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김윤정 외, 2005).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전통적 규범의 와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는 고령노인의 급증, 산아제한 정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급격한 저출산 문제가 초래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족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어서, 세대 간의 잠재적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윤정 외, 2005; 한정란 외, 2006). 부양의식에 대한 세대 간 의견 차이도 세대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달적 단계를 달리 하는 신세대와 구세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반항적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장년기 이후는 보수적이고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많아지는 측면이 있다(구자숙 외, 1999; 한정란 외 2006). 또한, 성장단계에 따른 시각(perspective)의 차이도 중요하다. 청년 혹은 청소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시각은 주로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장년기 이상의 세대에서는 이제까지 거쳐 온 다양한 위치들과 관련된 시각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구자숙 외, 1999). 또한 사춘기 이후에 오는 소위 제2반향기로부터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가치관을 이제 자기의 인식으로 개조함으로서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기성세대의 현실주의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빚게 된다(한승희 외, 1992). 세대별 변화의 수용 능력 차이가 세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경향과 변화에 대한 학습과 수용 속도가 빠르는데 비해, 장년 이후로 갈수록 학습속도 자체가 느려질 뿐 아니라, 기존에 학습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학습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학습과 수용 혹은 적응이 그만큼 더 힘들게 된다(구자숙 외, 1999; 한정란 외, 2006).

## 2. 세대 간 의식의 차이

### 1) 신뢰의식

인간이 속한 사회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가족의 구성원은 심리적·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관계를 정립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미숙, 2002).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며, 자녀의 올바른 사회화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셀리그만(Seligman, 2006)은 확신과 신뢰에 관한 개념을 구분하여 소개한 바 있다. 즉 ‘확신(confidence)’은 사람들이 상호작용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거나, 혹은 다른 것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와 달리 ‘신뢰(trust)’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할지 모를 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였다.<sup>1)</sup>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관한 한 연구(김의철·박영신, 2004a)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신뢰하기 보다는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혹은 그 사람의 관계역할 자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

1)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한 2006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에 국제워크숍 발제자로 초청한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의 아담 셀리그만(Adam Seligman) 교수의 발표에 대해 세미나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더욱 명확히 규명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의한 무조건적 신뢰의 경향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외, 2004). 즉 자녀가 범법행위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긴다(김의철·박영신, 2004a).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가 부모는 편안하고 따뜻하여 의지가 되고, 또 나를 이해하고 믿어주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도 아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부모는 교사들을 자기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에서든 개인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의철·박영신, 2004c). 즉, 성실성이나 책임감, 정직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배우자 신뢰나 교사 혹은 부모에 대한 신뢰에서 성실과 정직함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성에 대한 류완정(2004)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신뢰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결과중심적인 사고보다 과정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실함과 정직의 강조는 가정윤리가 바로 서고 나서 사회윤리가 확립될 수 있고, 성실함을 통해 수기(修己)해야 한다는 유교철학의 작용인 것으로 보인다(김의철·박영신, 2004c).

## 2) 가족의식

가족관계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는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 내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세대차는 발생하며 점점 더 넓게 확대된다. 한국의 문화는 유교적 집단관계 문화로써 개인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관계 망 속에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한국은 산업현장에서도 온정주의가 나타나 토착적인 개념으로써 가족집단주의 중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박영신·김의철, 2000).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관행이나 합리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회문화의 논리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 가치와 관행의 격차가 가장 큰 집단도 가족이다(김혜영, 2005). 특히, 한국인의 가족중심문화에 따라 무조건적인 신뢰와 같이 독특한 부모자녀관계도 영향을 받았다(박영신 외, 2006).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에서도 화목한 가정이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N세대가 가상공간에서 공동체를 주관하여, 가상공간 안에서 일치감을 경험한다거나 가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현실의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실제 부모와의 세대차이가 심화된다고 하였다(허운나, 1999). 구자숙 등(1999)도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갈등은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자녀의 반발과 그에 따른 부모의 통제력 강화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녀들이 전통적인 사회 규범과 가치를 부모와 공유하지 못할 때 세대 격차는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되며, 세대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때 청소년의 비행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3) 정치의식

청소년과 성인세대 간의 다른 삶의 여정은 한국사회의 인식과 신뢰에 대한 세대차이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여왔다. 한국사회는 한국전쟁과 군사정권, 민주화 세력에 의한 집권 이후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박영신 외, 2006). 박영신 등(2006)의 연구결과,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성인집단은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부정부패하며, 보수적이며, 연고주의 및 불평등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성인 집단에서 높은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성인세대의 열망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경찰서, 노동조합, 정당, 국회와 같은 기관을 성인들이 부정적으로 보아 불신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집단정체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청소년 네트워크 문화 형성, 미군 장갑차 사고로 인한 청소년의 촛불집회, 월드컵 길거리응원, 더 나아가 분명한 정치행동과 의식표현은 성인세대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양상의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 청소년이 북한을 신뢰하고 미국을 불신하는 경향에서부터 통일을 반대한다는 반응은 기존 정체성을 뒤집는 결과로 보인다(박영신 외, 2006).

### 4) 세대 간 의식차이

세대차는 문화의 차이이며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허용의 부족은 갈등의 단초가 된다. 작게는 옷을 입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음식 등과 같은 개인적 기호의 차이에서부터 더 나아가 세계관, 직업관, 인생관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일상적 삶을 지배하

는 준거의 차이는 잠재적으로나 혹은 현시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나타나는 청소년 관련 이슈 중 차별문제나 두발자유화 등이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화 되는 이슈들은 정보사회에서 기존의 권위관계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두려움과 저항이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윤옥경, 2000). 세대간의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다른 성장배경에 의해 의식, 행동, 생활양식 등 괴리에서 오는 세대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부모사이에서 정서 및 시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김윤정·이창식, 2005).

이러한 세대차이 혹은 세대갈등은 심지어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앞질러가는 세대 뿔기(generation lap) 현상까지도 인정해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으며(김윤정, 2005), 세대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갈등(generational conflict)은 세대가 영속적인 갈등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때로 일정한 사회적 국면에서 갈등의 단위가 되어 격렬하게 갈등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질적 이해의 상충, 권력과 통제를 둘러싼 충돌, 문화적 차이 혹은 편견에 따른 충돌,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따른 저항 등이 세대현상과 관련하여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구자숙 외, 1999).

### 3. 청소년과 부모세대 간 문화소통

김연자(2002)는 인간의 인격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자녀 간 관계이며, 이것은 또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셀리그만(Seligman, 2006)은 통합의 가장 원천적 출발점은 이해(understanding)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즉 의례의 민주화를 통해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지게 되는 짐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의례는 사람들에게 ‘만약에(what if)’와 같은 ‘가정의 세계(subjunctive universe)’를 만들어 주어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례를 통해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에 상호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이란 의미가 교환되는 상징적 교류과정이며,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이다(이옥렬, 2002). 삶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가족집단은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장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유지하는데 관계되어 있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며, 부모와 자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강해자, 2001; 김연자, 2002).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들을 자치적이고 발전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록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 되려면 상급지위에 있는 부모가 개방, 감정이입,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가지고 경청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 부모와 자녀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으로써 자유로운 대화를 할 때 세대 간의 차이를 좁혀 주며 몰이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켜주고 의미 있고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연자, 200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감성지능은 원활하게 발달하게 되고, 부모-자녀 간에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표집대상

전국 무선 표집을 위해 지역을 7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하였다. 서울의 경우는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하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중학교가 13개 학교, 고등학교가 8개 학교로 총 21개 학교가 무선 표집되었다.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수거된 질문지 수는 3,289개였다. 그 중에서 청소년 질문지가 1,127개(남 555, 여 572), 아버지 질문지가 1,075개, 어머니 질문지가 1,087개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집단 중에서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14세였으며, 고등학생 경우는 17세였다. 성인 전체 집단의 평균 연령은 44세였으며 연령분포는 28세에서 69세였다. 청소년 집단 전체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분석대상 성인 집단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대체로 학력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졸 집단이 많아서 4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성인집단의 직업 분포는 남자 집단의 경우 자영업과 사무직이 20% 이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숙련직과 전문직이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가정 주부였다. 청소년 집단 전체적으로 본인의 가정 경제수준을 중간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70.5%로 ⅔가 넘고, 성인 집단의 경우에 남자와 여자 모두 가정 경제수준이 중간이라는 반응이 70.7%로 나왔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중류층이라는 응답이 74.4%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성인 집단도 중류층이라는 반응을 71.0%가 하여 전반적으로 정상분포의 형태를 보였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청소년용 측정도구는 김명언 등(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FGI 조사결과와 신뢰도에 따라 일부 변인은 수정하고 일부 변인은 삭제하였으며 일부 변인은 새로이 제작하여 보완하였다. 대체적으로 .7을 넘는 신뢰도를 보여줬고, .49~.85의 분포를 보였다.

## 3. 실시 및 분석방법

각 지역별로 무선 표집된 학교의 책임을 맡은 교사가 진행하였다. 모든 질문지에 개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질문지의 상단에 동일한 ID 번호를 부여하여 학생과 그 부모를 분류하였다. 지역차를 검토하기 위해 세대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기 전에 도시와 농어촌 지역별 종속변인들에서의 차이를 t-검증하였다. 세대차이에 대한 분석은 모든 종속변인들에 대해 세대집단별 성별 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더불어 독립변인의 각 하위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도 구함으로써, 이원변량분석에서의 유의한 차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혹 종속변인이 연속변인이 아닌 경우는 세대집단별 성별 종속변인에서의 차이를 X2 검증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세대차이 지각, 문제와 대처

#### 1)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학업, 생활, 여가/기호 영역별 세대차이 지각

세대차이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한 결과, 지역별로 생활에 대한 세대차이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에서

농촌보다 생활면에서의 세대 차이를 더욱 지각한다. 그러나 학업이나 여가/기호 면에서는 지역별로 세대 차이에 대한 지각에서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1〉 지역별 세대차이 지각 t-검증

지역별	학업		생활		여가 / 기호		세대차이: 전체	
	M (SD)	t	M (SD)	t	M (SD)	t	M (SD)	t
도시	2.80 ( .75)	.57	2.46 ( .75)	2.47 *	2.48 ( .67)	.19	2.58 ( .63)	1.29
농어촌	2.78 ( .72)		2.39 ( .72)		2.48 ( .66)		2.55 ( .61)	

\*  $p<.05$

세대차이 지각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학업면에서 세대 차이를 지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대차이 지각에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여가 및 기호에서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생활에서의 세대 차이를 적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집단별 성별 세대차이 지각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세대집단별로 전체 세대차이 지각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고, 하위변인별로는 생활에서의 세대차이 지각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학업과 여가/기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전체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주로 생활 영역에서의 세대차이 지각을 반영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가/기호에서의 세대차이 지각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세대집단별 성별 세대차이 지각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학업		생활		여가/기호		세대차이: 전체	
	MS	F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 (1)	1.06	1.92	112.50	219.32 ***	.04	.09	15.55	41.02 ***
성별(2)	1.01	1.84	.12	.24	7.77	17.63 ***	1.32	3.47
(1) x (2)	1.74	3.16	.48	.93	.01	.01	.56	.14

\*\*\*  $p<.001$

## 2)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 인식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 t-검증 결과를 보면, 전체에서와 하위변인 2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보면 심리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 모두에서 도시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시 지역 사람들이 더욱 세대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별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 인식 t-검증

지역별	심리적 갈등		관계적 갈등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인식: 전체	
	M (SD)	t	M (SD)	t	M (SD)	t
도시	2.67 ( .95)	5.64 ***	2.02 ( .81)	5.28 ***	2.31 ( .79)	5.84 ***
농어촌	2.47 ( .94)		1.85 ( .74)		2.13 ( .75)	

\*\*\*  $p < .001$

세대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의 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보면, 심리적 갈등은 보통 이상이 되고, 관계적 갈등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세대차이로 인해 문제가 되었을 때, 대체로 짜증나고 답답한 등의 개인 심리적인 문제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와 거리감을 느낀다든가 부모와 대화를 포기하고 무시하거나 부모가 싫어지는 것과 같은 관계적 갈등은 적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세대집단별 성별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 인식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심리적 갈등		관계적 갈등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인식: 전체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 (1)	27.18	30.82 ***	.01	.01	8.92	14.59 ***
성 별 (2)	42.32	48.00 ***	.14	.22	4.45	7.27 **
(1) x (2)	1.17	1.44	.12	.18	.23	.38

\*\*  $p < .01$ , \*\*\*  $p < .001$

<표 4>에서 세대집단별로는 심리적 갈등과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심리적 갈등에서는  $p < .001$  수준의 차이를, 전체에서는  $p < .01$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에서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의 심리적 갈등 평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대별로는 청소년집단이, 성별로는 여자가 세대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더욱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심리적 갈등이란 짜증이 나고 답답하며 우울한 등의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 3)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대처

자기조절과 적극적 해결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회피와 사회적 지원 추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회피와 사회적 지원 추구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도시지역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덮어 두거나, 갈등의 대상인 부모나 자녀와 대화하지 않는 회피의 경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친구 등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다른 사람들과 컴퓨터 채팅을 하는 등의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경향도 도시 지역 사람들에게서 더욱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표 5〉 지역별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대처 t-검증

지역별	자기조절		회피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	
	M (SD)	t	M (SD)	t	M (SD)	t	M (SD)	t
도시	3.44 ( .63)	-1.79	2.49 ( .67)	3.36 ***	3.19 ( .73)	-1.91	3.16 ( .86)	2.61 **
농어촌	3.48 ( .63)		2.40 ( .65)		3.24 ( .69)		3.08 ( .85)	

\*\*  $p<.01$ , \*\*\*  $p<.001$

한국 사람들은 세대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기조절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적극적 해결이나 사회적 지원 추구를 많이 하였다. 반면에 회피의 대처방식은 낮은 값을 보였다. 갈등 대처 하위변인 네 가지 모두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사회적 지원 추구에서와 회피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표 6〉 세대집단별 성별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대처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자기조절		회피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	
	MS	F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1)	32.11	82.80 ***	57.53	134.59 ***	230.71	522.45 ***	23.99	34.32 ***
성 별(2)	.86	2.23	3.46	8.08 **	.37	.83	86.79	124.19 ***
(1) x (2)	3.23	8.33 **	.23	.53	5.97	13.53 ***	2.59	3.71

\*\*  $p<.01$ , \*\*\*  $p<.001$

한편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청소년 시기에는 남자가 자기조절 대처를 더 많이 하나 성인 시기에는 여자가 자기조절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해결 대처의 경우도 청소년 시기에는 남자가 적극적 해결을 더 많이 하나, 성인 시기에는 여자가 더욱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하는 차이가 있었다. 세대집단별로 성인이 자기조절과 적극적 해결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결국 성인 여자들이 나타내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 2.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생활목표와 기대

### 1) 생활목표의식

〈표 7〉을 보면, 생활목표의식의 네 하위변인 중에서 부귀영화와 사회봉사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정화목, 자아실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하위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사회봉사의 평균은 농어촌이 더 높고, 부귀영화의 평균은 도시가 더 높았다. 따라서 도시 지역 사람들은 생활목표의식으로 부귀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농어촌 지역의 사람들은 사회봉사의 생활목표의식을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표 7〉 지역별 생활목표의식 t-검증

지역별	사회봉사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	
	M (SD)	t	M (SD)	t	M (SD)	t	M (SD)	t
도시	3.43 ( .62)	-3.00 **	4.14 ( .65)	-.59	3.91 ( .65)	1.40	3.39 ( .68)	4.45 ***
농어촌	3.50 ( .63)		4.15 ( .61)		3.88 ( .65)		3.28 ( .62)	

\*\*  $p<.01$ , \*\*\*  $p<.001$

세대집단별로 네 개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참조>. 성별로는 가정화목( $p<.01$ )과 자아실현( $p<.05$ )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가정화목( $p<.001$ )과 자아실현( $p<.05$ )에서는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이 있었다. 평균비교결과 청소년들이 가정화목이나 자아실현 및 부귀영화와 같은 생활목표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인들은 사회봉사와 관련된 생활목표가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정화목과 자아실현을 생활목표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세대집단별 성별 생활목표의식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사회봉사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	
	MS	F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1)	5.33	13.62 ***	27.11	68.67 ***	90.74	230.72 ***	28.52	65.89 ***
성별(2)	.04	.09	2.86	7.25 **	1.69	4.30 *	.14	.32
(1) x (2)	.52	1.33	6.77	17.15 ***	3.93	9.99 **	.07	.15

\*  $p<.05$ , \*\*  $p<.01$ , \*\*\*  $p<.001$

한편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가정화목과 자아실현의 경우 모두, 청소년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높은 경향을 나타내나, 성인기에는 그러한 경향이 약화되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높은 변화가 나타났다.

## 2) 희망하는 직업

지역별로 희망하는 직업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력 있는 직업( $p<.01$ )과 안정된 전문직(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기 직업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도시 사람들일수록 경제력이 있고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지역별 희망하는 직업 t-검증

지역별	경제력 있는 직업		안정된 전문직		인기직	
	M (SD)	t	M (SD)	t	M (SD)	t
도시	2.90 ( .86)	2.69 **	3.61 ( .73)	2.48 *	2.51 ( .82)	-1.48
농어촌	2.81 ( .94)		3.53 ( .75)		2.56 ( .82)	

\*  $p<.05$ , \*\*  $p<.01$

평균비교결과 대체로 안정된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인기 직업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세대집단별 성별 희망하는 직업에서의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집단별로 세 하위직업 유형 모두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인기직을 제외하고 경제력 있는 직업과 안정된 전문직에서 모두  $p<.001$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경제력 있는 직업에서는 세대집단별 성별로 상호작용 효과( $p<.001$ )가 확인되었다. 즉, 성인은 안정된 전문직에서의 평균이 높고, 청소년은 경제력 있는 직업이나 인기직에서의 평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성인들은 인기직에 대한 평균이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질적으로 다른 유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경제력 있는 직업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여자는 이와 대조적으로 안정된 전문직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표 10> 세대집단별 성별 희망하는 직업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경제력 있는 직업		안정된 전문직		인기직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 (1)	23.81	30.94 ***	97.30	191.12 ***	72.70	111.41 ***
성별 (2)	20.34	26.43 ***	15.54	30.53 ***	.01	.01
(1) × (2)	11.78	15.31 ***	1.05	1.96	.19	.29

\*\*\*  $p<.001$

### 3) 학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기대

학업 계속에 대한 기대는 연속 변인이 아닌 유목화된 변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chi^2$  분석을 하였다. 대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박사 졸업이  $\frac{1}{4}$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석사 졸업이고, 고졸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 준다. 학업 계속에 대한 기대에 대해 지역별( $p<.001$ ) 세대집단별( $p<.001$ )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로도( $p<.05$ )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 석사 졸업이나 박사 졸업에 대한 기대가 농어촌 지역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집단별로 분석하였을 때, 성인 집단이 석사 졸업과 박사 졸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로는 도시 사람들이, 세대집단별

로는 성인이 더욱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즉 청소년 자녀들이 자신의 학업 계속에 대한 기대 수준보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 수준이 더욱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 3.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 1) 자기효능감

t-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지역별 차이는  $p<.05$  수준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든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세대집단별 성별 자기효능감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사회성 효능감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관계 효능감		자기주장 효능감		정치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	
	MS	F	MS	F	MS	F	MS	F	MS	F	MS	F
세대 집단별(1)	.01	.02	31.60	71.08 ***	6.40	16.86 ***	2.19	5.05 *	.65	1.09	27.06	61.18 ***
성별(2)	.89	1.81	33.17	74.60 ***	.19	.50	11.59	26.75 ***	3.80	61.93 ***	29.23	66.34 ***
(1) x (2)	14.63	29.80 ***	3.65	8.22 **	.09	.23	2.15	4.97 *	2.78	4.68 *	1.24	2.81

\*  $p<.05$ , \*\*  $p<.01$ , \*\*\*  $p<.001$

이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집단별로 스트레스대처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이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장효능감( $p<.05$ )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모두  $p<.001$  수준의 의미로운 차이가 있었다.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사회성효능감( $p<.001$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p<.01$ ), 정치효능감( $p<.05$ )에서 나타났다. 평균비교결과 청소년이 관계효능감은 더 높으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자기주장효능감이 모두 일관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정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자가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자기주장효능감 및 정치효능감이 현저하게 높았는데, 자기주장효능감과 정치효능감 경우는 남자들이 성인기에 더욱 높아짐으로써 여자와의 효능감 차이가 현저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 경우는 여자들의 효능감이 상당히 증진됨으로써 남녀 차이가 좁혀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별히 사회성효능감 경우는 청소년기에는 여자들이

높지만 성인기에는 남자들이 높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매우 강력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2) 삶의 질

지역별로 삶의 질 인식에서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지각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위변인별로는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하위변인 사회적 안정( $p<.001$ )과 경제적인 여유(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 농어촌보다 경제적인 여유에서는 더 높은 평균을 보이나, 사회적 안정에서는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여유의 면에서 도시 지역 사람들이 더욱 삶의 질을 높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일수록 자기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해서는 더욱 긍정적인 지각을 하나,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측면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지역별 삶의 질 t-검증

지역별	가정의 화목		경제적인 여유		원만한 인간관계		개인적인 성취	
	M (SD)	t	M (SD)	t	M (SD)	t	M (SD)	t
도시	3.82 ( .73)	.13	3.23 ( .75)	2.47 **	3.61 ( .62)	1.31	3.16 ( .69)	1.84
농어촌	3.82 ( .69)		3.16 ( .76)		3.58 ( .65)		3.11 ( .67)	

지역별	건강		자기조절		사회적 안정		전체	
	M (SD)	t	M (SD)	t	M (SD)	t	M (SD)	t
도시	3.20 ( .72)	-1.84	3.34 ( .69)	-.39	2.77 ( .73)	-3.63 ***	3.31 ( .51)	-.09
농어촌	3.26 ( .69)		3.35 ( .70)		2.87 ( .72)		3.31 ( .53)	

\*\*  $p<.01$ , \*\*\*  $p<.001$

평균비교 결과를 정리하여 볼 때, 자신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영역으로서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 외에도 원만한 인간관계나 자기조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점에서 자신의 삶의 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정의 화목이나 원만한 인간관계로 인해 행복을 느

끼고 있으며, 청소년 집단 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그러한 면에서의 삶의 질이 높으나, 성인 집단 내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이 성인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과 관련하여 본인의 삶의 질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성인이 됨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음을 편하게 갖는 등 자기조절과 관련된 삶의 질 면에서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지각하나, 그러한 성차이가 성인집단은 청소년보다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4.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가족관련 가치

##### 1) 혼전 성관계 허용에 대한 인식

지역별, 세대집단별, 성별로 각각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허용된다는 반응이 10% 이상으로 농어촌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농어촌에서는 결혼한 부부만 허용된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세대집단별 분석에서는 청소년이 도시지역과 같고, 성인이 농어촌 지역과 같은 반응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성별 분석에서는 남자가 도시 지역과 같고, 여자가 농어촌 지역과 같은 반응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든 하위집단에서 결혼한 부부만 혼전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만, 농어촌보다는 도시 지역 사람들이,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결혼에 대한 지각

지역별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반응은 농어촌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세대집단별로는 청소년이 도시와 같고 성인이 농어촌과 같은 패턴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농어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여자가 도시와 같은 반응이었다. 전반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 과반수지만,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반응을 합하였을 때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반응의 3이나 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사람들이, 세대별로는 성인들이, 성별로는 남자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고 있고, 도시 지역 주민들일수록 그리고 청소년들일수록 여자들일수록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 t-검증결과 재미있는 사람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p<.01$ ), 나머지 하위변인들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평균비교결과 도시 사람들이 이상적인 결혼상대로 재미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훌륭한 인격의 평균이 4.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력과 재미있는 사람이 3.85로 두 번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멋있는 외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평균이 낮았지만, 여전히 평균값이 3.00 보다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집단별로 볼 때, 재미있는 사람, 경제력, 멋있는 외모에서 모두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3 참조>. 그리고 훌륭한 인격( $p<.05$ )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도 세대집단별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사람, 경제력에서 모두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멋있는 외모( $p<.01$ )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효과도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나타났다. 경제력과 멋있는 외모는  $p<.001$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외에 재미있는 사람과 훌륭한 인격에서는  $p<.05$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재미있는 사람이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훌륭한 인격이나 멋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표 13〉 세대집단별 성별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재미있는 사람		경제력		훌륭한 인격		멋있는 외모	
	MS	F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 (1)	14.47	34.05 ***	14.66	30.60 ***	1.68	4.20 *	115.88	190.12 ***
성별(2)	19.55	46.00 ***	79.15	165.17 ***	1.31	3.27	4.29	7.04 **
(1) x (2)	1.78	4.19 *	40.58	84.68 ***	1.88	4.70 *	8.64	14.17 ***

\*  $p<.05$ , \*\*  $pp<.01$ , \*\*\*  $p<.001$

### 3) 자녀가치

〈표 14〉는 세대집단별 성별 자녀가치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세대집단별로 자녀를 갖는 이유를 보면 심리적 가치에서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사회적 가치나 관계적 가치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서는 세대집단별로 사회적 제약에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p<.01$ ), 개인적인 제약이나 외부적 제약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성별 주 효과를 살펴



보면, 자녀를 갖는 이유로서 사회적 가치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고 심리적 가치에서는  $p<.01$  수준의 차이를 보이거나 관계적 가치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개인적 제약( $p<.001$ )과 외부적 제약( $p<.01$ )에서 차이가 있고, 사회적 제약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자녀를 갖는 이유로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거운 것과 같은 심리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세대집단별 성별 자녀가치 이원변량분석  
〈자녀를 갖는 이유〉

독립변인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관계적 가치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 (1)	.01	.01	5.14	10.44 ***	.03	.05
성별(2)	104.08	143.72 ***	4.45	9.05 **	1.42	2.83
(1) x (2)	25.35	35.00 ***	.01	.02	4.03	8.06 **

\*\*  $p<.01$ , \*\*\*  $p<.001$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독립변인	개인적 제약		사회적 제약		외부적 제약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1)	.10	.11	4.09	6.59 **	.27	.42
성 별(2)	29.16	30.27 ***	.27	.43	5.06	8.03 **
(1) x (2)	.01	.01	1.26	2.03	6.77	10.74 ***

\*\*  $p<.01$ , \*\*\*  $p<.001$

〈표 15〉 t-검증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농어촌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자녀와 대화시간을 검토해 보면 전체 평균이 1.37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평균 1시간 37분 정도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하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낸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값이 높다.

〈표 15〉 지역별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 t-검증

지역별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	
	M (SD)	t
도시	1.33 (1.45)	-2.06 *
농어촌	1.46 (1.84)	

\*  $p < .05$

## 5.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사회인식과 정치 성향

지역별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6>이다. 전체적인 신뢰와 두 하위변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전체와 두 하위변인 모두에서 도시가 농어촌보다 낮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농어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이러한 낮은 신뢰감은 정치/언론기관만이 아니라 교육/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지역별 기관에 대한 신뢰 t-검증

지역별	정치/ 언론기관		교육/ 공공기관		전체	
	M (SD)	t	M (SD)	t	M (SD)	t
도시	2.33 ( .73)	-6.62 ***	2.88 ( .77)	-6.18 ***	2.61 ( .67)	-7.26 ***
농어촌	2.52 ( .73)		3.07 ( .74)		2.80 ( .65)	

\*\*\*  $p < .001$

지역별 정치만족도를 비교한 결과가 도시와 농촌 지역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t = -8.42$ ,  $p < .001$ ).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볼 때, 도시가 농어촌보다 훨씬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 지역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 사람들보다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의 정치에 불만족하고 있다. 지역별 정치성향에서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가 지역별로는 정치성향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5$ ). 하지만, 세대집단별 성별 정치성향 이원변량 분석결과 세대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지역별 세대집단별 성별 통일에 대한 견해를  $\chi^2$  검증한 결과, '자유경제주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견해가 58.0%로서 반수를 넘고 있다. '어떤 체제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반응이 14%나 되고, '통일하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도 10% 이상이 되고 있다. ‘관심없다’는 반응도 7% 이상이 됨으로써, 3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안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세대집단별, 성별 분석 결과 모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로 볼 때, 도시나 농어촌 모두 ‘자유경제주의 유지 방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반응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은 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도시 지역은 두 번째로 ‘통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가 세 번째로 ‘통일하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하는 것이 좋다’가 많은 반면에, 농어촌에서는 ‘어떤 체제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반응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컴퓨터 활용과 일상행동

지역별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사용 시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 컴퓨터 사용 총 시간에서는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욱 사용 총 시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은 세대집단별 성별 컴퓨터 사용시간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사용시간에 있어서 세대집단별 성별 상호작용 및 주효과 모두  $p<.001$ 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하위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됨에 따라 남자는 컴퓨터 오락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여자는 컴퓨터 오락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17〉 세대집단별 성별 컴퓨터 사용시간 이원변량분석

독립변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사용 시간		실제 컴퓨터 사용 총 시간		컴퓨터 오락시간		컴퓨터 채팅시간		컴퓨터 댓글시간	
	MS	F	MS	F	MS	F	MS	F	MS	F
세대집단별(1)	493.59	223.60 ***	17.09	7.92 **	2.34	1.50	4.33	3.92 *	.02	.01
성 별(2)	71.18	32.25 ***	9.50	4.40 *	114.72	73.84 ***	12.9	11.74 ***	7.98	4.43 *
(1) x (2)	71.24	32.27 ***	4.48	2.08	162.15	104.36 ***	9.01	8.17 **	.69	.38

\*  $p<.05$ , \*\*  $p<.01$ , \*\*\*  $p<.001$

## V. 연구결과 논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화갈등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 간 문화소통 증진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의 문화갈등 현상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 문화소통 방안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GI 결과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와의 학업관련 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 학원문제, 시험, 대학입학, 공부에 대한 압력 등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억지로 학원수강을 강요하고, 가고 싶지 않은 학원에 가느라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없으며, 운동이나 놀이 등도 학원시간을 피해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험 때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잘 하는 과목은 무시하고 못하는 과목만 지적하여 혼내는 것, 성적이 나쁘다고 체벌을 하는 것 등이 부모에 대해 느끼는 불만사항이었다.

외모와 관련해서는 특히 의복에 있어 부모와 청소년들의 세대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유명 메이커의 비싸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멋을 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부모는 경제적이며 단정한 스타일의 옷을 선호하고 있어 많은 갈등 상황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여가활동과 관련한 응답은 컴퓨터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채팅을 하고, 평소에도 주로 채팅용어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반면, 부모는 게임을 못하게 하고, 밤늦은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며, 채팅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였다.

가족관계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모는 형제간 차별을 하고, 심지어 강아지를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시키고, 사소한 잘못에도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친구관계에 대해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두 가지 방법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같이 밖으로 어울려 다니면서 사소한 일탈을 즐기기도 하는 현실적인 만남이라면, 둘째는 인터넷 상에서 채팅이나 미니홈피와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어울려 노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도 왕따나 소외되는 친구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관련된 갈등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력에 따른 학업성취 만족감 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아 부모에게 혼날 것이 더 두렵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

부모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강요하며, 청소년들의 관심이나 소질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틀에 맞추어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부모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혼란과 갈등상황이 가중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대화하기 싫어진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부모의 잔소리가 오히려 공부할 분위기를 망친다는 반발적인 응답도 있었다.

학업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모에 관한 규제나 의복에 대한 견해차이가 많은 갈등상황을 유발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형제에 대한 부모의 훈육방법이 오히려 경쟁의식과 불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많았는데, 그 중 희망하는 직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요리사와 같이 개방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공무원이나 촉망되는 전문직 종사자, 정년이 보장된 교사, 대학교수와 같은 안정된 전문직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망하는 직업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세대 간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전망 및 선호도는, 진로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강력한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활목표의식에 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 가정화목을, 성인은 청소년보다 사회봉사를 생활목표의식으로서 더욱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청소년은 자아실현을, 성인은 사회봉사를 더욱 강조한다는 차이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개인중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성인은 보다 집단중심적이고 사회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자기 적성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만 강요하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통제하고 적게 하라고 강요하며, 따라서 취미생활이나 친구와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학업문제로 인해 세대 간 차이를 느끼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준다.

학업문제에 관한 세대 간 갈등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시든 농어촌이든 관계없이 한국의 가

정에서 학업과 관련된 문제가 부모-자녀 간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때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들 사이에 화목하며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성취 등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생활의 목표이고 가치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생활목표의식으로서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도시지역이든 농어촌 지역이든 관계없이 일치하였다 세대 집단별로 보았을 때 가정화목을 공통적으로 생활목표의식으로 높게 지지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성인보다도 더 가정화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기주장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사회성효능감의 순서였으며, 스트레스대처효능감과 정치효능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관계효능감에 주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다른 하위영역보다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청소년 집단 내에서만이 아니라 성인집단 내에서도 동일한 패턴이었다. 관계효능감이란 ‘당신은 부모(또는 자녀)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등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해 갈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과 그러한 인간관계의 기술에 관련된 효능감이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효능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도시지역이든 농어촌지역이든 일관성 있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여러 하위변인들 중에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왔음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다. 반면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도시지역 사람이든 농어촌지역 사람이든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능감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세대간의 갈등 상황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갈등의 대처를 위해서는 대처 효능감의 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갈등 또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의 형성과 더불어, 그러한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기술의 증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의 증진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조직적으로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증진 교육도 가능할 것이며,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위한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증진 교육을 구조적으로 실시해 보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청소년 교육을 다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

청소년과 성인집단은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에서 뿐만 아니라 어려움극복 효능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이 성인보다 스트레스대처 효능감도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극복 효능감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극복도 성인들보다 잘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신념과 기술의 면에서 성인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을 가르쳐 주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세대차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대처방식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자기조절 대처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의 순서로 나왔고, 회피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결과는 자기조절 대처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조절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청소년과 성인세대간의 갈등이 자기조절 대처 방식을 통해 가장 많이 해소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세대 간 갈등상황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를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갈등해소 방안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대집단별 성별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대처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성인 세대가 세대갈등 해소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대처 방식을 계속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들이 성인세대의 적극적인 해결의 뒤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성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해결의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대차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을 때, 심리적 갈등보다 관계적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갈등이란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싫어지고 무시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고 대화를 포기하는 마음의 갈등적 상태를 의미하고, 성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에 대해 이와 동일한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세대차이로 인해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심리적 갈등보다도 관계적 갈등을 훨씬 적게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관계적 유대가 기본적으로 공고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한국사회가 관계지향적인 문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관계의 유지를 중요한 가치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대 갈등의 해소 방안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관계문화가 때로는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국의 관계문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갈등을 조정하고 성취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문화적 토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시키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시키느냐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은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모색에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의 주 관심사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측정되는 변인들에 대한 지역별 차이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도 있었고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 희망하는 직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지역 사람들이 농어촌지역 사람들보다 경제력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주변 상황이 경제활동의 면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자극적인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주민들이 경제력에 대한 선망을 더욱 강렬하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직업에 대한 열망도 더욱 높은 것으로 반응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성별로도 다양한 차이가 밝혀졌다. 성별로 희망하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들은 보다 안정된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남자보다 훨씬 높았으며, 경제력이 있는 직업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여자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교수 등의 직업선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다 안정을 지향하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업가나 성공한 벤처사업가와 같이 경제력을 갖춘 직업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

## 참고문헌

- 강해자(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 정신건강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숙·한 준·김명언(1999). 『세대 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Vol. 8, No. 1, pp. 123-139.
- 김경옥(2004). 『초등학생의 세대차 인식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이정우·계선자·박미석·송말희·김경아·박수선·유을용·정진희(2003). 『청소년자녀와 어머니를 위한 세대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호. pp.59-76.
- 김미숙(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자(200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감성지능과의 관계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이창식(2005). 『성규범의 세대 차이와 청소년의 성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3호. pp. 125-147.
- 김윤정·함정현·이창식(2005). 『부양의식의 세대차이와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 243-261.
- 김의철·박영신(2004a).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2호, pp. 103-137.
- 김의철·박영신(2004b).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4호, pp. 973-1002.
- 김의철·박영신(2004c).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3호, pp. 103-129.
- 김종명(2005). 『교사·학생의 세대 차이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실태』.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제17집 1호. pp. 115-146.

- 박영신 · 윤영진 · 김의철(2006).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심리차이 분석』. 아동교육, 제15호 제2권. pp. 257-270.
- 박영신 · 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 중 · 고 · 대 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8권 제2호, pp. 109-146.
- 박영신 · 김의철 · 탁수연(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1호, pp. 107~145.
- 윤옥경(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세대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pp. 55-75.
- 이옥렬(2002). 『인터넷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승희 · 노혁 · 이혜연 · 맹영임(1992). 『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정란 · 이금룡 · 원영희(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Vol. 26, No. 2, pp. 381-402.
- 탭스콧, 돈 저 · 허운나 역(1999).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물푸레.
- 황리리(1996). 『컴퓨터 통신 이용에 나타난 청소년 하위문화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 H.(1983). "Circumf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Vol. 22. pp. 69-83.
- Seligman, A.(2006). "Social theory, the challenge of society and the potential of ritual. International Workshop on Social Integ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 2 주제  
성평등과 세대간 문화갈등

---

## 조직문화와 젠더 파트너십 : 직무만족 및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안 상 수 · 이 수 연 · 황 정 미 · 김 인 순 · 백 기 복  
(한국여성개발원)

---

# 조직문화와 젠더 파트너십 : 직무만족 및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안 상 수 · 이 수 연 · 황 정 미 · 김 인 순 · 백 기 복

(한국여성개발원)

이 연구는 전국 50인 이상의 일반사업체 직장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적인 조직문화, 직장 내 관행 및 가족친화 정책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그리고 일-가족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젠더 파트너십을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을 통제한 후 조직문화 관련 변수가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장-가정 갈등(WIF: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및 가정-직장 갈등(FIW: Family Interference with Famil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직의 가족친화정책이 일-가족 갈등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평등적 조직문화와 정보접근성은 남녀 모두의 직무만족 향상과 관련이 있었고, 성평등적 직장관행, 가족친화정책, 업무명확성은 특히 여성의 직무만족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평등적 직장관행과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의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는 가족친화정책이 이직의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한편이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의 FIW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직무만족 향상과 이직의도의 감소를 가져오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의미를 논의 하였다.

## I. 서론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간의 존재하는 갈등적 요소들을 검토해 보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남녀관계로서 젠더파트너십을 모색해 보려는 목적의 하나로 기업

의 성평등적 조직문화와 관행, 가족친화적 정책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기업에게 어떤 순기능적 잇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가족과 기업에서의 남녀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의 의식과 행동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기혼여성 48.7%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어(한국여성개발원, 2005), 맞벌이부부 가정이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정에서의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분담의 고정관념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취업으로 여전히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이효재, 1997).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는 남성이 1차적 가족부양자로서 사회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분업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조화로운 남녀관계, 즉 젠더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첫 번째 덕목이었을 것이다. 이런 남성중심주의적인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남성은 사회의 각종 윤리와 제도의 지원을 받아가며 여성을 가정의 영역 안에 예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성별간의 갈등이 적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을 공적영역에서 무능력자로 만들어 남성과 가정의 영역에 예속시킨 결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의 모든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남성이 혼자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직장에 맹목적으로 헌신한 나머지 역설적으로 자녀와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Nock & Kingston, 1988). 이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이런 문화적 기반 위에 남성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조직문화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남성을 가정에서 분리시켜 기업에 종속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규범으로 작용하여, 남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가정으로부터 멀어져 가정생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기업에서의 이러한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가족의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전담해야 하는 여성에게는 따라갈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어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결국 이러한 조직문화는 결국 여성에게 ‘일이나 가족이나’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몰아가거나 직장에서의 경력개발을 어렵게 만든다(김태

현·장재운·김효선·박찬희, 2004).

문제는 산업화 시대 이후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첨단산업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재촉하며 더 이상 남성들만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복잡하고 다원화된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이 보다 잘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적 남녀관계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바로 새로운 남녀관계의 재정립에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젠더 파트너십의 출현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젠더 파트너십이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남녀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남성 역시 남성중심의 성별 분업적 사회와 조직문화의 희생자이며, 남성지배문화와 관습을 극복해야 할 의식변화의 당사자인 동시에 국가 및 기업의 제도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남녀가 협동하여 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며, 모두가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젠더 파트너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남성상과 여성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남녀간의 갈등의 양상들을 먼저 알아보고,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관행이 성 평등한 조직문화와 관행과 어떤 차이를 보이며,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직문화와 직장관행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직장인들 간 성별갈등의 실태와 이러한 갈등 정도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성차별적/성평등적 조직문화와 관행에 주목하였다.

Newman(1996)에 따르면 조직문화는 “각 조직이 강조하는 특수한 신뢰와 가치에 기반하여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상징, 언어,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여성주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직들이 성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 역시 성별화 되어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이성은, 2005).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조직문화가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적, 위계적 조직특성을 지닌 성별화된 문화라는 가정 하에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성 평등한 조직문화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의 특성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조직 내 성 평등 및 성차별 규범들로서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 중요한 정보가 남성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되는지, 경영자나 구성원의 성 평등의식, 인사상의 평가 및 성별 분업구조, 성희롱 여부를 통해 조직문화의 성차별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직문화가 상징적 규범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장관행은 전형적인 남성중심적 조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양식으로써 조직문화의 성평등 규범이 조직구성원의 구체적 행위 양식들로 표현되어 공공연한 차별은 아니지만,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관행들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행들은 간접적인 형태로 남녀 간의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태현 등(2004)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성차별적 직장관행으로 회식문화, 동료로서의 남녀직원의 관계, 교육훈련의 불균형, 퇴근시간, 출산 전후의 퇴직을 등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조직내에서 중요한 정보의 여성배제를 의미하는 정보 접근성, 잡무처리 등의 보조노동력으로 전락 여부, 성희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조직특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가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이제영, 1988),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에 헌신성과 전직이나 이직의 감소(Sager, 1994)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직무성과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조직과 기업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직의도를 부추기는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업무 성과와 정적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직과 기업차원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강혜련(2001)은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경력몰입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생산성에

까지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김혜숙 등(2005)는 성차별 문화에 따른 남녀교수의 리더십 지각을 검토한 연구에서 성차별이 심한 조직에서 여성리더는 역할 갈등을 더 많이 겪을 수 있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자부심은 억제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차별적 문화일수록 여교수는 더욱 여성적으로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김태현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직무만족, 이직의도에서 유의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조직과 일반기업의 조직문화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두 조직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성별차이와 아울러, 차별적 문화와 관행을 가진 조직과 성평등적 문화와 관행을 가진 조직의 비교를 통해 성평등적 문화의 파급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성평등적 조직문화의 어떤 요소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를 잘 예언해 주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2. 일-가족 갈등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증가는 가족내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과거의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해 이중의 노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역할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취업여성들은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다시 직장생활의 불안정으로 순환되어 직무만족이나 경력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강혜련, 2002)

일-가족간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은 직장영역과 가정 영역간의 갈등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로, 이는 직장에서의 역할로부터 나오는 요구가 가정에서의 역할로부터 나오는 요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종의 역할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 Greenhaus & Beutell, 1985에서 재인용). Greenhaus와 Beutell(1985)에 따르면 “직장과 가정 영역으로부터의 역할 압력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양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의 한 형태”라고 정의 하였다. 즉 직장역할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간 갈등(WIF: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와 반대로 가정역할에 참여함으로써 직장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생기는 역할 간 갈등(FIW: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갈등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다른 쪽에 갈



등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양방향적으로 상호 순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Frone, Russell 및 Cooper(1992)에 따르면 두 갈등 간에는 온전한 정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가족 갈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직장-가정 갈등(WIF)에 주로 집중하였고,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척도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의 반영이 이러한 연구경향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실제적으로도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해서 남성은 WIF가, 여성은 FIW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장재윤과 김혜숙(2003)도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가족 갈등의 분석에서 여성집단은 남성과 달리 FIW의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 및 직무만족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혜련(2003)에 따르면 이전 연구들이 주로 개인차원의 변수들을 일-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다면, 기업문화와 같은 조직차원의 요인이 이들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차원의 영향요소로서 조직문화와 관행의 성평등적/성차별적 특성 그리고 조직의 가족친화적 정책 정도가 이들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며, 아울러 개인차원의 영향 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양성평등의식이 이들 갈등을 어떻게 예언하는지 남녀별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가운데 일-가정 양립이라는 취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직무만족 향상과 이직의도의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조직의 직접적인 효율성(이직의도의 저하와 직무만족의 향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의 경영자들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측정도구

#####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단위의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하나는 일반사업체 직장인 대상 조사와 공무원 대상 조사로 이루어졌다.

#### (1) 일반사업체 직장인 조사

이 조사는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참고한 업종, 종사자규모, 지역별 모집단을 고려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업종을 대상으로 826명을 종사자 수 기준 업종별, 업종 종사자 규모, 지역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할당을 하였으며, 분석 시 최소 표본수를 고려하였다. 다음 단계로 업종, 종사자 규모별 할당을 사업체 수 기준으로 비례할당을 하였으며, 이 때 1개 업체 당 규모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4~6명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내 직급,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50:50의 유의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표본설계를 하였다. 여기서 업종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18개 산업분류 중 7개 업종은 영세성 및 공공적, 독점적 성격(국가기반사업 특성)이 강해 일반 사업체의 조직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들 7개 업종을 제외 한 11개 업종을 유사성에 따라 5개 범주로 묶었으며, 조직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50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체로 한정하였다. 업종의 5개 범주를 보면, ①제조업, ②건설/운수업, ③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④금융 및 보험/부동산업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⑤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등 이었다. 규모별로는 ①50~99인, ②100~299인, ③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과장 이상의 관리자급이 일정 비율 이상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 (2) 공무원 대상 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05년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중 공무원 정원현황을 참조하였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65:35의 비율을 반영해 각각 121명과 82명을 할당하여 총 203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공무원은 서울, 과천, 대전 청사를 기준으로 균등 할당하였고, 지방공무원은 16개 시·도청에 균등할당 하였다. 그리고 직급과 성별의 비율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표집크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1) 조직문화의 성평등성

양성 평등적 조직문화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성 평등한 규범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경영자나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 정도, 네트워크의 특성, 인사평가 및 성별분업구조 등 조직문화의 평등성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김혜숙·장재윤(2002)이 사용한 4문항의 성차별 조직문화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양성평등 문화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으며, 문항 예들을 보면, “우리 조직 사람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대체로 높다”, “우리 조직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 “우리 조직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없는 편이다” 등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8이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지닌 조직이라는 의미이다.

### (2) 성 평등적 직장관행

직장관행은 조직문화의 성평등 규범이 조직구성원의 구체적 행위 양식들로 표현되어 남녀 간의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관행에 관한 척도문항은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나 행동들을 알아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진에 의하여 자체 제작되었으며, 문항 예들로는 “임신·출산을 전후하여 여성은 대체로 퇴직하는 편이다”, “채용이나 승진에서 남성이 더 선호되는 편이다”, “남자 직원들은 여자 직원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대한다”, “우리 직장의 회식문화는 여성들에게 불편한 편이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물었다.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5 이었다. 이 척도 역시 역문항에 대한 변환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성 평등한 직장관행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직장내 개인적 성차별 경험(정보 접근성, 업무명확성, 성희롱)

조직 내 남녀 간 갈등의 또 다른 한 요소는 남녀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업무에 필요하거나 조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어지는 알아보기 위해 2개 문항으로 이루어지는지를 4점 척도

에서 물었다. 즉 “나의 상사는 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내게 잘 설명해 준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나만 모를 때가 있다”의 두 개 문항이었다.

또한 여성들에게 공식적 주 업무 외에 상사의 심부름, 사무실 정리와 같은 비공식적인 잡무에 여성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업무명확성에 대해서 물어 보았고, 아울러 개인적 성희롱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 (4) 가족친화정책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족 친화적 정책들의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탄력적 근무제 등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물었다. 이들 문항들의 합산 점수의 평균값을 얻었고, 이전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값을 가질수록 가족 친화적이라는 의미이다.

#### (5)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직장관행에 대한 준거변인의 하나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Cammann, Fichman, Jenkins 및 Klesh(1983)의 Michigan Organizational Assessment Questionnaire(OAQ)의 일부로서 조직과 직무에 대한 직장인의 주관적 반응을 기술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일부 문항을 선택해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즉 3개 문항은 직무만족 요인(아이겐 값, 2.70)으로 변량의 45.16%를 설명하였고, 나머지 두 문항은 이직의도 요인(아이겐 값, 1.05)으로 변량의 14.68%를 설명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 설명량은 59.83%이었다. 이들 두 요인을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각각의 신뢰도를 구해본 결과, 직무만족 요인은 Cronbach  $\alpha$ 가 .75이었고, 이직의도 요인은 Cronbach  $\alpha$ 가 .76으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 직무만족은 높은수록 직무에 만족한다는 것이며, 이직의도는 높은 점수일수록 이직하려는 의사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 (6) 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 척도는 Carlson 등(2000)이 갈등의 유형과 방향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에서 전지현(2004), 최수찬(2006) 등이 사용한 척도이었다. 이 척도는 시간, 긴장,

행동 등 3개의 갈등유형을 갖고 있으며, WIF(일->가정)과 FIW(가족->일)의 방향성 가지고 있으며, 6개 하위차원의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WIF와 FIW)만을 고려해서 6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  $\alpha$ )는 .66이었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매우 그렇다”로 Likert형 4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많이 겪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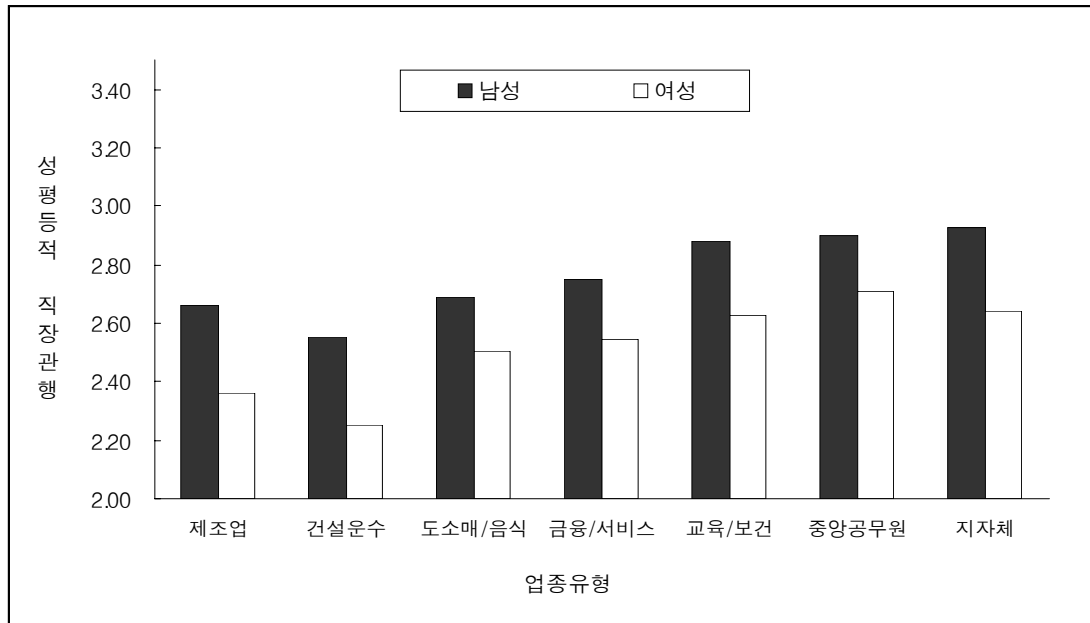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사용된 표본 총 1029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조직유형, 업종, 및 일반기업체의 규모, 결혼유무, 자녀유무를 제시하였다.

전체 1029명 중 남성이 56%로 577명이었고 여성이 44%인 452명이었다. 또한 일반기업 직장인이 80.3%인 826명이었으며,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각각 11.8%와 8.1%인 121명과 82명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42.4%, 20대와 40대가 각각 23.8%, 24.1%였고, 60대 이상은 1%였다. <표 1>에 제시하지 않은 특성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우선 가족형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69.2%, 부부만 있는 경우 10.4%, 혼자인 경우 10.1%, 조부모를 포함하는 3대가 있는 가족형태도가 5.1%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총 근무연수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32.8%, 10~15년이 24%, 5~10년이 25.3%, 5년 미만이 17.9%이었다. 자신이 속한 직장의 여성 직원비율을 물어 본 결과, 10%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2%, 30%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7.6%로 30%미만이 60.8%를 차지하였다. 여성 관리직 비율에 대해서는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0.3%였고, “3% 미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4%, 그리고 “10% 미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8.7%로 관리직 비율이 10% 미만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약 90% 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029)

	남성		여성		전체	
	%	N	%	N	%	N
구분						
일반기업	81.6	(471)	78.5	(355)	80.3	(826)
공무원	18.4	(106)	21.5	(97)	19.7	(203)
전체	100	(577)	100	(452)	100	(1029)
기업규모(일반기업)						
50~99 인	30.8	(145)	31.0	(110)	30.9	(255)
100~299인	33.1	(156)	31.8	(113)	32.6	(269)
300인 이상	36.1	(170)	37.2	(132)	36.6	(302)
전체	100	(471)	100	(355)	100	(826)
업종						
제조업	21.5	(124)	20.6	(93)	21.1	(217)
건설/운수	14.6	(84)	13.7	(62)	14.2	(146)
도소매/음식/숙박	13.9	(80)	11.1	(50)	12.6	(130)
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6.1	(93)	16.6	(75)	16.3	(168)
교육/보건/사회복지/오락/문화	15.6	(90)	16.6	(75)	16.0	(165)
중앙공무원	10.6	(61)	13.3	(60)	11.8	(121)
지방공무원	7.8	(45)	8.2	(37)	8.0	(82)
전체	100	(577)	100	(452)	100	(1029)
결혼여부						
미혼	16.1	(93)	56.0	(253)	33.6	(346)
기혼	83.5	(482)	42.9	(194)	65.7	(676)
기타	0.3	(2)	1.1	(5)	0.7	(7)
전체	100	(577)	100	(452)	100	(1029)
자녀유무						
없다	7.6	(44)	7.3	(33)	7.5	(77)
있다	92.4	(533)	92.7	(419)	92.5	(952)
전체	100	(577)	100	(452)	100	(1029)

## 2. 조직문화, 직장관행에 대한 남녀 평가차이



〈그림 1〉 업종×성별에 따른 조직관행의 성 평등성 평가

성평등/성차별 조직문화와 관행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성평등 조직문화에 관한 8개 문항과 직장관행 8개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각각의 척도점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업종은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표를 근거로 5개의 유형, 즉 ①제조업, ②건설/운수업, ③도소매/음식·숙박업, ④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⑤교육/보건·사회복지/오락·문화·운동사업으로 나누었고, 공무원은 ⑥중앙공무원과 ⑦지자체공무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조직문화와 직장관행을 종속변수로 성별×업종을 이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두 성별과 업종에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업종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의 성평등성에 대한 평가는 직장관행에 관한 변량분석인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여성들에 비해 성평등한 것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하는 경향이 모든 업종에 걸쳐서 나타났다. 업종 간에는 제조업과 건설/운수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성평등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행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업종을 일반기업과 공무원조직으로 분류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기업조직이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성평등성이 낮게 나왔으며,

### 3. 조직문화 관련 예언변수들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표 2〉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 관련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1. 직무만족	1						
2. 이직의도	-.485***	1					
3. 조직문화	.301***	-.281***	1				
4. 직장관행	.223***	-.322***	.665***	1			
5. 정보접근성	.343***	-.262***	.391***	.344***	1		
6. 업무명확성	.211***	-.153***	.294***	.282***	.284***	1	
7. 성희롱경험	-.185***	.180***	-.353***	-.354***	-.309***	-.211***	1
8. 가족친화	.205***	-.259***	.326***	.371***	.164***	.139***	.117***

\*\*\*  $p < .001$

〈표 2〉의 상관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은 관련 예언변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정보접근성이 좋을수록, 성평등적 조직문화일수록, 직장관행이 성평등적일수록, 업무명확성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정책이 좋을수록, 성희롱 경험이 적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직의도는 관련 예언 변인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3〉 직무만족에 관한 전체 및 남녀별 예언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체	남성	여성
1단계(통제변인)	$\beta$	$\beta$	$\beta$
연령	.011	-.035	.059
교육수준	-.003	-.038	.021
월개입소득	.142**	.142**	.153**
월가구소득	-.001	-.014	.005
군복무(현역더미)	-.020	.003	-
결혼유무(기혼더미)	.147***	.112**	.123**
조직유형(공무원더미)	.023	-.098**	.057
	$R^2=.061$ $adj\ R^2=.054$	$R^2=.041$ $adj\ R^2=.029$	$R^2=.098$ $adj\ R^2=.080$
2단계			
조직문화	.170***	.192***	.161**
직장관행	.068*	.026	.113*
정보접근성	.253***	.247***	.258***
업무명확성	.076**	.069	.078*
성희롱경험	.043	.051	.051
가족친화정책	.074*	.038	.107**
	$R^2=.207$ $adj\ R^2=.196$ $\Delta R^2=.146$	$R^2=.198$ $adj\ R^2=.179$ $\Delta R^2=.157$	$R^2=.241$ $adj\ R^2=.220$ $\Delta R^2=.143$

\*  $p < .05$ \*\*\*  $p < .001$ \*\*\*  $p < .001$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통제변인 가운데, 결혼유무 즉 기혼자들이 직무만족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남성의 경우 공무원들에 비해 일반기업의 직장인 응답자들의 직무만족이 낮았다. 이 분석의 관심사인 성평등한 조직문화 관련 변수들이 직무만족을 예언하는 정도를 남녀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회사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평등할 때 직무만족을 가장 잘 예언하였고, 다음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일수록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언을 해 주고 있었다. 이는 남성들 역시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중요한 만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과 달리 성평등한 직장관행과 업무명확성, 가족친화적 정책이 잘 사용되어질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관행 정책이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며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해 준다.

<표 4> 이직의도에 관한 전체 및 남녀별 예언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체	남성	여성
1단계(통제변인)	$\beta$	$\beta$	$\beta$
연령	-.108**	-.096*	-.125*
교육수준	.080**	.011	.163***
월개인소득	-.164***	-.172**	-.199***
월가구소득	.008	.074	-.025
군복무	.054	-.006	-
결혼유무	-.128***	-.058	-.155**
조직유형	-.144***	-.126**	-.146**
	$R^2=.129$ $adj\ R^2=.123$	$R^2=.080$ $adj\ R^2=.060$	$R^2=.205$ $adj\ R^2=.194$
2단계			
조직문화	-.043	-.081 <sup>?</sup>	-.008
직장관행	-.142***	-.170***	-.118*
정보접근성	-.163***	-.166***	-.148**
업무명확성	-.014	-.048	.021
성희롱경험	-.049	-.057	-.064
가족친화정책	-.077**	-.051	-.105*
	$R^2=.234$ $adj\ R^2=.224$ $\Delta R^2=.114$	$R^2=.221$ $adj\ R^2=.203$ $\Delta R^2=.171$	$R^2=.287$ $adj\ R^2=.267$ $\Delta R^2=.082$

한편 이직의도를 준거변수로 조직관련 변수를 예언변수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성평등한 직장관행과 정보접근성이 이직의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잘 되었을 수록 낮은 이직의도를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직무만족과 달리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예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일-가족 갈등

직장에서의 업무나 일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는 갈등인 직장-가정 갈등(WIF)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요인과 개인의 성평등의식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를 보면 통제변인들 가운데에서는 직급과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수가 WIF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직급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느꼈고,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막내연령 보다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일-가정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취업 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인 경우 직접 키우기 보다는 친족에게 맡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표 5> 직장-가정 갈등(WIF)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들(전체 응답자)

	전체(n=603)	남성(n=437)	여성(n=198)
1단계			
직급별	.166***	.164**	.179*
교육수준	-.035	-.091 <sup>?</sup>	.123
연령별	.062	.100	-.137
자녀수	-.001	-.030	.159*
막내 연령	-.187**	-.246**	-
맞벌이	.043	.080 <sup>?</sup>	-.085
조직유형	.154***	.168***	.111
	$R^2=.040$ $adj\ R^2=.028$	$R^2=.052$ $adj\ R^2=.036$	$R^2=.094$ $adj\ R^2=.065$
2단계			
성평등의식	-.045	-.088 <sup>?</sup>	.059
조직문화	.056	.021	.186*
직장관행	-.137**	-.090	-.220**
가족친화	-.092*	-.080	-.053
	$R^2=.069$ $adj\ R^2=.049$ $\Delta R^2=.041^{***}$	$R^2=.079$ $adj\ R^2=.056$ $\Delta R^2=.027^{***}$	$R^2=.135$ $adj\ R^2=.089$ $\Delta R^2=.041^{***}$

<표 5>에서 주관심사인 조직문화가 WIF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성평등한 직장관행일수록 갈등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반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일 수록 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외의 결과인데, 최근의 역할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지게 될 때, 자신의 역할의 비중을 어디다 더 많이 두느냐에 따라 갈등의 경험에 달라 질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따라서 평등적 조직문화에서는 여성들이 가정보다는 직장에 역할 정체성을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전신현, 2000). 관심은 FIW 역시 평등적 조직문화에서도 갈등을 더 높게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직장 간 갈등 역시 평등적 조직문화에서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남성들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이 경우, 두 방향의 갈등이 모두 유의하거나 유의 경향을 보이는 감소를 예언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개인에서는 FIW 혹은 WIF 모두에 대한 완충효과를 지닌 개인차원의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6〉 가정-직장 갈등(FIW)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들

	전체(n=603)	남성(n=437)	여성(n=198)
1단계			
직급별	.050	.093 <sup>?</sup>	-.067
교육수준	.062	.015	.218**
연령별	.061	.073	-.156 <sup>?</sup>
자녀수	-.041	-.044	.029
막내 연령	-.187**	-.154 <sup>?</sup>	-
맞벌이	.060	.049	.012
조직유형	.048	-.010	.150*
	$R^2=.034$ $adj\ R^2=.023$	$R^2=.021$ $adj\ R^2=.005$	$R^2=.102$ $adj\ R^2=.074$
2단계			
성평등의식	-.083*	-.157***	.027
조직문화	-.064	-.165***	.149 <sup>?</sup>
직장관행	-.171***	-.100 <sup>?</sup>	-.244**
가족친화	.033	.069	.012
	$R^2=.082$ $adj\ R^2=.065$ $\Delta R^2=.048***$	$R^2=.102$ $adj\ R^2=.079$ $\Delta R^2=.081***$	$R^2=.138$ $adj\ R^2=.093$ $\Delta R^2=.036*$

〈표 7〉 일가족갈등과 직무만족에 대한 가족친화 정책의 조절효과(일반기업응답자)

	남성					여성				
	$\beta$	$R^2$	$\Delta R^2$	$\Delta F$	$p$	$\beta$	$R^2$	$\Delta R^2$	$\Delta F$	$p$
WIF(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A)	-.090	.032	.032	7.822	.048	-.081	.044	.044	7.319	.103
가족친화 정책(B)	.158	.057	.024	11.857	.001	.194	.080	.036	13.464	.000
A x B	.153	.072	.016	7.914	.005	-.075	.084	.004	7.089	.234
FIW(가족→일 갈등)										
가족-일 갈등(A)	-.075	.030	.030	7.176	.001	-.058	.040	.040	7.319	.274
가족친화 정책(B)	.167	.057	.027	13.548	.000	.193	.076	.036	13.464	.000
A x B	.167	.071	.013	6.606	.010	.218	.095	.019	7.089	.008

〈표 8〉 일-가족갈등과 이직의도에 대한 가족친화 정책의 조절효과(일반기업응답자)

	남성					여성				
	$\beta$	$R^2$	$\Delta R^2$	$\Delta F$	$p$	$\beta$	$R^2$	$\Delta R^2$	$\Delta F$	$p$
WIF(일→가족 갈등)										
일-가족 갈등(A)	.146	.052	.052	12.744	.001	.148	.119	.119	23.516	.004
가족친화 정책(B)	-.173	.081	.029	14.581	.000	-.219	.166	.047	19.313	.000
A x B	-.139	.094	.013	6.720	.010	-.023	.166	.000	0.145	.703
FIW(가족→일 갈등)										
가족-일 갈등(A)	.149	.053	.053	13.023	.000	.104	.108	.108	21.052	.042
가족친화 정책(B)	-.189	.088	.035	17.918	.000	-.217	.154	.046	18.644	.000
A x B	-.104	.093	.005	2.634	.105	-.257	.180	.026	10.881	.001

## 5.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 일-가족 갈등에 관한 가족친화 정책의 조절효과

위 <표 7>과 <표 8>에서 일-가족 갈등이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를 예언하는데 있어서, 가족친화적 정책이 일들 갈등을 완화시켜 직무만족을 증가시킬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경우는 FIW에 있어서 가족친화적 정책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이들 가족 친화적 정책들은 여성들에게 가족에 대한 역할 때문에 일에 몰두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역할 갈등을 감소시

켜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여성 직장인에게 직장에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가족친화적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 해석된다. 더 나아가 가부장적 조직문화와 질서 속에 희생자인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가족 친화적 정책이 더욱 더 절실하고,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V.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업종 및 성별간 변량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별갈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여성들은 우리의 조직문화나 직장관행, 업무명확성, 정보접근성 등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자신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덜 차별적이라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젠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차원의 의식변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개인차원의 의식변화와 별개로 우리 사회나 조직차원에서의 성 평등규범과 관행이 조직 효율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직문화, 직장관행, 업무명확성, 정보접근성 가족친화정책을 예언변수로 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 여성 직장인들에게는 정보 접근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와 직장관행, 업무명확성, 가족친화정책 등이 직무만족 향상과 유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직의도에 있어서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 조직문화 변수만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이직의도를 부적으로 예언함으로써 이들 조직문화 관련 변수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용한 변화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직무만족, 이직율의 저하는 노동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런 점에서 조직 내의 잔존하는 가부장적 속성의 관행과 규범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은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단순한 의식변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단기이윤만 추구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목

표를 설정하여, 조직내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이 생산성과도 직결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조직문화 관련 변수들은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를 얻었다. 남성들이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양성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회가 변화였고, 인력의 속성도 직장도 모두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책임은 우리 사회의 주요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가정, 기업, 정부가 이에 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목표인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족친화정책이 여성들의 FIW를 완화시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감소에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남성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친화적인 정책들이 다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역할갈등 감소를 통한 직무만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과정에서 남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시간에 유연한 제도들을 희망하는 것이었다. 맞벌이 가정이 환산되어 감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급여수준보다는 여가시간, 자녀양육, 자기계발 등 근무시간 외에 허용되는 시간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탄력적 근무제도를 개발하고, 이들을 선택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성육아휴직제도의 부진한 활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혜련 (2002). 기업의 가족친화적 복지정책과 여성인력의 생산성. 생산성논총, 16, 1-23.
- 강혜련 · 임희정(2000). 성취동기와 가족친화적제도가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조절변인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 1-14.
- 강혜련 · 최서연(2001). 기혼여성 직장-가정 갈등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23-42.
- 김혜숙 · 장재운(2002). 여성 공무원 리더의 효율성, 성 정체성 사람의 만족도와 조직의 성차별 문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91-208.
- 손승영(1997). 기업과 남성. 남성과 한국사회 (pp. 187-214).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이효재(1997). 한국사회의 남성 이데올로기. 남성과 한국사회 (pp. 9-32). 서울: 사회문화 연구소
- 장재윤 · 김혜숙(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우리나라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23-42.
- 전신현 (2000). 기혼성인여성의 스트레스에 있어 다수역할의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8, 5-30.
- 한국여성개발원 (2005).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Carlson, D. S., Kacmar, K. M., & Wilham, L. J. (2000).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49-276.
- Frone, M. R., &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5-78.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76-88.
- Gutel, B. A.,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560-568.
- Kossek, E. E., & Ozeki (1998). Work-family conflict, policies, and the job-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A review and direc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human, Resources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139-148.
- Nock. S. L. & Kingston, P. W.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 59-85.

제 3 주제  
이주민과 문화관용성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을 통해 본 문화간 소통의 현실

김 이 선 (한국여성개발원) · 김 민 정 (강원대학교) · 한 건 수 (강원대학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을 통해 본 문화간 소통의 현실

김 이 선 (한국여성개발원) · 김 민 정 (강원대학교) · 한 건 수 (강원대학교)

## I. 국제결혼을 통한 문화 주체의 탈국가적 대면 지형 형성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연간 입국 외국인은 492만명 가량으로 1994년에 비해 77.6%, 연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 가운데에서도 남성과 여성 외국인의 입국 증가율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4년 현재 외국인 남성의 입국은 1994년 대비 58.6% 증가한데 비해 여성외국인의 입국은 같은 기간 내에 114.2%의 증가율을 보여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 추세 속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이주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 외국인 국내입국 추이

(단위: 명)

	계	여성	남성
1994	2,775,473	949,451	1,826,022
2004	4,929,517	2,033,279	2,896,238
1994 대비 증가율	+77.6%	+114.2%	+58.6%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이처럼 국내 입국 측면에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추세<sup>1)</sup>가 현

1) 출신지와 목적지의 구조적 요인으로 여성이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그 증가세가 현저한 경향을 가리키는데,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즐로트닉(Zlotnik 2003)의 추산에 의하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이주자 중 여성 비율이 1960년도 46.1%에서 1990년 48.5%, 2000년에는 50.1%로 남성을 앞질렀다. 그에 따라 야마나카와 파이퍼가 밝힌 바와 같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저한 가운데, 여성이주는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입국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유형을 성별로 살펴보면, 예술홍행비자를 제외한 취업관련비자<sup>2)</sup>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그 수는 급증하는데 반해 여성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 성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성산업과 연결된 가능성이 큰 예술홍행비자(E-6)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들 중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sup>3)</sup> 1990년대 이후 거주비자 발급 급증세가 모두 여성들의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 남성들의 국내유입은 일반적인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여성의 이주는 결혼이나 성산업 관련 취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규제에 따라 성산업과 관련된 이주는 다소 주춤한데 반해 결혼을 통한 여성이주는 급격히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외국인 유입에 있어 “남성=노동이주, 여성=결혼이주”라는 이주의 성별구분이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신고한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은 1990년 한 해 동안 619건에 불과했던 것이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에는 31,180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9.9%<sup>4)</sup> 수준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의 꾸준한 증가추세 속에서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한 급증세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바로 이 시기 새로운 국제결혼의 경로가 발전하고 이와 동시에 결혼상대 여성들의 출신국가도 변화하면서 국제결혼구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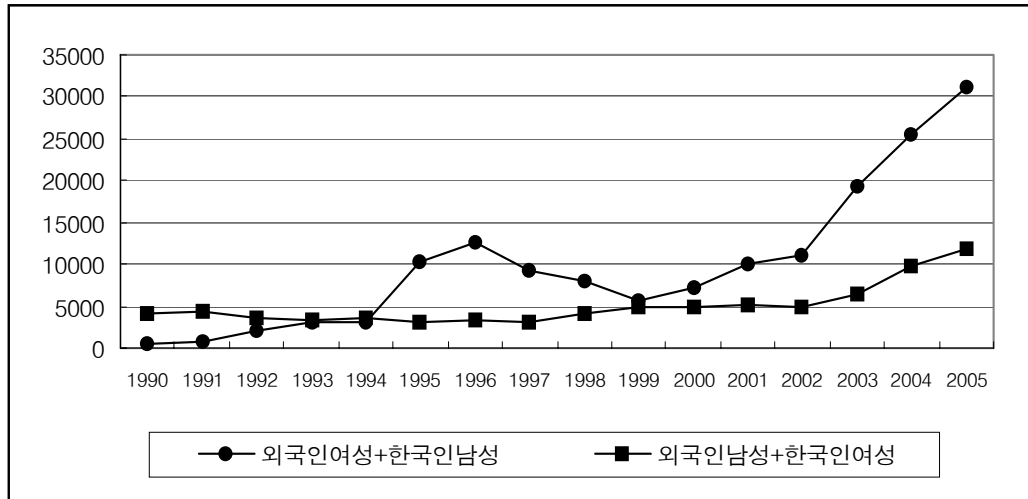
1990년대 초반 해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 여성들이었으며,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는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이 두드러졌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 들어 몇 가지 이유로 한국계중국인과의 결혼이 주춤하는 사이 미국, 일본, 중국 이외 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증

2) 여기에는 단기취업(C-4), 산업연수(D-3), 전문직업(E-5), 특정직업(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이 포함된다.

3) 2004년 기준으로 거주(F-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는 총21,60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88.7%(19,156명)이고 남성이 11.3%(2,444명)을 차지한다. 이들 여성 중 상당수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과 함께 국내 정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들인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관광비자나 산업연수비자 등으로 입국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도 있다.

4) 외국인아내와 한국인남편간 결혼, 외국인남편과 한국인아내의 결혼 모두를 포함해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5%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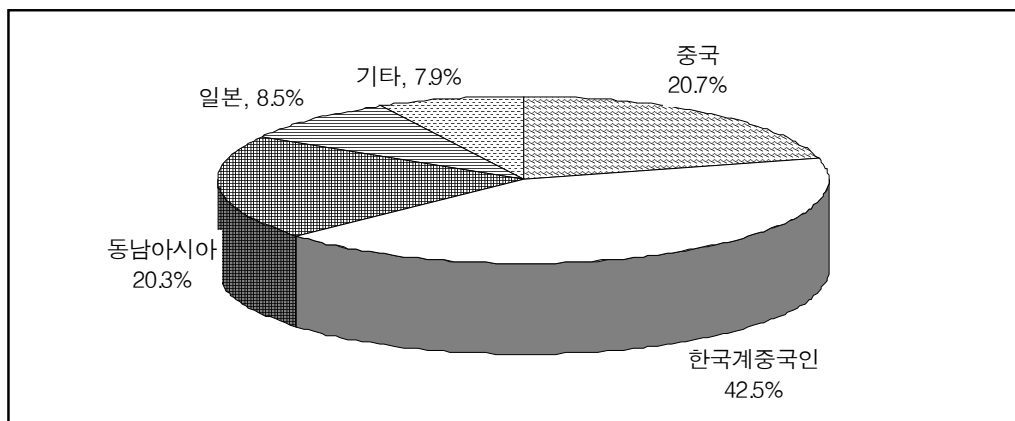
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여성과의 결혼이 주요하였다.



〈그림 1〉 국제결혼 추이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1990년대 말-2000년대 초까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라면 결혼정보회사와 사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계중국인과의 결혼과 통일교를 통한 필리핀, 태국인,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초를 지나면서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배우자 가운데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구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림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지역 분포(2006년 4월 현재)

자료: 행정자치부

2006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55,408명<sup>5)</sup> 수준으로 이 가운데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63.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각국 출신이 2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정주를 전제로 한 국제결혼이 일반화되면서 동남아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 출신으로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우리사회의 주요한 일원이 되었다.

이들의 등장으로 기존 한국사회의 문화적 스펙트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다양한 문화가 운반되어 오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와 더불어 가족과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장에서 민족국가를 넘어선 문화주체들 사이의 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출발지에서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지형 속에, 모두 다 ‘한국인’인 남편과 시댁식구, 이웃, 공무원, 그 외의 다양한 한국 사람들과 ‘그들이 공유하는 한국 문화’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단순히 부인이나 며느리를 맞이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운반해 온 주체와 마주앉게 되었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의 만남 속에서는 서로 간에 인지한 차이를 둘러싸고 역동성이 구현되는데, 그 양상은 대면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상대적 교섭력, 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결혼을 매개로 한 탈국가적 문화 대면에 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다수의 ‘동질적인 한국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차적 생활세계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국경을 넘어 운반해온 문화적 배경은 그 존재조차 무시되고 언어와 생활관습, 역할 기대와 관계형성방식, 가치관 등의 구체적인 차이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결국 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간격을 둘러싼 타협을 봉쇄당한 채 개인적 부적응 상황에 놓이거나 가족내 불화나 사회적 관계의 차단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과 한국계 중국인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등 총38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sup>6)</sup>과 이주여성의 동거가족-남편 또는 시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sup>6)</sup> 자료를 기초로 국제

5) 2006년 4월 한 달동안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체류와 국적취득자를 모두 포함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 상태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조사한 결과로서 F2 비자 체류자를 기준으로 한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6) 인터뷰 대상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베트남 출신 12명, 태국 출신 9명, 필리핀 출신 7명, 중국교포 6명,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2명, 기타 1명(인도네시아 출신) 등 총 38 명이다. 가족인터뷰는

결혼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둘러싼 각각의 대응양상을 짚어봄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해 문화적 소통의 역동성이 구현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문화적 차이 인식과 갈등 경험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 인식과 갈등 경험

#### 1) 문화적 차이 인식

그간 자신이 익숙해있던 세계를 떠나 한국사회로 이주해 온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인 가족이나 이웃, 동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또는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인들이 여러모로 자신들과는 다른 질서에 입각해 행동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출신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해온 문화와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항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단순한 의문과 이해의 한계, 당혹스러움과 불만 등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 예민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의 대면 경험이 장기화되면서 차이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의 광범위한 측면 가운데에서도 결혼 이주여성들이 흔히 느끼는 차이는 일상생활의 가시적 행동과 음식문화, 언어와 이에 동반된 문화적 전제, 젠더구조와 가족구성, 가족 내 역할기대 등의 차이이다. 출신사회에서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경험하는 ‘차이’의 정도와 내용, 차이에 부여하는 의미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의 차이를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국가 출신 여성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 몇몇 측면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여성들이 특수한 차이를 경험하기도 한다.

---

총 30 명-베트남출신 여성의 가족 11명, 태국출신여성의 가족 7, 필리핀출신 여성의 가족 8명, 우즈베키스탄고려인 가족 3명, 기타출신가족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중 이주여성들과 동거 가족 모두를 인터뷰한 경우는 총 23사례이며 그 외에는 이주여성 또는 동거 가족만을 인터뷰하였다.

### (1) 언어와 문화수행의 차이

이주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언어의 차이이다. 물론 한국계 중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상당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차이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억양과 단어 사용, 관용적 표현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조부모가 현재의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사투리”를 쓰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뿐 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한국어를 구사해본 적은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를 경험하는 이들은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여성들로 이들은 결혼과 함께 문자와 어휘는 물론 음성과 음량, 어순과 시제, 접속사 등의 문법 등 언어의 모든 측면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문화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모국어와는 전혀 다른 한국어 속에 파묻히면서 여성들은 자신이 익숙해있던 세계를 떠나 완전히 낯선 세계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심지어 베트남, 태국 여성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ㄹ’받침이나 일부 이중모음 등 특정한 발음을 정확히 발음하기 힘들고 ‘ㅈ’, ‘ㅊ’, ‘ㅉ’ 발음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들에게 정확한 어순에 따라 말하고 시제와 접속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런데, 언어와 관련된 차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매체로서 이주여성들은 각 사회마다 요구되는 언어를 통한 문화수행(cultural performance)방식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특히, 인사말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나 성인이란면 어렵지 않게 구사하는 용어의 사용, 어른에 대한 존대말 사용 요구 등에서 여성들은 이제까지의 언어생활과는 전혀 다른 한국문화의 면모를 실감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모든 국가 출신 여성들에게 특히 낯선 것은 인사말과 존대말 규정, 연령에 따른 명확한 위계와 윗사람을 높이는 태도 등이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만 상대방, 특히 웃어른들이 당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서 출신사회에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어색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 (2) 일상생활양식의 차이

언어와 함께 여성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음식의 차이이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자신 앞에 놓이는 음식은 이제까지 즐겨먹던 음식과는 재료와 조리법, 맛 등이 전혀 다르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은 이들에게 처음 보는, 먹어봐도 도통 맛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음식이다. 물론 한국계 중국인은 중국에서 김치 등 한국음식을 맛보기는 했지만, 그 조리법과 재료 등이 한국 김치와는 전혀 달랐다.

음식의 재료와 맛, 향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다가오면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음을 실감한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출신 여성들에게는 한 끼 식사에 오르는 음식의 가짓수와 양, 특히 명절과 제사의 음식가짓수와 준비량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아 “한국사람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먹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여성들에게 식탁에서 낯선 것은 음식 뿐만이 아니다.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규범에서도 출신지에서 당연히 해왔던 질서와 한국 사람이 보이는 행태, 그들과 함께 있는 여성 자신에 대한 요구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양하고 많은 음식을 집에서 손수 준비하는 것 역시 많은 여성들에게는 낯선 모습이며, 그것이 한국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은 막상 타치지 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유를 갖고 음식과 대화를 즐기는 동남아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말없이 “빨리빨리” 식사에 열중한다. 가족들이 자신에게도 속도를 내 식사하고 음식 준비도 “빨리빨리” 식사 후 뒤처리도 재빠르게 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당황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한 끼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다음에 다시 먹는 한국인들의 식습관 역시 동남아 여성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외에 식탁에서 음식 씹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를 내는 한국인들의 행태 역시 일부 여성, 특히 태국 출신 여성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금기에 가까운 것이다.

음식과 함께 한국의 주거문화와 목욕문화 역시 여성들에게는 의아함 투성이다. 상당수의 동남아 여성들은 처음 접해보는 겨울의 따뜻한 방바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불편을 겪고는 한다. 특히,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여성들은 한국에서 처음 겨울을 보내면서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의 “특이한” 목욕관습을 발견하고는 민족적 선입견에 휩싸이기도 한다. 또한 동남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공중목욕탕은 사뭇 충격적으로까지 다가온다.

### (3) 가족구조의 차이: 양변적 체계 vs. 부계가족

이처럼 초기 한국생활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익숙해져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차이의 경험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한국인들과의 관계가 쌓여감에 따라 여성들은 새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특히, 같은 집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대면해왔던 가족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이상한”태도와 그들과의 반복된 갈등을 통해 가족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대하고 평가해왔음을 어렵잖게나마 짐작하게 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가족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 가운데에서도 이주여성들이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차이는 가족의 구성, 친정 및 시댁(남성에게는 본가와 처가)과의 관계,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한과 역할 영역,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식구의 며느리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것이다. 가족관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한국계 중국인 및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모든 국가출신 여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가족관계에 혼란을 느낄 정도로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특히 남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의 전통적인 공계(cognatic) 또는 양변적(bilateral) 친족 세계 출신 여성들에게 부계확대가족의 원리와 그 안에서 가족들 간에 맺는 관계와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계 내지 양변적 체계는 핵가족을 기초로 하여 부계와 모계 모두를 인정하며 개인의 처지와 운영 능력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성원들의 범위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화도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가족이란 바로 부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핵가족으로서 가족 내에서 며느리와 시댁식구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은 며느리로서 보다는 남편의 아내이자 자녀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댁식구와 며느리의 관계는 명령-의무 관계라기보다는 양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호혜성을 전제로 한 호의-존경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의 틀에 따라 구성된다(Hanks 1962; 김민정 1997; 유인선 1989; 1996).

공계 또는 양변적 체계를 ‘자연적인’질서로 내면화한 이주여성들에게 부부 간에 벌어지는 사안이나 가사,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일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소관이며 부부의 의견 조율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된다. 이에 시어머니



를 비롯한 시댁식구가 관여하거나 심지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을 넘어서 시댁식구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태도이다.

<쑤언<sup>7)</sup>베트남> 자기가 느껴서 하는 건 좋은데, 강제로 시키면 하고 싶지 않아요. 밥 차리고 이럴 때,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면 하고 싶지 않아요. 베트남에서는 부모님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강제가 없어요.<sup>8)</sup>

<씨판(태국)> 태국에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있어요. 아주 적지만. 그런 게 있는 거는 알았지만, 한국에서는 와 보니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태국에 있을 때 남편 얘기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거”라고 이야기해서 태국사람과 성격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달랐어요. ... 밥 먹을 때, 같이 먹어. 밥 먹어. 태국 저 밥 먹을 때, 배고파 먹어. 혼자 (알아서) 먹어. 저 아빠, 엄마 혼자 일하다가 (식사하는 거). 저 몰라 가족 어떻게 살아. 한국에서도 저 배고파 혼자 먹어. 시어머니 보고 “안돼. 같이 먹어” 이렇게. 저 임신. 배고파 혼자 먹어. 시어머니 “안돼” (같은 것을 두고서) 태국은 괜찮아. 한국은 안돼.

가족구조에 있어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차이는 결혼한 딸과 친정과의 관계로 양변적 체계에서는 딸이나 아들 모두 부모에 대한 상속권과 부양 의무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보다 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Potter 1977; 김민정 1997). 그리고 이러한 권한과 역할은 결혼에 의해 중단되거나 변화하지도 않아 결혼을 통해 부부 중 특정인이 다른 쪽 가족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자신의 출신가족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만 사회적 위상을 확립해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재산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결혼기간 중에도 부부는 각자의 재산권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운영해나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질서를 체화한 여성들에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가치

7) 인용문에 표시된 모든 이름은 가명임.

8) 이주여성 대상 인터뷰는 각국의 공식 언어와 한국어 중 인터뷰 대상자가 편한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때로는 각국 언어와 한국어를 전환하며 이루어졌다. 그런 이유로 말씨가 균질하지 않다. 인용문은 한국어로 이야기한 부분은 말한 그대로 표기하고 각국 언어로 말한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해 표기하였다.

있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 얻은 수입의 일부를 친정에 송금하는 것은 가족들의 기대에 충실한 딸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더 이상 친정 사람이 아니라 시댁식구”라고 강조하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돈만 안다”고 비난하는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베트남)> 베트남 남자 중 30%는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아들과 딸 중에서는 딸이 더 많이 도와줘요. 나도 결혼 전에 직장다니면서 돈 번 거 부모님께 드려서 3명 동생 학비를 보냈었어요. 처음 한국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혼자 결정하고 말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안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렇게 먼 데 가서 어떻게 생활하겠냐”고 걱정하시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동생들 학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2명이 일 시작해서 생활이 괜찮네요. 송금은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임신 하기 전에 비료공장 일(입국 1달 뒤부터 3달간 일했었음)했을 때는 집에 보내줬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 농사일은 힘든데 돈이 안 되니까 회사일을 하고 싶어요. 돈 벌면 베트남에 보내고 싶어요. 잘사는 한국에 왔으니 도움이 됐으면 해요. 베트남 친정에 200만원 빚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예요.

<씨퐁(태국)> 태국 엄마가 당뇨병이에요. 인슐린을 하루 두 번씩 직접 놓아야 해요. 당뇨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태국에서는 딸이 결혼해서 자기 가족 갖는 거 한국과 다르거든요. 한국에서는 딸이 결혼해 나가면 부모들이 많이 섭섭해 하죠. 태국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태국에서는 부모가 아프면...딸은 결혼해 남편과 살아도 “엄마 아빠 나이도 들고 수입도 없고 병원비, 의사값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사람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안된다. 안돼.”(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가족생활 곳곳에서 이해하기 힘든 가족들의 태도에 직면하면서 차이를 인식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단지 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며느리의 위치를 강조하고 시댁중심적 생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거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며느리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는 듯이 행동하는데 대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나 한국계 중국인들 역시 자신이 당연히 해온 질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9)</sup> 다만 동남아 출신과 비교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한국계 중국인들은 현재 시댁식구와 동거하는 경우가 없어 차이를 민감하게 경험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도 다소 적다.

9) 한국계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구조에 대해 결혼전부터 듣기는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는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 (4) 젠더구조의 차이: 유연한 젠더구조 vs. 딱딱한 성별분리

모든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출신지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부부간 역할규정과 가사 분담에 관한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인’이라는 이유로 요구되는 역할 또는 제약되는 활동이 자신이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질서와는 다르다는 점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심할 당시는 물론 결혼생활이 상당기간 지속된 시점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바이지만, 남편의 반복적인 행동과 말, 시어머니나 다른 시댁식구의 명시적 요구 또는 암시적 태도, 주변에서 발견하는 한국여성들의 모습, 다른 이주여성들과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그 존재가 점차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출신지에서는 집안일에 몰두하기 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벌이는 여성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 중 베트남 출신 여성 4명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인식이 실제와 부합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의 역할 등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부부간 가사 분담을 당연시했던 여성들은 일대 혼란에 휩싸인다. 상당수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여성은 집에만 있는 것”으로 당연시할 뿐 아니라 “집안에서 음식준비와 육아 등 가사는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사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게 다가올 뿐 아니라, 아무리 많은 양의 가사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에도 남편들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로안(베트남)> 베트남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로 요리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직업생활(해산물 장사)에 열중하시고 집안일의 많은 것을 아버지와 남동생이 같이 했어요. ... (그러니) 나도 요리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그다지 없었죠. 부모님은 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홍(베트남)> 베트남에서는 남자가 돈 안 벌고 여자들이 돈버는 경우가 많았어요. ... 한국여성들이 일 안하고 집에만 있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싶어요. ...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지 않아요. 요리도 혼자서 다하고 빨래나 아이돌보는 일도 혼자서 해요. 남편은 자신이 할 일은 돈 버는 일밖에 없

다고 말해요. 남편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여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베트남에서는 부인이 요리하면 남자는 빨래하거나 청소해요. 한국남자들보다 베트남남자가 실제 집안에서 더 많이 도와줘요. 특히, 친정아버지는 더욱 그랬어요.

<김춘련(한국계 중국인)> 한국은 뭐든지 여자가 양보하고.. 중국은 완전히 평등해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자가 살림하든 나가든 평등하도록, 이혼하면 국가가 여자들 무조건 재산 절반 주고, 여자들 자식 키우고 싶으면 남자가 양육비 내고, 여자 보호를 많이 해요. 중국법은 잘 만들었어요. ... 남편이 말도 없고 하도 착하니까... 시댁 식구들 다 선하거든요. ... (그래도 가사는) 거의 안 해요. 중국에서 우리 친오빠는 새언니 일 나가면 빨래도 하고 청소도 돌려줬는데..

<신파냐(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시간 나는 사람이 같이 집안 일 해요. 여성 날도 있고요. 그때는 남편이 다해요. 주말에도 남편이 더 많이 해요. 남편이 일하면 제가 많이 하고, 남편이 일 안하면 남편이 해요. 여기 한국남자들은 집안 일 안하잖아요.

게다가 한국여성들과의 제한된 사회관계 속에서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성들은 모두 집안일과 육아에 충실한 것처럼 보여‘한국여성’의 정체성과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된다.

<마유리(태국)> 한국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어때요? 태국여성하고 비교하면요? 그냥 생각하면 한국여성 교육수준이 조금 높을 거 같아요. ...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서 보면 여성들이 아이 키우고 임신해있으면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 밖에 안 보여요. 운동하러 다닐 때보면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그런 사람만 있어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저녁에 운동하러 갈 때 보면 어머니 여러명이 앉아있고 아이들은 놀더라구요. “한국여성들은 일 안하나? 아이만 키우나?” 궁금했어요. 한국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있고 “남편이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나”궁금했어요.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제수씨’ ‘형수’ ‘○○부인’ ‘△△엄마’로 부르면서 여성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위의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남성들의 모임에 필요한 심부름을 자신에게 명령하는 태도 역시 무

레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회합 문화에 익숙한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필리핀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던 자신들의 잦은 모임과 각종 오락을 “집안일은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여성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가족들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 (5) 기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와 일상생활, 가족구조와 젠더관계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적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차이를 인식하고는 있다. 이외에 각국 출신별로 특수하게 경험하는 차이도 있는데, 예를 들어 또한 태국여성들의 경우는 태국인들의 생활예절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태도, 특히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발을 사용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흔히 사용하는 자신의 관습적 제스처에 얼굴을 붉히는 한국가족들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 2)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 (1) 일상적 생활 틀의 혼란

생활 곳곳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차이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와 함께 이제까지 자신이 익숙해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 처하게 된 여성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조차 힘들다. 음식, 주거 방식, 목욕 등 매일 매일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들에서도 출신지와 한국의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출신사회에서 익숙해져있던 입맛과 편안함, 상쾌함 등의 느낌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여성들 앞에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주여성들은 예외 없이 생활의 방향타를 잃은 채 먹고 자는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과 이로 인한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은 이주 초기에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으로, 특히 가족관계가 불안정하고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가족들의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화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이점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관심과 이해가 낮지 않은 만큼, 낯설음은 차츰 완화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 특히 음식이나 목욕

문화 등 일상적인 관습과 관련된 어려움은 오래지 않아 극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최근에 이주해온 여성들은 현지에서 한국음식에 관한 드라마나 한국인과의 직접적 접촉 경험 등을 통해 한국인의 관습과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 (2)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의 한계

출신지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가장 공통적이고도 커다란 과제는 자신을 둘러싼 한국인들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사를 이해하고 삶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예절, 역할의 내용과 실행방법 등 다양한 면에서 상해 이해가 가능한 방식을 터득하고 그 수행방법에 친숙해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출신국가나 한국어 구사 수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은 언어소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언어세계에 직면한 여성들은 전반적인 질서의 혼란을 느끼면서 자신에게 낯선 방식을 요구하는 대면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차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여성들은 의문과 문제제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틀에 따라 행동을 계속하고 그들을 가지고 한국인의 행태를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기본적인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 생각과 행동을 구성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참고의 틀을 전환하려는 노력, 즉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물론 음성과 음운, 어휘와 문법, 문자 등 언어 전반에 있어 기존에 본인이 익숙해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결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거의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은 완벽하지 않은 문화적 지식과 수행능력을 가지고 주위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구성하고 있으며 언어소통과 관련된 오해와 갈등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언어소통은 발음과 어휘, 문법과 문자 등에 대한 지식 및 수행능력과 더불어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문화적 정의,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화소통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겪는 고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주여성들이 무엇보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인사말과 같이 적절한 상황에서 알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관용적 표현과 연령에 따라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한국문화의 특수성 그리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존대말이다. 많은 여성들, 특히 어느 정도의 어휘를 구사해 의사 표현에는 큰 무리가 없는 여성들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대말 사용에 대한 한국문화의 요구에 민감하여 이러한 점이 요구되는 어른들과의 대면을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는 경향이 짙다.

한국어 발음과 어순, 존대말 사용 등에 익숙해져도 언어생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언어에 익숙한 여성들이라도 흔히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모르는 것이 보통이며 명시적 뜻 이외에 함의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또한 공식적인 언어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하며 문자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이주여성들이 재문화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문화소통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이로 인해 여성들은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쉽다. 또한 가족내 의사소통이 제약되어 가족 간 친밀감 형성도 저해될 수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결혼중개회사나 통일교의 중개과정을 통해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문화소통능력의 제한으로 가족 형성초기에 성원 간에 신뢰를 쌓고 이해를 넓히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는 한다.

생활적응에 비해 언어와 문화수행능력의 한계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구체화되면서 여성들의 갈등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자녀의 문화소통능력과 이를 기초로 한 성취에 있어 자신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소통능력 부족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때로는 어머니의 문화적 무능력에 대한 자녀와 가족들의 비판에 직면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녀 교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주여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 (3) 수용의 경직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소외

재문화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 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

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대면하고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익숙한 틀과 한국문화의 요소,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자신이 인식하는 바를 적절히 배합하는 적응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찾기도 하며, 한국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증진되고 주위와의 의사소통 폭도 다소 넓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혼합형에 대한 한국인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몰이해로 인해 소외는 계속되고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로부터 부정당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한국인과의 관계 진전과 사회 참여 시도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한다.

이들의 특이한 발음과 어법은 흔히 가족들이나 거리와 시장에서 마주치는 한국인들의 놀림과 훈육의 대상이 된다. 생활 곳곳에서 부딪히는 자신에 대한 놀림과 지적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관계, 특히 자신들의 특이한 발음과 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틀리다”고 지적하며 “올바르게” 고치려는 사람들과의 대면을 꺼리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고 출신지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여성들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경향이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한국사회의 주요한 관계형성 통로를 결여한 이주여성들은 가족 이외의 한국인과는 관계를 맺을 기회조차 거의 없다. 게다가 여성 자신들의 무능력과 잘못된 지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성 스스로 가족 이외에 한국인과의 접촉을 꺼리기도 한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철저하게 가족 내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 외부의 관계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남편이 곁에 없을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청할 데도 없을 정도이다.

#### (4) 가족에 대한 이해의 제약

이주여성들에게 가족은 한국 생활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긴밀한, 때로는 유일한 상대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직면한 문제를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며 각종 의문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들 역시 가족이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언어소통과 함께 지적하는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가족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야기된다는 데 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며 당황스러운 행동을



서슴치 않고 심지어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를 내기도 하는 가족들을 일상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 2. 가족들의 문화적 차이 인식

거의 모든 남편과 시어머니들은 부인(또는 며느리)과 자신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부부간, 부모-자녀, 고-부간 관계의 형성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가족생활 속에서 이주여성과의 대면을 통해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부인이나 며느리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국제결혼을 고려할 당시부터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로 인해 가족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여 결혼을 망설일 만큼 깊이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결혼 당시 가족들이 예상했던 차이란 언어차이로 인해 부부간 소통이 어렵고 자녀 언어교육문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우려는 이주여성과의 실제 생활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이와 함께 가족생활을 통해 직면하게 된 또 다른 차이는 음식에 관한 것으로 가족들이 즐기는 음식을 부인(또는 며느리)이 먹지 못해 고생하는 것을 목격하는 한편, 한국음식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튀기거나 단 음식 등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친 경험을 통해 차이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부인이나 며느리가 심심치 않게 “놀고 파티하고” 어른에게 인사도 안하고 심지어 손님이 와도 누운 채로 일어나지 않으며 손님 앞에서 다리를 뻗고 앉는 등 ‘한국인의 예절’과 ‘여성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거리낌 없이 내보이는 바를 목격하면서 차이의 존재를 어렵잖게나마 짐작하게 된다.

<마순옥(필리핀여성 시어머니)> 정말 답답하지. 말을 통하지 못하니까. ... 5년이나 배웠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어머니, 밥 잡주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 말수 틀린거. ... 어제 (필리핀 여성) 둘이 모였는데도 얼마나 붉는지 내가 문을 닫았어. ... 아주 이해가 가게 안돼. 아 모든 것이. 뭐, 누가 와도, 뭐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오시면 “왔냐” 얘기도 없고.

<이점순(베트남여성 시어머니)> 우리는 학교 다니면 예절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 그런 예절 같은 거 모르는 거 같아. 인사하고 이런 거요. 음식도 기름에 튀기고, 겉저리도 아니고 생나물을 소스랑 찍어 먹고, 된장도 안 먹고. 이 사람은 이제 청국장 잘 끓이고 잘 먹어요. 아직도 된장은 싫어해.

이처럼 가족들은 언어와 음식, 그리고 몇 가지 특징적인 ‘결레’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부인(며느리)의 출신문화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와 음식, 예절 등에 있어서 차이의 구체적 내용, 즉 부인(며느리)이 낳고 자란 곳에서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음식이나 예절은 어떠한지, 그것이 한국문화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자신도 관심도 없다.

그나마 시어머니에 비하면 남편들의 관심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부인의 출신문화에 대한 남편의 관심 역시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기껏해야 관광객으로서의 관심 정도에 불과하다. 심지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나마 남편들이 부인의 출신문화에 관심을 두는 것은 부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적지 않은 남편들이 모국어 습득에 대한 부인의 요구에 따라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있으며 부인의 모국어나 출신문화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다면 가족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부인의 출신국가로 재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남편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과 자료 접근의 문제 등으로 출신문화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서 남편들이 부인의 출신문화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란 기초적인 언어교본을 통해 한국어로 표시된 인사말 발음을 익히거나 부인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얻는 정도이다.

가족들이 지적하는 문화적 차이의 범위와 그 내용은 해당 국가에 대해 “교과서에서 배운” 일반적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에는 업체에서 소개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문화와 해당 국가 여성들의 특징을 기억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그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차이의 발견에 소극적인 가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인(며느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차이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이해를 쌓아가기 보다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외부에서 제시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차이를 경험할 뿐이다.

<김수형(베트남여성 남편)> (결혼생활 4년 4개월) 베트남 여자들이 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베트남 여성이 가정적이고 부모한테 순종적이고 남편한테 순종적이고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준다고.

<윤진호(태국여성 남편)> 근데 정보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죠. 태국은 이렇고 저렇고... 뭐 학벌이 제일 낮다. 태국(여성)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졸이다. 뭐 우리나라 경우에는 고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고, 태국어도 있고,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언어도 하고... 그리고 뭐 가정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관광 국가이고. 그런 얘기 들었고.... 불교 나라라는거 강조했고.... 거진 서양사람이잖아요.

차이에 대한 가족의 인식은 이처럼 피상적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일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다. 한국생활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언어와 음식, 예절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와 역할기대, 젠더구조 등에 있어서 자신이 당연시해온 질서와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겪고 가족과 갈등상황에 놓이는 여성들과는 달리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의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 역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어머니 등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서로 자연스러운 질서로 상정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성들은 한국생활 경험에 따라 언어와 음식, 일상생활의 차이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차이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데 비해, 여성과 함께 살아가면서 차이 경험의 계기를 제공하는 가족들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이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여성들의 생활 경험이 쌓여가면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외에 결혼식을 위해 또는 인사를 위해서 처가를 방문한 일부 남편들의 경우 방문 경험을 통해 음식문화와 결혼식, 사위를 대하는 태도 등의 차이를 직접 목격하면서 부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세계가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들도 차이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방문 경험이 가족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수이나마 비교적 다양한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남편들도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친 해외생활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결혼 이전부터 부인의 모국에서 생활하면서 해당지역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결혼을 계기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해외생활경험에 비추어 문화적 차이에 직면한 여성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는 언어와 음식, 예절 등 몇몇 명시적 차이만이 인식되고 있을 뿐 그 외의 문화적 요소는 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들은 문화적 차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며 그에 대한 관심을 키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Ⅲ.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여성과 가족의 상호 요구

#### 1. 가족의 동화요구

국경을 넘어온 여성과 ‘한국인’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크게 제한된 가운데, 가족들에게 ‘차이’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차이로 인해 가족들의 생활이 힘들고 아이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차이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없어져야 될 대상이며, 차이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이주여성 과 가족들의 선결과제이다. 특히, 가족들은 아이 언어교육에 있어서 차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상당히 민감하다. 또한 가족 내에 존재하는 ‘한국인’들과의 다른 점이 외부인들에게 드러나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족들에게 ‘차이’는 애물단지이다. 차이는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자 자녀 양육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또한 차이로 인해 가족들은 외부에 떼뗄해질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처럼 ‘부정적인’면으로 가득찬 차이에 대해 가족들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차이를 가져온 이주여성이며 결국 해결의 열쇠는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여성들이 ‘한국인’과 차이 나는 언어와 태도 등을 고쳐서 ‘한국사람’처럼 되면 차이로 인한 각가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가족들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등을 “버리고” ‘한국문화’에 동화하기를 직접 요구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여성들에게 “특히 ‘한국문화’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가족들도 일부 있으나, 이들 역시 동화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한영자(베트남여성 시어머니)> 이제 한국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꾸 바뀌야 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아주 베트남을 버리고 한국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으로 국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사람이 되어야한다”는 가족들의 요구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차이로 인식하는 부분, 즉 언어와 요리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특히 윗어른에 대한 예의와 며느리로서의 의무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동일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반복된다. 결혼 당시부터 줄곧 가족들은 일상생활과 아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공부에 충실하고 요리 적응에 애쓰며,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예절바른 태도를 갖출 것을 강조한다. 이에 잘 따르는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부인이나 며느리의 능력을 높이 사고, 때로는 주위의 이주여성을 모델로 상정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윗어른에 대한 예의와 시댁에 대한 태도, 며느리로서의 의무 등은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점은 가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윤진호(태국여성 남편)>가능한 한 빨리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한국어는 빨리 배워야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해요. ...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남한테 표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나는 생각 하거든요. 한국에 국제결혼, 나를 선택해서 왔으면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윤진호’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사람을 맞춰 주지만, 최소한 저를 믿고 왔으면 저를 따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태국에 와보면 태국법을 따르잖아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세 나라 말을 하면 물론 좋겠죠. 조금 조금씩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좀 더 능숙하게 더 잘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어를 빨리..이 사람도 그것을 첫 번째로 했었어요. ... 말하고, 습관도 알아야하고...습관이라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거 하고, 예의도 있고...어차피 살아가는 습관을 빨리 빨리 알아야지 좀 빠르지 않을까...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빠르고....이 남자가 이거구나 라는 것도 빨리 아는 거 아니예요? 나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를 빨리 알 수 있죠. ... 이 사람이 예의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관광으로 사는 나라라 그런지 그런 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예절이라는 것이 윗사람 모시고, 조상 모시고 친지라는 관계가 있다는 거.....윗사람 아랫사람 있고....친구간의 관계...뭐 그런 거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일상 언어에 문제없고 가족들의 음식기호를 잘 맞추고 가사에 충실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윗어른들에게 예절바른 여성에게는 “적응 잘하고 있다.” “한국사람과 거의 같다.”는 평판이 돌아간다. 반면에, 부인이 동화요구에 잘 따르지 못하거나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 “고집세다” “생각없다” “버릇없

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댁에 대한 의무 보다는 핵가족의 자율성과 그 안에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고집세다”는 비난이 흔히 돌아간다. 가족관계가 공고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 가족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 특히, 부부간은 물론 부모-자녀, 시어머니-며느리 사이에 명령과 복종 보다는 대화와 절충이 일반적인 상호관계의 틀로 자리 잡고 있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에게 이러한 비난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이런 비판에 노출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정철(베트남여성 남편)> 이 사람이 고집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제 말에 반대하는 거 보면. 자기가 누구한테 묻는 법이 없어요. 남의 얘기 듣는 법이 없고. [시어머니: 시키는 거 안 받아들여. 싹 손 놓았어요.] 자기들은 음식하는 법이 아주 틀려. 베트남식으로 하는 양념, 소스 이런 거, 그 사람들 식으로 끓여놓으면 못 먹겠더라. 베트남 음식은 자기 입에 맞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혼자 먹어요. 전에 막 먹어보라고 강요했는데, 못 먹으니까 혼자 먹어요.[시어머니: 나 물 데쳐서 먹는 거 좋아하고 밥도 되게 하고 꼬들꼬들하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습성을 안 버리.]

이처럼 가족들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와 요리,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예절 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동화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두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교육하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며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모습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한다. 반면, 동화요구가 실현되지 못할 때에는 부인 또는 며느리에 대한 질책이 이어진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은 이처럼 몇몇 측면에 대한 여성들의 동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경험에 대해 가족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하며, 차이를 둘러싸고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 특히 한국의 가족구조와 젠더관계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부인의 모국어나 출신문화에 대한 관심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남편들이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단순한 관심 이상으로 발전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화요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너무 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순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집안에서 부인으로서 일상

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고 한국인 아이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며느리로서 시댁에 충실한 존재를 원할 뿐이며 그 여성이 가족을 벗어난 ‘한국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결국 여성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요리, 예절 등으로 강조되는 ‘한국문화’란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집안에 충실한 여성의 모습일 뿐이다. 이를 벗어난 모습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기까지 한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될 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윤진호(태국여성 남편)>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없던 한국에 왔으면 한국문화에 따라 지내면서 시어머니와도 조율을 하고, 남편하고도 조율하면서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솔직히 국제결혼해서 맛별이를 한다는 건 둘의 관계를 떼어놓는 거거든요. 서로 멀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국제결혼해서 여자가 와서 직장을 가지면 남자한테 눈을 금방 돌리고, 다른 곳에 눈 돌리는 건 하루예요.

## 2. 여성들의 적응노력과 변화요구

언어와 음식, 공손한 태도 등에 대한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를 여성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또한 가사와 육아 등 집안일에 대한 역할, 부인이자 며느리로서의 도리 등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신의 출신문화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역시 모르는 바 아니다.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여성들은 해당되는 문화적 요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한편으로 한국어와 음식에 대한 동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큰 무리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어머니의 훈련이나 각종 기관의 교육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사람 보다 더 한국음식에 익숙하다”고 자부하기까지 한다. 특히,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은 일상생활 영위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위한 노력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한국어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매스컴과 주위의 담론, 한국어 사용에 대한 가족들의 강압적 요구와 모국어 사용에 대한 비난 등이 합쳐진 가운데 여성들은 표현의 결정적인 제약을 무릎 쓰고서라도 한국어만을 쓰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나, 언어와 음식습씨 습득 요구에 대한 여성들의 부응 노력이 결코 자신의 출

신문화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한국음식을 만드는 동시에 기회 닿는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동향친구들과 나누어 먹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여성들은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남편의 관심과 이해를 요구하고 모국어를 자녀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등 한국문화 뿐 아니라 자신의 출신문화 역시 가족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중국어(중국계한국인)나 영어 사용자(필리핀출신 일부) 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출신 여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홍(베트남)> (아이에게 베트남에 대해) 가르칠 생각이에요. 문화나 정치는 물론, 베트남어도 가르칠 거예요.

<너이(태국)> 남편이 태국어는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맛있어요” 정도만 할 줄 알아요. (배워야 하는) 압력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태국어 좀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싶어요. 서로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 아이는 한국말 하고 태국말은 조금할 줄 알아요. (외할머니) 사진 가리키면 “야이(외할머니)”라고 해요. 내가 이야기할 때에도 “은선이 긴 카오(밥먹어!)”“압남(목욕해!)”라고 태국어를 해요. 두 언어를 다 잘하게 하고 싶어요. 벽에 태국에서 아이들 말 가르칠 때 쓰는 카드도 붙여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한국의 경직된 젠더구조, 특히 여성들의 과중한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 자녀양육과 교육방식, 시댁 및 친정에 대한 관계성의 격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한국식’과는 전혀 다른 출신문화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것을 가족관계의 하나의 축으로 삼으면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권한을 확보해가고 있다.

<드언 (태국)> 태국에서는 (명절 때) 여자들이 단정하게 있는데 한국여자들은 바빠요. 손님 오면 맞아야 하고. 같은 가족인데 남자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식탁에 먼저 앉아 먹고. 식탁도 남자, 여자 따로 있고. 같이 사는 가족인데 남자 먼저 앉아서 먹고 (상) 내오면 여자가 정리하고. 이상해요.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먹어야지. 처음에는 화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싫다”고 형수하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 왜 남자 먼저? 우리 기다리고. 왜 안 같이 먹고요?”... 이미 이런 방식에 익숙해있는 거라고 이해하지만 변해야 해요. 여자들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 저는 어디 가서 보면 “여자들 피곤하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남자들도 바깥일 하느라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데 (여자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가



만히 앉아 있는 거는 그래요. 태국에서는 여자들 일하지만 서로 도와주고. 도와서 정리하고 해요. 그런데, 한국남자들은 도와주지 않고 먹고 나면 담배피우고 커피마시고 자고.

<씨퐁 (태국)> 시어머니는 “한국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한테) 이거는 먹이면 안된다, 계란 노른자 먹이면 안된다, 두부도 안된다. 한국사람은...애기 두부 먹이지 마. 애기가 말 늦게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영양 많은 건데...” (시어머니는) “옛날에 사람들... 이거 먹이면 안돼.” (나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 튼튼하게 키워 할거예요.” 아기 밥 먹일 때에도 태국사람도 못 먹이는 거 많아요...판데 갔다 왔을 때 시장 갔다 왔을 때인가 돌아와서 어머니가 “애기 밥 먹었어” 어머니는 “밥 하고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먹었어” 이상해, 조끔 이상해. 이렇게 영양 없어서. 여러 가지 만들어 줘야지. 그냥 반찬 어른은 김치 뭐 먹고는 괜찮은데, 애기는 그렇게는 안해요. 애기는 다시 만들어줘야지. 태국사람들은 그렇게 안해요. 새벽에 죽 사다가 아침, 점심, 저녁 냉장고에 넣고 먹여줘요, 한국은 그렇게 없어요. 큰애 키우는 거 많이 몰라요. 둘째는 많이 해줘요. 이 나와서 생선, 계란, 감자 삶아서 죽 해주고 시금치도 넣어주고.

#### IV. 소통의 막다른 골목: 가족내 문화적 차이의 충돌

결혼을 통해 가족 내에 마주하게 된 이주여성과 남편 또는 시어머니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에도 격차가 크고 이를 둘러싼 요구의 방향도 서로 다르다. 여성들은 한국생활 경험이 쌓여가면서 차이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데 비해 가족들은 결혼 이전부터 고려했던 몇 가지 차이에 천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들은 가족구조와 역할기대, 젠더관계 등 있어서 출신사회에서는 당연시되었던 질서가 가족들에게는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지만, 가족들은 언어와 음식, 몇 가지 명시적 태도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데에는 부인의 출신문화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한국식’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지 않는 가족들의 태도가 깊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은 집안에서 부인으로서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고 상당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서 아이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며느리로서 시댁에 충실한 ‘한국여성’ 이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생각하지 않으며 여성들이 그 역할

을 숙지하고 능숙히 수행하도록 긍정적, 부정적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여성들은 한편으로 한국어와 음식을 익히는 등 큰 무리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들의 요구에 앞서 여성 스스로의 적응 욕구가 더 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성들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식’과 다른 자신의 출신문화를 강조하고 가족들의 요구에 맞서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

<씨퐁(태국)> 남편이 무엇이든 엄마, 엄마 만 찾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 문화는. 엄마가 못한다고 하면 못하고. 나는 “왜 못하냐?”고 싸웠어요. “엄마말만 들으면 안된다. 부인말도 같이 들어야 된다.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다. 한국문화와 태국문화는 다르다. 당신과 나는 결혼했다. 나는 외국사람이다. 항상 당신만 따를 수는 없다. 반반씩 따라야 된다.” (결국) 남편이 이해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섭섭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이해하는 거 같아요. 며느리 이해하는 거. 6-7년 되니까 이해하는 거 같아요.

결국 ‘한국여성’에 대한 가족들의 동화요구와 출신문화에 대한 이주여성의 인정-적용 요구는 일정한 지점에서 충돌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상대가 대부분 시어머니라는 점이다.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빈번한 갈등을 경험하며 갈등 때문에 따로 나가 살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경우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압박과 언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짱(베트남)>그때 저는 애기 반찬 없고, 그냥 토마토하고 요리하니까 애기 밥 먹여줘요. 엄마 집에 보면 “너 왜 베트남 음식 만들어. 왜 애기랑 먹어. 왜 같이 해 먹어야지. 왜 베트남 음식 만들어 먹느냐!” 저는 베트남 먹고 싶어서 아니고 애기 반찬 없고 그냥 요리해. 그냥 애기만 밥 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엄마 화내고.“너 왜 혼자 먹고 있냐! 왜 혼자 먹어!” 저는 “아니요. 저는 요리하니까 애기 먹고.. 엄마 먹고 싶으면 드세요.”저는 혼자 먹어 아니다. (시어머니는)“너 베트남 요리해! 어떻게 나 먹어!” 나라 다 똑같애.. 저는 한국 음식 안 맞고, 엄마도 베트남 요리 안 맞고 하고.. 저는 애기 먹이니까 엄마 화내지 마세요. ... 많이 화내요. 계속 계속 화내요. 저는 어떻게? 그냥 먹어요. 그냥 버렸어요. 버리는 건 나쁘지만 엄마 많이 화내니까. 보면 시끄러워요. 엄마 더 화내요.

<한영자(짱의 시어머니)>베트남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못 먹어요. 된장국을 끓

이는데, 양파 넣고, 양배추를 넣고, 달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토마토를 넣고. 아이고~ 베트남 사람들은 달달한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드세요! 엄마 드세요!” 그러면 안 맞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표면적 요인은 며느리의 한국음식솜씨나 접대예절과 태도 등 다양한 듯 보이나, 그 기저에는 서로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로 다른 문화적 전제가 깔려 있다. 위의 사례는 토마토 넣은 음식을 즐기는 베트남인과 토마토 넣은 단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국인 사이의 갈등이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역할 범위에 대한 베트남 출신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의 서로 다른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즉, 핵가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나, 시댁 식구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역시 며느리의 몫이라고 전제하는 시어머니는 가족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가족에서 시어머니의 몫으로 규정되는 ‘며느리’ 집안사람 만들기 시도와 다른 한편으로 핵가족 중심성과 그 안에서 자신의 독자적 권한을 의심치 않는 이주여성들의 전제가 정면으로 대치되면서 며느리 의무를 둘러싼 이주여성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빈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시도가 완곡한 권유가 아니라 강압적인 명령으로 표출될 경우에는 갈등의 심각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며느리의 의무 이외에 자녀 양육에 대한 권한 역시 갈등거리로 확대가족의 일원으로 손자, 손녀를 대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해 일정부분 자신의 발언권이 있는 것으로 전제되지만, 며느리는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이며 그에 대해서는 자신만이 배타적인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 당연시하면서 시어머니의 관여를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갈등의 날을 세운다.

<녀이(태국)> 시어머니랑 한 달 있을 때에도 답답했어요. 한 달 같이 있었거든요. 아이 낳고 시어머니가 와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옛날 세대 사람이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게다가 다른 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당연히 여러가지가 다르죠. 먹는 거며 다 다르죠.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뭐 시어머니가 별 뜻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것저것 간섭했어요. “밥 많이 먹어라, 국 많이 먹어라” “우유 많이 먹여라” 새벽 1시, 2시에도 자고 싶은데 먹으라고... 살찌는 거 걱정도 되고. 한국사람은 명령하는 거, 금지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태국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 그래도 말을 모르니까 싫다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구요. 가장 큰 부분은 생각이 다른

거였어요. 한번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2달 되었을 때 배탈이 나서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의사가 아이를 낚히고 잡고서 약을 먹이라고 했어요. 안으면 토할지 모른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으려고 했어요. 나는 (팔, 다리를 잡는 모습을 취하며) 이렇게 하고 먹이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안으려고 하고. “애기 안아야지” “아니예요. 잡아야 돼요.” 큰 소리가 났죠. 남편이 내 얼굴을 쳐다봤어요. 나이 든 분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나도 아이 사랑해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아이가 빨리 나으라고 그러는 거는 이해하지만, 나를 못 믿는지...그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번 그랬어요. 누가 명령하는 거 싫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권한과 역할 영역 뿐 아니라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사안을 둘러싸고도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와 양육분담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요구하며 남편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편견과 간섭이다. 시어머니는 가사와 자녀양육 역시 집안일의 일부로 시댁에 대한 며느리 역할과 함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으로 여기지만, 핵가족 지향적인 며느리에게 부부간에 해결해야 할 일에 시어머니가 관여하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싸오(태국)> 시어머니가 왜 꾸중하는지 모르겠어요. ... 저 고집 세다고 “꼭어야 한다”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 맨날 “남자가 하늘이고 남자가 높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하구요. ... 저도 약간 그런 똥고집. 한국에서는 (여자) 고집 세면 안 되잖아요. 신랑은 고집세요. (시어머니는) “신랑 고집 꺾으면 안돼.”

<홍(베트남)> (가사는) 한국이 더 편해요. 빨래라든지 청소할 때 기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하느라 힘들어요. 기저기 가는 것도 남편은 한 적이 없어요. 아이 키우는 거 혼자서 거의 다 했어요. ‘여자는 도와주지 않고 여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정말 이해가 안돼요. ‘남자는 왕이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 안돼요. 시어머니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요.

또한 직접 일을 해서 자녀양육비와 가정생활비에 보태고 일부를 친정에 보내 자신에게 부여되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여성의 소망에 대해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나서서 “몇 폰 안 되는 돈을 벌려고 집안일은 소홀히 한다”(베가 4)고 비난하고 심지어 시댁의 재산을 가난한 친정에 빼돌리려고 혈안이 된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월권행위로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처럼 집안일에 충실한 부인이자 어머니로서, 시댁에 복종하는 며느리로서 의무를 강조하는 시어머니와 핵가족 내에서의 부인, 어머니로서의 권한을 굳게 확보하고 가족 외부에서 자유로운 경제, 사회활동을 추구하며 친정에 대해서도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며느리들 간에는 잦은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며느리의 강경한 주장에 직면한 시어머니는 ‘잘사는 나라 한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시어머니의 요구에 대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낡은 한국식’ 대신 ‘자신의 합리적인 현대식’을 강조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씨퐁(태국)> 애기 키우고 (시어머니와) 몇 번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나는 애기 넷 다섯 키웠는데..(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는대로 따라라)” “어머니 옛날에는 몇 년이예요? 지금은 2000몇년이예요.” 기분이 안좋아 가지고 말 안하면 답답해요. 성질나면 나는 펍 해요. 저 스타일은.

서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가족 내에서 마주한 양자에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차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시어머니에게 상대방은 무례하기 짝이 없고 존중할 가치도,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필요도 없는 존재이다. 이렇듯 서로의 권한과 역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엇박자는 양변적 틀에 따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과 부계가족의 원리를 이어받아 집안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황정용(한국계중국인)> 다리도 항상 이렇게(한쪽 방향으로 다리를 접어서) 앉았어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양반다리가거나, 조금 편안하게) 앉으면, “왜 그렇게 앉냐?”고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시고 그러셨어요. 서로 같이 사니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시집와서 삼년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게 요즘 세상하고 먼 이야기이어서...그냥 저 스스로 한국의 예절 그리고 그런 점을 상상을 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살겠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보고 “못살겠다”고.

갈등의 끝까지 간 이들은 서로에 대한 소통을 중단하고 “너희 집(나라)으로 가라”로 통보하거나 “어머니와 더 이상 못살겠으니 따로 나가 살자”고 남편을 설득하면서 대면

의 지점을 최대한 축소시키려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편안한 모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수 있는 동향출신 이주여성 그도 아니면 더듬거리는 자신의 한국어를 그나마 이해해주는 다른 국가 출신 이주여성들에게로 향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불손한 태도를 감수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아들(이주여성의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에게 구하면서 각자 서로 완전히 구분된 집단으로 돌아간다. 한국어와 한국음식솜씨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문화간 다리를 놓아가는 듯했던 양자가 가족관계와 젠더구조의 지점에 도달하면서 다리 놓기는 진전되지 않는다. 이들은 더 이상 다리 놓기를 포기하고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 오던 길을 거슬러 가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민정. 1997. “동남아시아의 가족과 여성”. 박장식외.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327-349.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유인선. 1989. “베트남 전통가족제도와 부부관계”. 『아시아문화』 5: 165-182.
- \_\_\_\_\_. 1996. “전근대 베트남사회의 양계적 성격과 여성의 지위”. 『역사학보』 150: 215-248.
- Zlotnik, Hania. 2003. “The Global Dimensions of Female Migration,”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Feature/print.cfm?ID=1-9>.
- Hanks, Lucien. M. Jr.. 1962. “Merit and Power in Thai Social Order” *American Anthropologist* 62.
- Potter, Sulamith Heins. 1977. *Family Life in Northern Village: A Study in the Structural Significance of Women*. Berkeley: University of Berkeley.

제 3 주제  
이주민과 문화관용성

#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조 정 아 (통일연구원)

#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조 정 아 (통일연구원)

## I. 서론

한국에 입국하는 새터민의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 약 8,0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새터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터민들의 남한생활은 앞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었을 때 서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남북한 사회통합의 효과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소규모 예비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새터민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남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전면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남북한 사회와 남북한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취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는 새터민들의 꿈은 그 시작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들이 구직과 직장생활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인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남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갈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



의 갈등과 ‘문화통합’ 문제를 다루었다.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이며 질적 분석은 드물었다.<sup>1)</sup> 설문조사 분석과 같은 계량적 접근은 새터민의 사회적응 현황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등과 같은 특정한 주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질문은 새터민 자신이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갈등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려는가라는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보다는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최소한 2년 이상, 길게는 10년 정도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 성인 남녀 28여명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적응기간별로 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성별, 연령별, 적응기간별 면접대상자수는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성별 인원

성별 인원 (명)	남성	여성	합계
	12	16	28

〈표 2〉 심층면접 대상자 연령별 인원

연령별 인원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2	10	10	3	3	28

〈표 3〉 심층면접 대상자 적응기간별 인원

적응기간별 인원 (명)	2년 미만	2-3년	3-5년	5-7년	7-10년	합계
	2	5	7	12	2	28

- 1)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다. 독고순. 1999.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영. 2002.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조영아·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제 16권 1호.; 이부미. “남한사회에서의 탈북 부모들의 역할적응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 권리연구』, 제9권 4호.; 김화순. 2004. “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향진. 2005. “탈북 청소년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 조영아·전우택·구현지. 2006. “탈북 여성들.”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외.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 출판부.

새터민 접촉집단(Interface personnel)에 대한 집단면접조사(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집단면접조사는 신변보호담당관과 새터민 지원단체의 상근자와 자원봉사자 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3명,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남한 주민이 지각하는 북한 문화의 특성과 갈등요소를 파악하였다.

## II. 직업선택과 취업

### 1. 구직 과정: ‘좁은 문’, ‘미래를 위한 유보’, ‘생존전략적 의존’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때, 우리 사회와는 다른 교육 체계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새터민을 원하는 일터는 정말 드물다. 새터민이 ‘귀순용사’로 불리며 대접받던 시절에는 이들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것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일자리에 대한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터민들의 구직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이나 남한 거주 가족, 이미 정착한 친분있는 새터민, 종교기관 등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초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이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사례 C4, H1, K7)이나 친지(사례 C1, C7, H2, K4, K8, L1)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의 첫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 새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또 다른 구직 경로는 ‘벼룩시장’과 같은 지역 정보지나 구인 전단(C4, L2)이다. 또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기관의 취업알선(K3)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통해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이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비정규직이기 쉽다.

새터민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높고, 고용형태의 안정성은 낮다. <표 4>는 새터민 취업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각 연도별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새터민의 실업률은 30%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표 4〉 새터민 취업상태

	2000년 조사		2003년 조사		2004년 조사		2005년 조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취업	58	75.3	141	19.1	67	57.3	466	70.3
실업	19	24.7	306	41.5	44	37.6	197	29.7
기타 (학생, 주부)	-	-	290	39.3	6	5.1	-	
전체	77	100.0	737	100.0	117	100.0	663	100.0

주: 2004년 이전의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sup>2)</sup> 연구, 2005년 자료는 북한인권정보센터<sup>3)</sup>의 연구를 참조한 것임.

2005년에 실시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터민들은 건강이 나빠서(35.5%), 학생 또는 직업훈련기간이기 때문에(19.0%), 나이 때문에(17.6%), 일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12.3%), 능력이 부족해서(9.5%) 등의 이유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원천봉쇄’를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능력과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사실 소유하고 있는 재능들은 다 있거든요. 북한이라 해서 다 무식한건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직업이 차려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고민에 고민. 것처럼 고민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 다른 기술적 자격도 다 있지만은 거기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 실망하고 여러 가지로 불평부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C2, 여성, 6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1996년도 탈북)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노동시장에서도 새터민이라는 신분은 중국교포들보다도 열악한 조건이 된다. 취업의 문은 고령자에게는 더욱 좁다. 40, 50, 60대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어도 연령 때문에 구직이 어렵다.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저임금의 단순 아르바이트직인데, 이마저도 이들에게는 쉽지 않다. 새터민들은 구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2) 선한승 외. 2005.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3) 윤여상 외. 2005. 『2005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

내가 벼룩시장 보고 전화드립니다, 직업을 구할라고 하는데. 나이 얼마요? 57센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요? 나는 대한민국, 어. 솔직히 말하세요. 난 북한사람. 안받아요, 북한사람! 이런 단 말이야. 그런 데를 못들어 간단 말이에요. 산모 돌보고, 아이 돌보고. 그런 거 하는데 있어, 벼룩시장에 올려놓은 거. 내가 그래서 욕을 했어요. 나이 무관하고 그래서 했는데, 북한 사람들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되냐구, 북한 사람도 사람인데, 써보지 않고 나쁘다고 판단하겠는가. 그러면 일단 와보라고 와보고 판단하겠다고. 바로 채용한다기보다는 탈북자니까 직장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일단은 일을 해보다가, 좀, 한, 채용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 못한다고 생각하든 바로 그냥.(Y1, 여성, 58세, 전직 노동자, 현재 무직, 1998년도 탈북)

결과적으로 새터민들은 비정규직, 불완전고용 상태에 처해있거나 정규직일 경우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로 남아있게 되기 쉽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취업한 새터민 중 정규직의 비중은 36.1%<sup>4)</sup>, 24.5%<sup>5)</su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적응기간 1년 이내의 동일집단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04년까지 실시한 추적연구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구대상 집단 중 취업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 집단의 실업률은 2001년 38.3%에서 2004년 19.9%로 감소하였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2001년 25.1%에서 2004년 35.8%로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윤덕룡 2006, 472-473).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새터민의 급증으로 인하여 정착을 시작한 새터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개별 새터민의 관점에서 보면 적응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 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새터민들은 미취업이나 고용 불안정의 원인으로 자신의 사회적 자본 부재, 직업 능력 부재 등을 꼽는다. 이들은 미취업과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자기가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곳이니깐 그것이 좋더라구요. 저희 같은 것들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깐 먹고 살기가 힘들지. 능력 있고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은 그래도 인맥이 있잖아요. 저의 같은 경우는 뭐 무슨 같이 전수받은, 같이 교육받은 탈북자 밖에 없고. 민간단체에서 도와주는 것도 어느 한도고.

4) 이금순, 임순희 외. 200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5) 윤여상 외. 2005. 『2005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앞으로 노가다나 해야 되지만, 노가다를 하자고 해도 할 일이 없어요.(C7, 남성, 42세, 전직 노동자, 현재 건설노동자, 1998년도 탈북)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에도 이들이 남한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비롯한 직업능력 면에서 새터민들은 남한의 구직자들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서있지 못하고, 실력 직업능력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출신이라는 이력은 구직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때로는 구직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저는 (취업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이력서에 기입) 안할 생각이예요, 일단은. 해서 만약에 그걸 해서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게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선 단체도 아닐 거고, 이윤을 첫째로 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에서 과연 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을 것 같아요.(C5, 남성, 31세, 전직 의사, 현재 학생, 2000년도 탈북)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적응 초기에 몇몇 직장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좀 더 나은 조건과 선호하는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진학을 선택하거나, 생계보조비를 받으며 아르바이트하는 생활을 장기화하는 등의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구직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새터민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전략은 진학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갖추는 것, 즉 ‘미래를 위한 유보’를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관련 지원사업에서 새터민은 거주지 보호기간인 사회편입 후 5년간 지방노동사무소의 취업보호 전담인력의 지도 아래 총 3회 동안 직업훈련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고, 이때 직업훈련에 따르는 훈련비 및 각종 훈련수당이 지원된다. 훈련수당 유형에서는 일반 남한 신청자들에게 없는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통해 전직에 성공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직업과 직장 선택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에 의한

직업훈련과 전직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40대 초반의 남성 노동자로 북한에서 18년간 제강소에서 근무했던 K9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남한에서 용접 기술을 배워 자동차계열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남한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면서 생전 처음으로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용접일은 처음 해 보는 일인데, 울산에서 학원 다녀가지고 용접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땀거든요. 그래서 취직해가지고 일하는데, 일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어떤 점이 재미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일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마지못해 일했거든요. ...사람이 일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한번 그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업을 싫든 좋든 해야 되거든요.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었거든요. 북한에서의 직업은 내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학원에서 쇼트 용접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 쪽으로 하게 되었어요. 남한에서 저의 용접기술이 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달라요. 한 주 전에 한 용접하고, 지금의 용접하구는 많이 달라졌어요. 용접기술이 많이 느는구나. 내가 여기서 1년 혹은 더 많이 숙련해서 어디를 가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당당히 일할 수 있다고 이런 걸루 생각 많이 들거든요.(K9, 남성, 41세, 전직 노동자, 현재 노동자)

새터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비, 주거비로 지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를 잡기까지 새터민들은 정부의 지원금과 안보 통일 강연이나 교회에서의 간증 등의 간헐적인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정착금으로서 한 2-3년 밖에 있지 못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또 그래도 강연도 시켜주고 간증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복지관에서도 등록해가지고 복지관에서 요모조모로 도움도 주고. ... 그렇게 해서 서민층 대우, 그러로서 대충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했죠.(C3, 남성, 41세, 전직 노동자, 현재 무직, 2004년도 탈북)

그런데 새터민지원제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을 안하는 것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기보다는 5년간 지원되는 지원금과 비정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어영부영’ 지내기도 한다. 40대 초반의 5인가족의 가장인 한 새터민 C7은 “교통비에 식대를 떼고 나면 백사십인데, 나왔아 놀며 백십만원 타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회사를 때려치웠다”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규직에 취업하기보다 생계보

조를 받으면서 소득원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존 방식을 한 연구자는 ‘임시적 의존’, ‘생존전략적 의존’이라 명명한 바 있다(이기영 2005, 180). 새터민들은 노동시장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화된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받으려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일컫는 것이다.

## 2. 직업경력 단절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취업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직업경력의 단절을 경험한다. 선행연구(이금순·임순희 외 2003)에 의하면 북한에서와 같은 직종을 남한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학생을 제외하면 최대한 13%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에서의 직종 중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원·노동자의 경우에도 남한에서 동일한 직종을 유지하는 경우는 10%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남북한의 산업구조와 산업기술의 차이 때문에 기능직의 경우에도 직장 선택이 제한적이고, 배정된 주거지를 떠나 자신의 직업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5>를 보면 새터민의 현재의 직업과 장래 희망 간의 괴리는 더욱 크다. 현재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50%에 가깝지만, 희망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연구직과 사업을 원하는 비중이 50%에 가깝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전문기술직이나 독자적인 창업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 현실은 이러한 바램과는 큰 거리가 있다.

〈표 5〉 새터민의 직종별 취업현황과 장래 희망 직종

직종	취업 현황 (%) <sup>6)</sup>	장래 희망 직종 (%) <sup>7)</sup>
단순노무직	48.8	-
서비스 및 영업, 판매직	18.8	7.1
기능 및 기술, 조작직	17.5	-
사무직	13.1	6.3
제조 및 생산직	1.7	14.4
전문연구직	0.1	15.7
교사직	0.1	-
행정관리직	-	2.8
개인사업	-	31.4
기타	-	22.2
계	100	100

6) 김임태. 2006.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창립세미나 발표자료.

7) 이금순·임순희 외. 200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북한에서 직업지위가 낮았던 새터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했던 새터민들도 직업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정치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큰 고위행정직이나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의사, 약사와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의 전문가 자격 역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에 입학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의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의대를 가려고 의대 시험을 몇 군데 봤어요. 한 4군데 봤어요, 첫해에. 의대 시험을 한 네개를 보고 나니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의대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들어가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의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재수를 해서 뭐, 2~3년 아무리, 내가 재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 낭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제라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다른 과에 진학했어요).(C5, 남성, 31세, 전직 의사, 현재 학생, 2000년도 탈북)

그래서 그 대학원(북한학 전공)에 들어가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내가 약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 갔어요. 보건복지부 가니까, 좋다, 학력은 인정된다. 학력은 인정되지만 자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격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을 다시 따자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대학을 다시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대학을 어떻게 다니냐, 이 나이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도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하면 할 수 없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L3, 여성, 41세, 전직 약사, 현재 학생, 2001년도 탈북)

그래서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던 대다수의 새터민들은 자신의 직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대학에 진학이나 자격고시를 준비하거나(L3, P1), 아니면 북한에서의 직업경력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게 된다(C1, C5, H4). 이들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갈등과 좌절을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착지원 제도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터트리다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현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천직’을 포기하기도 한다.



북한에도 의과 대학이 7년이고요. 의사 경험이 10년, 15년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진료를 하라면 지금도 해요. 설비를 다루기는 좀 어려워도 그건 금방 설비는 몇 가지만 익히면 진료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 이제 면허가 인정이 안 되는 거는 둘째 문제이고, 전혀 관심이 없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라하는 거예요. 제가 통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학 안 찾아 다닌 데가 없어요. 완전히 빌어먹는 신세라고. 도와주십시오, 도와 달라, 좀 내가 의사면허를 딸 수 있게끔 해달라. 2년 동안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하면 시험을 그림 보라. ... 의사다라고 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복무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복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최소한 할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의사로서 대우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예요, 안와요. 정말 안와요.(P1, 남성, 40세, 전직 의사, 현재 무직, 2003년도 탈북)

교원이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쭉 봤어요. 그 때 내가 첫 번째로 힘들었던 것이 역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가 배워 온 역사에 대해 내가 너무 역사를 모르는구나. ... 그 다음에 수학, 국어를 놓고 볼 때 가르치는 방법. 북한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법. 제가 힘들더라구요. 제가 억양도, 한국에 애들이 억양을 놓고 얼마나 거부감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하면 안 되겠다고 포기가 들어가더라고요.(C1, 여성, 41세, 전직 교사, 현재 초빙강사, 2000년도 탈북)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신의 직업 경력을 인정받고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을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문에 취업하여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7년간 중등학교 교원으로 일하다가 남한에 와서 식당일 등 용역직, 생산직 노동자, 통일교육원 강사, 보험판매 등의 일을 하다가 통일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새터민 정착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1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H1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공무원 사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내가 정확한 자리에, 내 취향에 좀 맞다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원칙적인 것을 바라는 데니까. 우리 새터민들한테도 원칙적인 거, 되게 칼날같은 데가 있어요. 북한의 교육자들 그런 거 있거든요. ... 무슨 별 아이들 다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는 마음이 절반이

돼야 되요. ... 개네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와요. ... 탈북자가 전화 오면 이거 또 무슨 전화일까하고 근심을 하고 그래요. ... 만나서 밥도 사주고, 김치도 해서 퍼다 주고, 전화로 잘 알려두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비슷한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붙여요. 애한테도 과업을 줬어요. 누구네 가서 돌봐주라, 진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H1, 여성, 52세, 전직 교사, 현재 정부 계약직, 1997년도 탈북)

위의 구술 속에는 북한의 교사상이 전형적으로 녹아 있다.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교사상은 ‘혁명가’이자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이다. 엄격한 규율과 사상의식으로 학생들을 단련하여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혁명가’로서 교사의 역할이라면, 학생 개개인에게 늘 마음을 쓰며 보살피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교사의 역할이다. 자신이 새터민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과업’을 부여했다는 H1은 북한에서 교직생활을 통해 체득한 교사의 감성과 태도를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 III. 직장생활의 갈등과 어려움

취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적응기간 1년 이내의 동일집단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04년까지 실시한 추적연구(윤덕룡 2006, 487-488)에 의하면 새터민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초기 적응기간에는 언어 문제와 편견 및 차별대우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의 적응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장래성 부재, 저임금, 해당분야 지식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직무관련 사항이나 근무 조건의 문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직업과 직장의 장래성이나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직장생활에 ‘성공’하는가를 결정짓는 관건인 것이다.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나가지 못할 경우 이직이 반복되고, 결국은 직업적 정착도 어려워지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터민들이 직장생활에서 부딪히는 갈등의 요소로 언어 장벽, 직무 수행의 어려움, 노동 강도와 노동 규율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인식과 태도 등

을 살펴보았다.

## 1. 언어 장벽 : ‘사오정’

새터민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는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이다.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음운학적인, 용어상의 차이뿐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체제·문화적 간격’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김화순 2004, 69). 새터민이 구사하는 ‘북한 사투리’는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와는 다르게 이들이 가난하고 촌스러운 동네인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낙인’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말 들으니까 몇 번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짝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린다는 친구들 만나봤는데, 지판에는 가리웠다는데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한번은 가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손이 베니까 가서 밴드 가져오라 하는데, 밴드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밴드가 뭔데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변명할 거예요. 난 밴드가 뭔지 모르는데,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나름대로 변명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저놈 조선족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K8, 남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1997년도 탈북)

언어 차이로 인해 새터민들은 직장 동료로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오정’ 취급을 받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새터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쏟는다. 노력의 결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일이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 ‘표준말’을 알아듣고 어색하지 않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된다. 이때부터는 이직을 할 경우 북한사람임을 숨기거나 ‘강원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통하게 된다. 문제는 ‘언어적 낙인’이 제거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의사소통의 부자유스러움과 인간관계의 왜곡이다.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사투리 해 대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하고, 경상도 사람이 “살”이라 하지 않겠는가. 일충인데 일청하고 하면, 그 사투리의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방언 다 있어요. 그 안에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안 맞아요. 이 사람 말에 적응할까 싶으면 저 사람은 “일청”해요, “일청”. “일청”이 머라지? 일청에 있는 나를 부르는데 “일청”하고 대하면, 도대체 뭐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니까 말해 뭐해” 하니까. 짜증이 나버린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것, “이제 막 들어갔잖아”하는데, 젊은 사람한테 말하면 딱 알아들을 텐데, “예? 이사갔다고요?” 얼마나 진짜 짜증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다른데 적응하는 게. 이따금씩 누가 필요하면 소리치고, 그 말을 제가 3개월을 익힌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제 말을 3개월 알아들어요. (K2, 여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학생, 1998년도 탈북)

## 2. 직무 수행의 어려움: ‘کم맹’과 ‘영맹’ 탈출하기

직무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영어와 컴퓨터이다. 특히 사무직이나 전문기술직일수록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은 크게 문제가 된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관련 전문기술직에 종사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학력, 고령자,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경우에 컴퓨터와 영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는 새터민들이 희망직종과 거리가 먼 직장에 취업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무실에, 많이 욱먹었죠, 몰라서. 업무가, 이제 컴퓨터로 자동차 제조공장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ID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차 ID를 모르니까. 내가 그때는 컴퓨터 교육을 다 못 받았으니까, 탭을 눌러야 되는지 뭘 눌러야 되는지 그걸 몰랐지. 거기에 있어서 업무차이가 내가 제일 힘들었어, 욱도 많이 들었지만(C1, 여성, 41세, 전직 교사, 현재 초빙강사, 2000년도 탈북)

몽땅 영어로 써버리니까. 영어로 대화가 거의 80%가 영어예요. 회사가 모든 전자부품이 영어니까. 북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지만, 이렇게 글을 보면 읽어서 번역은 되는데 발음이 틀려요. 영어가 처음에 와서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익히니까, 5년 하니까 거의 적응되었습니다.(K7, 남성, 41세, 전직 도인민위원회 근무, 현재 전문기술직, 1999년도 탈북)

## 3. 남북한의 노동 강도와 노동 규율 차이: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 대 ‘죽기살기로’

새터민들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갈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남북한 직장 문화의 차이와 관계 맺기 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우선 취업 후 며칠만 일해보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남북한간 노동 강도의 차이이다. 북한에서는 편직공장, 방직공장과 같이 기계가 노동의 속도를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잦은 휴식과 ‘느릿느릿 일하기’의 형태로 노동시간의 사적 점유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강도와 생산성은 낮아진다. 남북한간 노동강도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할 수는 없으나, 남한에서 일하는 대로 하면 북한에서는 “로력 영웅이 된다”는 한 새터민의 말은 이들이 체감하는 남북간 노동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노동강도의 체감온도 차이를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 야간 노동은 밤 12시에 가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실적 올려놓고, 제일 졸음 올 때, 3시, 4시 그때는 깜빡 졸아요. 졸고 나서 한 4시부터 또 막 해가지고 인계시간까지 하면 계획을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야간 작업이라고 해도 단 1분 1초도 눈을 못 붙이는 거예요. 힘들더라구요. 여기는 단지 한 시간하고 5분, 커피마실 그 시간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일하면서 즐거거든요. 그러면 낮에 자지 않고, 돈 벌러 왔다는 게 무슨 잡생각에 자는가,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니까 낮에 감히 딴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서너달 하니까 살이 막 이렇게. 야, 이게 살려 왔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L3, 여성, 41세, 전직 약사, 현재 학생, 2001년도 탈북)

북한은 그렇게 일 안해요, 사회주의는. 도장만 찍고, 대가리하고 꼬리만 있어요. 몸뚱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사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체제적인 그런 거.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자기 개수에 따라서, 자기 질적인 것에 따라서 양과 질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피터지게 일하잖아요.(H1, 여성, 52세, 전직 교사, 현재 정부 계약직, 1997년도 탈북)

북한에 비해 상당히 높은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는 새터민들의 이직이나 사직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노동강도의 세기는 근무 태도와 일에 대한 책임성, 노동 규율의 이완 정도와도 연결된다.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가 세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 시간이나 시간당 생산량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한의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도 많고, 창조성 있고, 자의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에서 모두 직장 생활을 경험한 한 새터민은 남북한간 노동 규율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들어가서 열심히 못 했었죠, 솔직히. 그리고 하루 친구 결혼식 있어서 지방에 가려니까 말 안 하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출근 안 하겠다고. 출근 안 한다,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하루 결석하고, 주말 딱 끼고 해서.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이제 그만 일 해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때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남한에 와서 처음 잡은 직장, 처음 쫓겨난, 그제. 그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아 안고 다신 이렇게 살지 말자 하는 계기가 되었고. ... 우리 북한에서 살 때는 내가 만약에 조퇴하고 싶거나 하루를 쉬고, 혈한 일 하고 싶거나, 뇌물 같은 거, 뇌물 같은 거 고이는 거, 뇌물 쓰는 거. 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 쓰는 건, 내가 편한 의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K2, 여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학생, 1998년도 탈북)

북한에서 일했던 태도와 일의 리듬을 가지고 남한의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기 쉽다. 북한에서는 ‘열성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적당히’ 직장일을 하고 ‘적당히’ 자신의 일을 보거나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 게을러보이는 노동의 태도에 대한 동료들의 질책은 새터민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담스러움이며, 이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색함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에서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북한사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정직히 일하면 바보예요. 북에서는 바보예요. 너 그래봤자 굶어죽어. 어떻게든 꺾부러가지고 땡땡이 치고. ... 항상 일을 대충대충 겉보기에 꼴렁꼴렁한 것이 몸에 체질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되리만큼 하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보면 말을 하잖아요, 너 일 똑바로 해라. 그러면 북한 같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노동자 처지에 내가 꼴렁꼴렁해도 도적질해도 먹고살면 되지 니가 뭣 때문에 말을 하며, 때려죽일 놈인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예요.(K8, 남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1997년도 탈북)

북한의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 남한 사람들에게 새터민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는 ‘나쁜 사회주의 근성’으로, 개인적 ‘게으름’과 ‘불평불만’으로 해석된다. 신변보호담당관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취직을) 시켜준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게으르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면 성질내고 나가 버린대요. 안다니면 될 거 아니냐고. 거기서 한마디 하면 싸움이 되고. 북에서는 네시면 네시에 끝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며칠 하다가. ... 사회주의가 있어서 잘 안되더라구요. 전반적으로 힘들다고 그만둘라고 하는 게 많죠. ... 지금은 게으르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있어요. 나쁜 인식이 퍼져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 쓰레기 같은 것들 버려야 하는데 있잖아요, 안 버린대요. 꼭 시켜야 버린대요. 꼭 일을 시켜야 한대요. 꼭 시켜야만 한대요. 방식이 그렇대요.

#### 4. 직장 문화의 차이 : 공동체문화 대 무관심과 경쟁

직장 문화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또 다른 차이는 공동체문화와 동료관계이다. 북한의 직장 문화는 문화공동체적 성격을 지향하는 반면 남한의 직장 문화에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 도모라는 경제적 도구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반해, 북한의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는 문화 공동체의 성격을 보다 짙게 띠고 있다. 북한에서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반 단위의 공동체적 관계는 종종 노동시간 이외의 시공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는 작업반원들은 일과 후까지 이어지는 공동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유대감을 다지고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간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설이나 망년회, 명절 등 일년에 몇 차례 작업반원들이 쌀이나 식료품을 각출하여 한 집에서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다고 한다. 작업반 동료의 관혼상제에 대한 공동의 참가와 ‘보장’도 작업반 단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작업반장과 작업반원은 오랜 기간 노동과 공장생활을 함께하기 때문에 직무상의 상하관계만이 아닌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내적 결속력이 높고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는 북한의 직장 문화에 익숙해있던 새터민들에게 남한의 직장 문화는 동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인 것으로 비친다. 이들은 남한의 직장 문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로가 사실은 직장 동료라면 구체적인 부부간의 관계까지는 몰라도 서로 정말 힘들어 할 때 터놓고 얘기하면서 도움도 요청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꽤 많겠지 만, 분위기로 볼 때는 딱 내 것만 이렇게. 저쪽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면 서로가

막 해주거든요. 서로 사무실이라 해도 서로 같이 주판알 같이 눌러주고, 불러주고, 서로 한쪽씩 정 힘들면 막 같이 적어주고, 이러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데 여기는 뭐 같이 늦게 까지 일해도 “수고해라” 이정도 하고 그냥 가 버리잖아요. 하다못해 체조하는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껏해야 회식 술 먹으면서.(H2, 여성, 30세, 전직 사무원, 현재 사무원, 2000년도 탈북)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면 다 같이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게 주의이지, 여기서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일을 배워주나, 기술을 배워주나요. 기술 낮은 사람이면 낮은 임금 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기능 없는 사람은 월급도 임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밑바닥을 주는 거고, 그 기능공은 높은 임금을 주면서 또 그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K2, 여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학생, 1998년도 탈북)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사람간의 이질감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 또는 여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음에 인용한 사례가 그러한 예이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북한에서 교사 생활과 연구직에 종사했다가, 남한에 와서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가방 만드는 공장에 생산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생산직 노동자와 전직 인텔리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의 주인공은 남한 공장의 기혼여성 노동자들과 강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동질감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공유와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직장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표현되었다.

되게 친했어요. 내가 그 아줌마들 만나면, 지금도 이따금씩 (보고 싶어요). ...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며느리 홍보고 있고. 빌어먹을 년, 첫아이 가져다 댔는데, 두 번째 아이 또 데리고 왔다구, 또 봐 달라구. ... 와서 가정 이야기 하고 그러면. 북한하고 사는 것 똑같아요. 뭐 김치도 할 줄도 모르는 며느리 얻어 왔다는 등 별 홍보를 다 보고 있지. 우린 같은 아줌마들이니까. 자기 아들은 또 뭐야, 아들 자랑도 잘해요. ... 그런데 다녀보니까 가정적인 거,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또 자기네들끼리 갈등도 빠죽빠죽하고. 되게 나를 존경하더라구. 북한에서 선생하다 왔다구. 선생하던 사람이 이런데 와서 일을 한다구 되게 존경해 주더라구요. ... 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방석도, 이만큼. 그냥 앉아서 일하니까 엉덩이가. 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회도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것도 느꼈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 아줌마들 지금 만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H1, 여성, 52세, 전직 교사, 현재 정부 계약직, 1997년도 탈북)



## 5.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 ‘솔직하게’ 대 ‘이중적인’

새터민들이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이다. 새터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사람들에 비하여 직설적으로 대화를 하는 편이다. 이는 유치원때부터 ‘상호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지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식 생활방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직설적이고 보기에 따라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생경하고 거북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새터민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남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데 대하여 당황하게 된다. 새터민들은 자신이 호의로 한 말을 동료들이 오해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된다.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는 일반적으로 새터민들이 직장 내 동료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의사소통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예와 그에 대한 새터민의 감정 표현들이다.

여기는 좀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어도, 참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있는 그대로. 조금 안 좋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싸줘요, 그냥. 이걸 아니다 말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싫으면 싫은 대로 표현해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 싫다, 직접적으로 막 얘기한다구요. 남쪽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행동하데요, 나보고. 윗동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안 굽혀요. 막 저두 뭘 좀 참자고 했다가도, 그걸 참으면 잠이 안와요. 참으면은 막 요기서(가슴에서) 화가 치밀고, 오히려 참으면 더 화가 나요.(K3, 남성, 39세, 전직 노동자, 현재 건설노동자, 1998년도 탈북)

쌓인 게, 남자들이 주먹질해서라도 풀면 다시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더 화가 터지죠. 그래서 그 직장을 뛰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직장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다 울화를 터트려놓고 싶은 욕망이 그냥 자라는 거예요.(K8, 남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1997년도 탈북)

이상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의 의사소통 방식을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으며, 터무니없이 자존심이 강하여 타협할 줄 모르고,

때로는 폭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새터민들은 북한 사람들의 성격과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북한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순수해요. 순수해가지고 조그만 말 마음에 어긋나면 딱 뒤집어 놓거든요. 남한 사람들은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확 다 꺼내놓고 확 다가가요, 외롭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안받아줘요. ... 그게 정말 큰 차이 같아요.(K8, 남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1997년도 탈북)

저기는 뭐랄까. 정말 수틀리면 한대 쥐어박는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얄밋다고 할까, 좀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그걸 못 넘겨서 마지막에 흥기까지 드는. 근데 웬만해서는 참아야죠. 참아야 된다고, 사람들 생각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살 약올리면서. 저기는 서로가 이제 뭐랄까, 서로가 성질나고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세던 부딪히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서 담배 한대 마주 피우고 좋게 하고, 또 술이나 한잔 하고 그러면, 풀면 끝인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수틀리면 등 돌리면 다더라고요. 등만 돌리면 다더라고요.(L2, 남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공기업 계약직, 1997년도 탈북)

즉 남한 사람들에게 직선적이고 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은 새터민들에게는 순박하여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고, 남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폭력적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새터민들에게는 남자답고 뒤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며’, 남한 사람들의 ‘세련된’ 의사소통 방식은 거짓이고 허식이라고 본다. 즉 남북한 사람들의 말과 의사소통의 도구들은 하나의 ‘기표(signifiant)’로 표현되지만 각자 서로 다른 ‘의의(signifie)’로 해석되는 것이다.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또는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체계를 갖는 것이다.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갈등을 불러오고, 이것이 적절한 시점에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새터민 전체나 남한 주민 전체를 불신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한 새터민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오해로, 다시 거리감의 확대와 적대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가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하다가, 아까 확 다가간다는 것, 저는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다 오픈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돌아다니는거예요. 믿고 나는 그랬는데, 거꾸로 나의, 그리고 나를, 믿고 다가가면서 더 가까이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길 원했는데, 더 멀리하면서 뭐랄까 비웃는 거 있잖아요. 조금 멸시받고 자멸받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참았거든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참다가, 참는 것도 정도잖아요. 쌓이다가는 언젠가는 터지잖아요. 그래서 막 때릴려고 하니까 거의 주위에 있는 남한사람 편인 거예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일단 자기 호기심이 만족되면 바로 떠나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한 상처예요. 나는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면 탁 지나가도 인사만 하는 정도로 무관심해 버리고. 이러니까 외면당하고 배신당한 이런 거 막 느끼게 돼 버리고, 이게 아프지.(K8, 남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1997년도 탈북)

## 6. 새터민과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인식과 태도

새터민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갈등은 남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들의 이해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가 새터민의 직장 내 갈등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양계민·정진경(2005, 104-110)의 연구에 의하면 새터민과의 접촉 경험이 전혀 없는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에 대해 거친 성격, 의존성, 실리적 특성 등 높은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동시에 매우 높은 연민의 정서를 가진다.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들의 이미지가 배신자(H1), 거지(Y1), 범죄자(K7)의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뉴스 보도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나타난 북한의 이미지와 중첩되면서 새터민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굳어지고,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신뢰감을 얻는 데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실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우선 불신과 의심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근거없는 의심을 경험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제가 추어탕집에 갔다가 사일 일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주방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자기 슬리퍼를 칼로 잘라 놔다고 그런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주방에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잘라놔다고 하는 거나 같잖아요. 내가 일 끝날 때 그랬

어요. 그 신발 내가 찢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뭐 자기더러 찢었다고 그랬냐 그러면서, 자기는 석달 정도밖에 안 신어서 찢어질리 없는데, 이걸 분명 칼로 찢었다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방에서 끌고 다니는 더러운 신발, 그거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겠는데 누가 그걸 만져서 칼로 찢겠냐고 그랬어요. ... 오늘 신던 흰 신발이 찢어졌는데, 내일은 지갑이 없어지면 뭐라고 할 건데? 돈 지갑 없어지면 나한테 돈지갑도 가져갔다고 말할 거 아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1999년도 탈북)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새터민을 접해보지 않은 대다수의 남한 주민들에게도 작용하여, 새터민에 대한 막연한, 이유 없는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한 새터민은 병원 실습 과정에서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거부감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위축되고 상처 받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병원가면 괜히 또 맡은 사람 대상자들이랑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사투리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은 거부감 굉장히 심한데요. 막 이렇게 학생간 호사가 주사 놔주겠다고 하면 싫다고 그래요. 그런 건 이해되는데, 그런데 아 이 사람들 북한사람이라면 더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 또 더 이렇게 나와서 생각해야하고 하니까.(C6, 여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학생, 2002년도 탈북)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새터민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은 자신 혹은 부모 세대에 경험한 한국전쟁이나 분단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취약계층의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제도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새터민들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터민 지원단체의 한 상근자는 “자기들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하는 짓이 깽판이나 놓고 술이나 먹고 이렇더라”는 것이 새터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자신이 느낀 거부와 적대의 시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들 세금 받아먹고 산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 빠가 회사 자체가 4대 보험 다 되니까, 여기 생계보조비 타먹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투로 얘기하는 사람 많지요. 또 지방에서나 살 것이지 여까지 왜 와가지고 저러냐.(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1999년도 탈북)

북한에서 왔다는 것보다 중국 교포다, 이게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좀 없어요. 어떠한 경우가 있었나하면은, 내가 타일을 하면서 내 오야지가 나이가 나보다 세 살이 어린데, 뭐 술 먹고, 난 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북한에서 온 새끼들 다 때려죽이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오야지가, 그 오야지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구요. ...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들어보면 나름대로 아픈 상처가 있어요. 아픈 상처가 무엇이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6.25때 죽었대요, 북한군한테. 싸우기도 무척 싸웠는데, 그래 새끼야 나 북한사람이다 때려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아픈 상처도 받고. 또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요.(K3, 남성, 39세, 전직 노동자, 현재 건설노동자, 1998년도 탈북)

새터민들을 대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 중에 가장 자주 경험하는,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가장 잦은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무시와 경멸이다. 냉전시대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 가졌던 감정의 핵심이 적대감이었다면,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남한의 상대적 우월감에 기초한 무시, 업신여김이라는 정서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서는 특히 직장에서 새터민이 남한 사람의 상급자로 일하게 될 때 원만한 인간관계와 직장내 팀워크를 해치는 요소가 된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 조직 내의 공식적인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인 새터민이 직장동료들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갈등은 대립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기 쉽다. 새터민들은 직장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내가 시킬 때도 애들이 이놈들이 어떤 때는 만만하게 보고, 막 희롱을 하려고 해요. 젊은 애들이 이상하게 야비한 말을 해요, 한국식으로. ... 북한 사람인데 과장으로 승진했다는데 박수도 안치고 이런 놈들이. 첩엔 과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구. 밑에서 일하다가, 같은 노동자들이 한명, 두 명 부르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K7, 남성, 41세, 전직 도 인민위원회 근무, 현재 전문기술직, 1999년도 탈북)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업무를 내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OO씨는 그 일을 하자면 6개월 정도 지나야 될꺼라고, 저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한은 잘 모르지 않냐고, 남한 헌법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뭐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강렬하더라구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실 헌법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룩하잖아요. 저보고 헌법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인터넷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뭐 처음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강렬

했던지. ... 밥먹다가도 OO씨 노스코리아에 있을 때 고기 먹어 봤어요? 뭐 이러고. 고기 왜 못먹어요? 북한 고기 여기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육고기도 물고기도 여기보다 저기가 더 맛있어요 그럼, 진짜요? 뭐 이러다가. 기분이 좀 나쁘죠.(H4, 여성, 34세, 전직 교사, 현재 사무직, 2003년도 탈북)

또한 새터민들은 직장에서 노골적인 무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와 ‘그들’을 경계 짓고 따돌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감지한다. 따돌림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큰 일이나 사건이라기보다는 휴식 시간에 커피를 같이 마신다든지 간식을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일들이고, 이런 작은 분리와 소외의 경험이 누적되어 전지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

그 마트에 나가서도 가끔씩 저희들끼리 수군수군할 때도 있어요. ... 보면은 카운터에서랑 저희애들끼리 뭘 갖고 와서 한국 사람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거는 아니지만 사람이 기분이 많이 상하죠.(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1999년도 탈북)

왕따란 게 이래요. 누구도 나한테 말을 안 시키는 거. 내가 말하면 누구도 안 들어줘요. 무시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면 같이 싸우면 속이라도 편할텐데,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시켜주지 않고, 질문해도 대답 안 해 준다 하는 거는 그 이상 비참할 수 없어요. 당해 안 보면, 그 이상, 당해, 한 번 살아 보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누구와 싸우는 게 낫다. 그런 시간이 3개월 지나갔어요. 그래서 날마다 울었어요.(K2, 여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학생, 1998년도 탈북)

임금차별을 비롯한 차별대우와 임금체불 등 노사관계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도 직장 내 주요 갈등 요소이다. 이는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속해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데, 새터민의 경우 여기에 새터민이라는 또 다른 범주가 추가된다. L1은 건설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으나 근로계약 없이 구두로 임금을 합의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해고는 그가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으나, 정작 그의 마음에 억울함으로 남아있는 것은 노동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북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점이다.

내가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도 말 통하지 않는 중국사람들한테 가서 일했어도 월급에서도 내가 일 한거만큼 더 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당당한 국적가지고 내가 내 일한 값도 못 받고, 돈보다도 그 소행이 막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동부 찾아갔어요. ...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모른것도 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억울한 대로 그냥 관두고 말았는데, 막 마음이 안내려가는 거예요. 두달 전에 제가 교회에 집 전화로 그 장로님한테 전화하니까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욱해버렸어요. 장로님, 북한사람이라 깔보고 그러냐고. ...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인 걸 안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더라니까요.(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1999년도 탈북)

북한에서는 직종과 업무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간에 기능 수준이나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이는 크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기능 수준과 숙련도, 노동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급되는 남한의 임금 구조는 새터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남한 사람과 자신의 임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터민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도도 갈등의 소지가 된다.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이를 국가가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일환으로 바라본다. 새터민들은 “취업지원금은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니 자신들은 고용주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며, 기업주가 자신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김화순 2004, 84). 서류 조작을 통해 새터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를 착복하는 일부 악덕기업주의 존재가 이러한 인식을 더욱 부채질한다. 반면 기업주가 받아야 할 고용지원금을 새터민에게 지급하는 온정적인 기업주도 있는데, 선한 의도를 가진 이러한 행위는 직장내 남한 노동자들과 새터민간의 갈등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임금이나 근로 형태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장면에서 새터민들은 문화적 차별을 경험한다.

식당일 할 때 사장이 식당이 잘 안되었어요. 근데 그때 조선족 두명, 북한사람 두명 있었거든요. 근데 참 기분 나쁜 게, 유독 딱 저희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면은요 다 보내고 우리 둘 앉혀 놓고요. 인사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뭐도 어떻게 해라고 하고요. 개네 하는 만큼 내가 하는데, 우리가 웃지 않아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참 그거 스트레스 은근히 받더라고요

요.(Y2, 여성, 36세, 전직 노동자, 현재 무직, 2002년도 탈북)

남편이 회사에서요 점심을 먹었는데요. 주말마다 사장이 안나오는 날이면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여기 직원들이 우리 애아빠만 이미 먹던 식당 가라고 하고 저희만 모여서 다섯이 따로 자장면 배달해 먹더라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자장면 값이 천원 더 비싸더라요. 그러다가 석달째 되던 날인가, 월급타고 그 다음날 회식을 했는데, 우리 애아빠가, 내 당신한테 한가지 물어보자, 사장 없으실 때 주말마다 나만 식당에 보내고 당신네만 여기서 자장면을 먹냐. 내 바보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사장이 별떡 이게 무슨 소리냐고. 월급타고 그 다음부터 일 안 나가고 그랬죠.(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1999년도 탈북)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이 새터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들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남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자격지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신변보호담당관의 말은 그런 생각을 대변한다.

북한 이탈 사람들은 남한 사람이 말도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걸로 느끼나 봐요. 편파적으로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일도 안하고 그러면 자기 개인사업인데 일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이탈주민들이 볼 때는 내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느껴져요. … 자기들이 그렇게 차별을 만들죠. 우리가 북에서 왔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나봐.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새터민들은 구조적, 문화적, 일상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과, 새터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히려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잘못된 편견이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는 시각, 이 두 가지 관점은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새터민에 대한 편견의 문제를 새터민의 열악한 사회적 자본과 인성적 특성에 기반해서 이해하려는 새터민 정착지원 자원봉사자들의 시각과,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찰을 전제한 어느 새터민의 시각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남한 주민과 새터민의 관점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본인이 자원이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낮은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은 새터민이라는 것보다 기술이라든지 학력을 충족시키는 게 맞는데, 내가 새터민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 아 이 사회는 치사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자원 봉사자 B2)

당연히 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국 사회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주고 싶지 이제 막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격차이가 아니거든. 자본주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내 장사인거야. 직원을 부려도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원을 부리는 거잖아요.(C1, 여성, 41세, 전직 교사, 현재 초빙강사, 2000년도 탈북)

#### IV. 결론 : 새터민 문화 갈등 해결과 문화 통합의 관점

이상에서 새터민들이 취업과정과 직장생활에서 남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새터민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유형은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과 맥락, 갈등의 요소에 따라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출신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의 갈등이 그 본질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정체성 갈등은 갈등의 요소와 원인이 중층적이며 이해관계 갈등이나 사실관계 갈등과는 달리 객관적인 판단이나 타협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최근에 갈등개입, 갈등해소, 갈등관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갈등변환(conflict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sup>9)</sup> 갈등변환 관점에서는 갈등을 단순히 제거하거나 통제할

8)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은 그 원인에 따라 이해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가치관 또는 정체성 갈등, 인간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 등과 같이 분류된다(박수선 외 2002). 이해관계 갈등은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실관계 갈등은 하나의 사건이나 자료, 언행 등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이다. 가치관 갈등은 신앙, 신념, 문화의 차이, 정체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다. 인간관계 갈등은 서로간의 불신이나 오해로 인해 상호관계가 벌어지는 것이다. 구조적 갈등은 사회의 구조적 요인, 잘못된 제도, 관행,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9) 갈등을 보는 시각과 갈등 해결에 대한 접근법에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갈등개입(conflict intervention)이나 갈등종식(conflict termination), 갈등타결(conflict settlement)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갈등의 역동은 특정한 예측가능한 국면을 경과하면서 사회적 관계들과 구성을 변환시킨다고 본다(Lederach 1995). 갈등변환의 관점에서는 지속가능한 갈등해결과 상호 중립적 관계형성을 위해 갈등의 쟁점과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폭력적 형태의 갈등을 양산해 내는 구조와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갈등은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당면한 갈등의 쟁점에 대한 타협을 넘어서서 갈등 당사자들간에 대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평화는 단순히 일반적인 평온한 상태나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해지는 강압적 질서유지 행위가 아니라, 풍부한 잠재력과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망’이다(히즈키아스 아세파 2005, 17).

새터민이 겪는 문화적 갈등의 해결과 바람직한 통합에 관해서도 이러한 갈등변환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들어 새터민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소수집단과 우리 사회의 주류문화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갈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형태로 표출시켜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 전환의 핵심은 소수 집단의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연결하여 이들의 ‘잠재력과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망’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새터민 적응과 관련된 담론들이 터하고 있는 ‘동화’ 위주의 관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을 단일차원으로 보면 기존의 문화 요소,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릴수록 새로운 문화를 얻게 되고, 기존 문화 요소를 버리지 않을수록 새로운 문화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기존 문화 요소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화를 가장 이상적인 심

---

은 힘과 권한, 또는 전문성이 있는 제삼자의 개입에 의해 갈등적 상황이 종식되는 방식의 해결을 의미한다.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기반하여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때 갈등의 해소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발된 갈등 해소 모델을 다른 상황에서 조정하여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라는 개념은 갈등이 예측가능한 패턴과 역동성을 따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고, 갈등에너지를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개념은 갈등이 지니는 폭력적 가능성의 경감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평화실현의 보다 넓은 의미를 간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리적 문화적응 상태로 본다. 그러나 문화적응을 다차원적으로 보면 기존의 문화 요소를 전혀 버리지 않고도 새로운 거주 지역의 문화 요소를 획득할 수도 있고, 두 문화 요소를 모두 버릴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의 문화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양측 문화를 모두 가지는 통합이 이주자나 기존 주류 사회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적응상태라고 볼 수 있다(채정민 2003, 12-13).

통합은 동화와 달리 자기 문화의 핵심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중요한 면도 받아들이는 적응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특성과 이주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더 큰 사회의 태도와 다른 문화에 대한 가치 수용과도 관련된다(이소래 1997, 213-214). 새터민이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의 해결 과정은 남한 사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문제의 불씨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새터민 자신과 이들 주변의 남한주민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설정해나가는 변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새터민들에게 문화적 폭력을 강요하지 않는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소수집단의 일방적인 순응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남한 사회와 남한 사람들의 異文化에 대한 수용 태도와 관련된다. 남한주민들이 자기자신의 시각에서 새터민이 지니는 ‘차이’를 문제점이나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임태. 2006.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창립세미나 발표자료.
- 김화순. 2004. “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독고순. 199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선 외. 2002.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의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서울대 통일연구소. 2006. “새터민의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보고서 04-자-03.

- 선한승 외. 2005.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양계민 ·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한국심리학회.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 이금순 · 임순희 외. 200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이기영. 2005. “소수자로서의 북한이주민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과제.” 『통일연구』, 제9권 제2호.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 전우택. 2002.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 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6(1).
- 전우택 · 윤덕룡 · 엄진섭. 2003.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 정병호 · 전우택 · 정진경 외. 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 출판부.
- 정진경 ·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 제23권1호.
-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제12집 제2호.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 Lederach, J. P. 1995. *Preparing for Peace: Conflict Transformation Across Cultures*. Syracuse U Pres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s),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New York: McGraw-Hill.